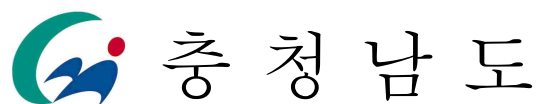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을 위한

민선5기 충남비전

[최종보고서]

2010. 12. 21



| 차 례 |

제1장 계획의 개요	1
------------------	---

1. 계획수립의 배경	3
2. 계획수립의 목적	3
3. 계획의 성격	4
4. 계획의 역할	4
5. 계획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7
------------------------	---

1. 미래사회 메가트랜드	9
① 저인구·초고령화·다문화사회	9
② 세계 초광역 경제권	12
③ 신중세(新中世) 시대	14
④ 기후변화	15
⑤ IBEC융합·초기술	18
⑥ 새로운 안보이슈 등장	21
2. 한국의 여건전망 및 과제	23
① 저출산 및 총인구 감소	23
②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	24
③ 다민족사회로 진전	25
④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27
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증대	28
⑥ GDP 및 구매력의 급속한 증가(2010-2015)	29

제3장 비전과 전략	31
------------------	----

1. 충남의 여건과 전망	33
① 충남의 여건과 과제	33
② 충남의 위상과 잠재력	43

③ 충남의 미래전망	44
2.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57
① 외생적 발전전략의 성찰	57
② 신지역주의의 대두	57
③ 신내생적 발전전략의 대두	58
3. 비전과 전략	60
① 비전(Vision)	60
② 목표	60
③ 도정방향	61
④ 8대 역점과제	63
⑤ 전략	64
⑥ 2020년 달성지표	66

제4장 분야별 사업계획 67

1.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69
① 여건변화 및 과제	69
② 비전과 전략	75
③ 전략별 정책과제	77
④ 정책지표	81
2.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경제 육성	82
① 여건변화 및 과제	82
② 비전과 전략	90
③ 전략별 정책과제	93
④ 정책지표	100
3. 선진국형 맞춤형복지 실현	101
① 여건변화 및 과제	101
② 비전과 전략	107
③ 전략별 정책과제	110
④ 정책지표	118
4.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119
① 여건변화와 과제	119
② 비전과 전략	126
③ 전략별 정책과제	129

④ 정책지표	136
5.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137
① 여건변화와 과제	137
② 비전과 전략	144
③ 전략별 정책과제	147
④ 정책지표	152
6.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조성	153
① 여건변화 및 과제	153
② 비전과 전략	163
③ 전략별 정책과제	167
④ 정책지표	176
7. 사람중심 생활공간 조성	177
① 여건변화 및 과제	177
② 비전과 전략	184
③ 전략별 정책과제	187
④ 정책지표	193
8. 지속가능한 환경 창출	194
① 여건변화 및 과제	194
② 비전과 전략	200
③ 전략별 정책과제	203
④ 정책지표	211

제5장 계획의 실현방안 213

1. 재원확보방안	215
① 충남재정의 현황	215
②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및 확충방안	220
③ 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기조	225
2. 창의적 도정운영과 리더십	226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	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	226
③ 리더십의 개념 및 유형	228
④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형 : 주민주도 거버넌스	228
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리더십 : 가치창조적 리더십	229

제1장 계획의 개요

계획수립의 배경

계획수립의 목적

계획의 성격

계획의 역할

계획의 범위 및 방법

1. 계획수립의 배경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정의 능동적 대응

- 21세기에 들어와 환경과 자원문제 심화,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글로벌화,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등에 충남도정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정방향과 전략마련 필요성 대두

■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도청신도시 건설 등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충남도정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충남도정의 운영기틀 마련

- 민선5기의 출범에 따라 제정한 새로운 도정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도정운영 기틀 마련 요구

2. 계획수립의 목적

■ 충남도정의 중장기 발전비전과 전략 제시

-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충남도정이 2020년까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민선5기 충남도정이 지향해야 할 전략을 제시

■ 민선5기 부문별 전략과제 제안 및 효율적 추진방안 제시

- 민선5기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를 제안하고, 전략과제별 효율적 추진방안 제시

3. 계획의 성격

■ 전략계획

- 민선5기 충남도정의 중장기 목표설정과 목표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계획

■ 정책계획

- 민선5기 충남도정이 지향해야 할 전략과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4. 계획의 역할

■ 민선5기 충남도정의 방향설정

- 민선5기 충남도정의 중장기 목표설정과 목표실현을 위한 방향설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전략과제 및 도정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

- 민선5기 충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과제 및 시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정보 제공

5. 계획의 범위 및 방법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 2011~2020(10년간) : 민선5기(2011~2014), 2020년으로 구분
- 공간적 범위
 - － 충청남도 전역
- 내용적 범위
 - －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 － 비전과 전략
 - － 분야별 사업계획(자치행정, 지역경제, 복지, 농수산업, 교육, 문화관광, 건설교통, 환경)
 - － 계획의 실현방안

■ 계획수립의 방법

-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 － 정부 및 국책연구원 발간 자료
 - － 통계청 통계자료 활용
- 비전과 전략
 - － 충남의 여건변화와 전망을 통해 과제제시
 - － 과제를 토대로 비전과 목표제시
 -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추출
 - － 전략별 정책과제 도출
- 정책과제의 도출
 - － 과제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선정기준 마련
 - － 민선5기 도정기조와 부합성, 도민요구와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사업파급효과의 광역성

제2장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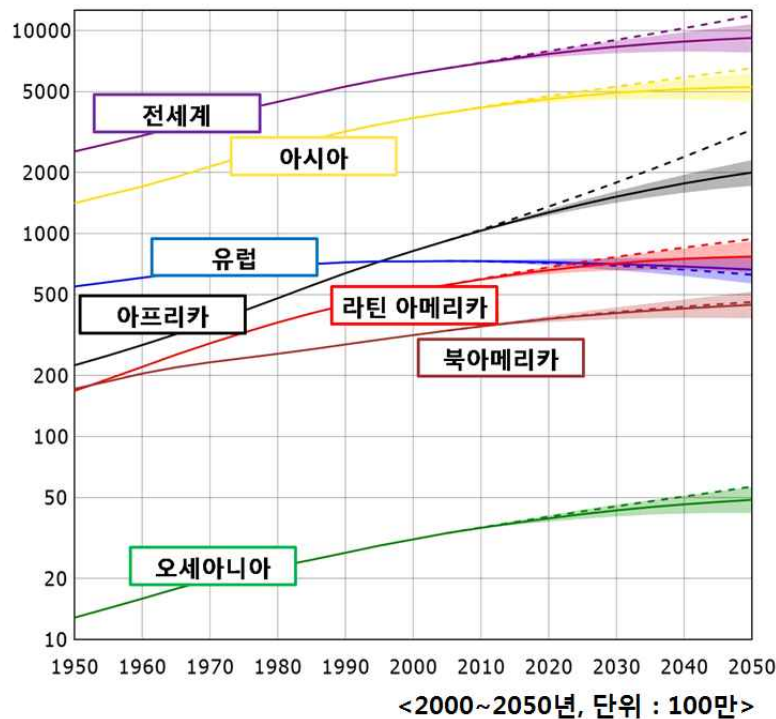
미래사회의 메가트랜드

국내여건 전망 및 영향

1. 미래사회 메가트랜드¹⁾

① 저인구·초고령화·다문화사회로 진입

- 인구분포의 양극화 현상
 - 2009년 약68억명인 세계인구는 2050년 경 90억명을 넘어설 전망
 - 선진국의 인구감소(현 12억명에서 소폭증가) 및 개도국의 인구증가(현 45억명에서 79억명으로 증가)
 - 아프리카는 2050년 현재 인구의 두 배, 아시아에서 전 세계 신생아의 60% 출생하여 향후 전 세계 인구성장 주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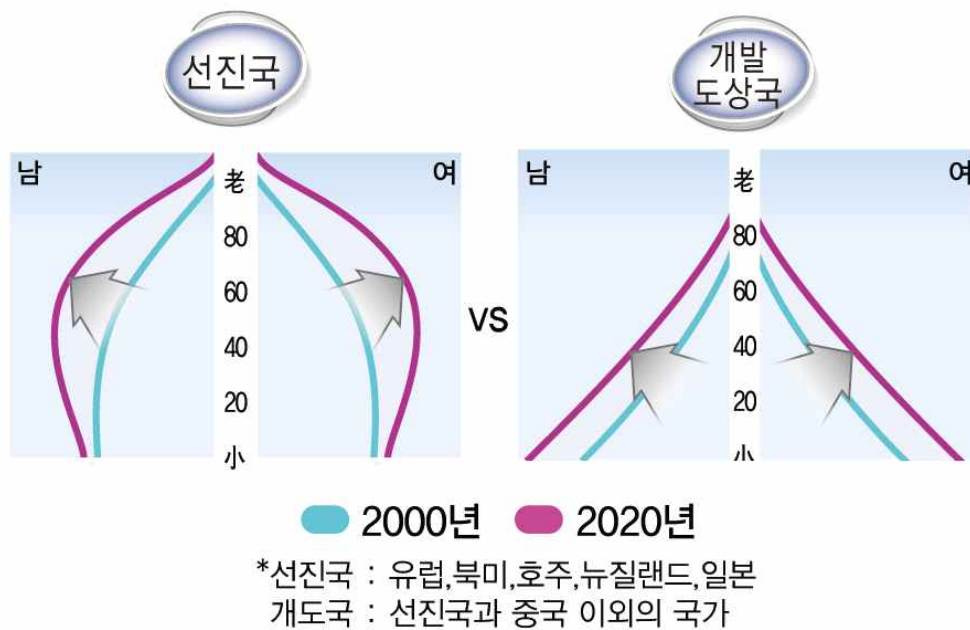


[그림 2-1-1] 대륙별 인구전망(UN)

1)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Grand Vision 2050, 2009.3;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미래비전, 2010.10.

○ 인구구조 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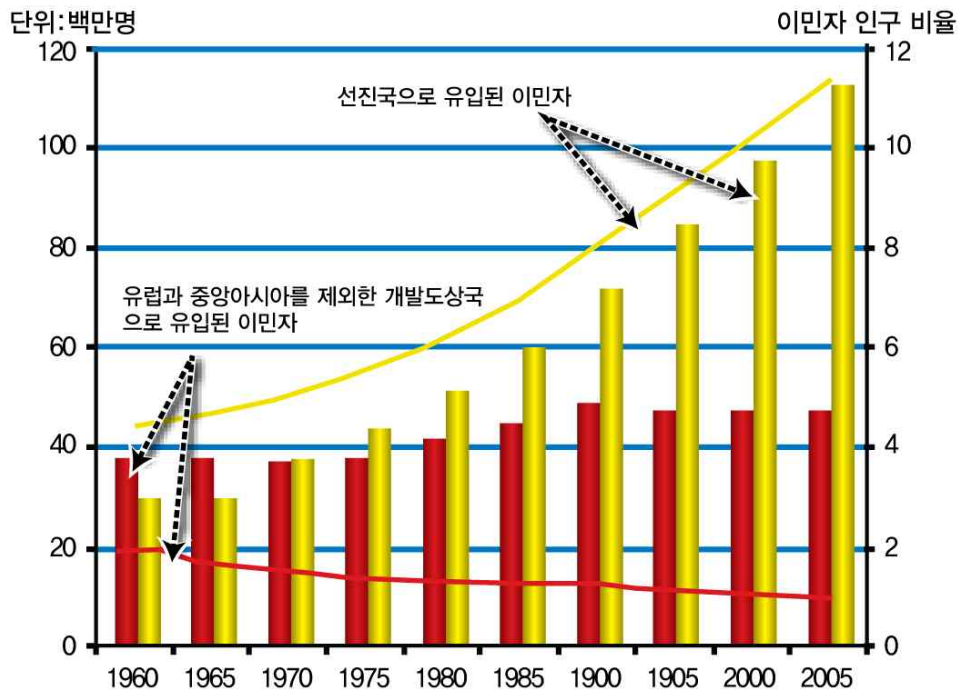
- 선진국의 고령화와 개도국(단, 중국제외)의 청년화라는 상반된 트렌드
- 선진국은 잠재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 출산장려와 여성인력 활용, 입국이민 장려와 같은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 추진 중요
- 개도국에서는 청년화 현상으로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거나, 사회 갈등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



[그림 2-1-2]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구조(UN)

○ 이주노동 및 국제결혼 등 국경을 초월한 사회의 도래

- 세계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지리적 범위가 국가 단위에서 글로벌 단위로 확대
- 단순생산직 등 저임금 인력은 증가하나, 창의적 고급인력은 부족해질 전망
- 고급 인력시장에서는 우수 인력 부족으로 글로벌 인재 전쟁 전개가능성
- 개도국에서는 우수 인재들이 취업이민을 통해 선진국으로 빠져 나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 현상 발생
- 고령자의 인생 다모작 및 취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 및 외국인이 고위직을 점유하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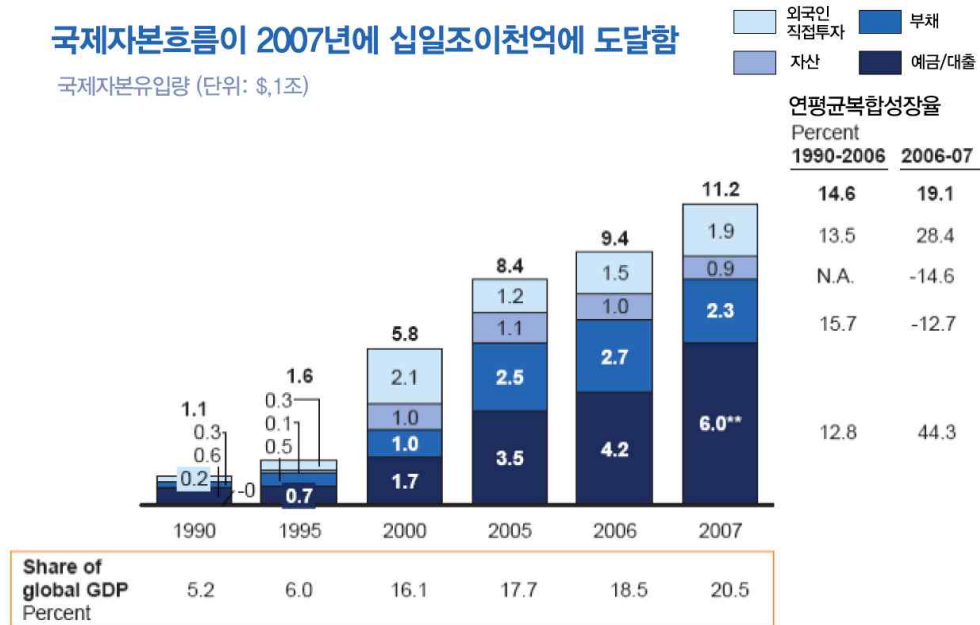
[그림 2-1-3]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민자 수 추이(World Bank)

○ 급속한 가족변화가 발생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과 사회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어나고, 노동시장 중심이 변하게 되면서 가족 변화로 이어짐
- 문화적 측면에서 가족 내에서도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민주성과 자율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로 진화하기 시작
- 가족구성원의 개인화, 가족제도의 해체, 여성의 탈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가족이 등장
- 평균수명 연장으로 독립적 생계를 꾸리는 고령자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고 1인 고령자 인구 증가
- 가족구성원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거주할 것이며, 일생동안 두 세번 결혼하고, 다양한 인종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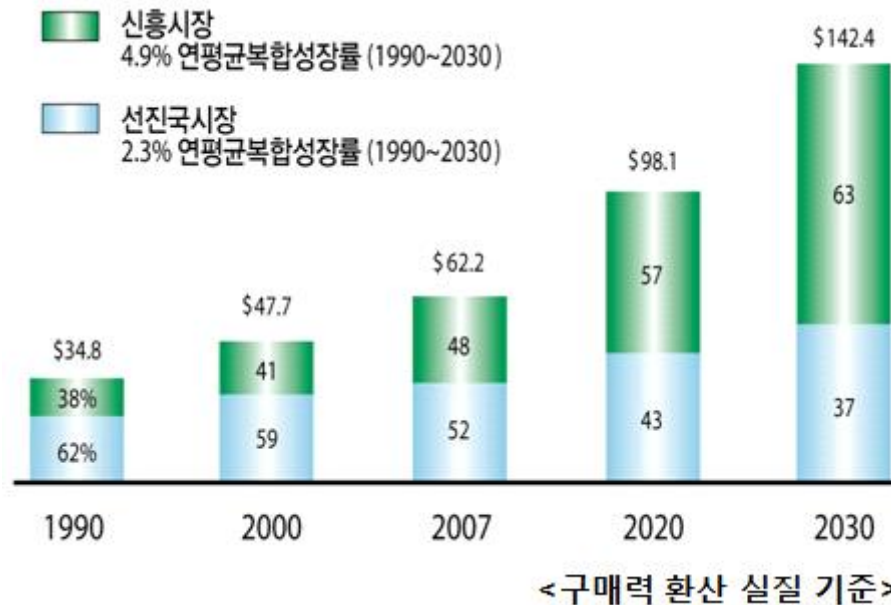
② 세계 초광역 경제권 형성

- 세계화의 지속적 진전
 - 단일시장으로의 통합과정 지속으로 전지구적 시장경제의 출현
 - 국경을 초월한 초국적 기업 중심의 연대 확산



[그림 2-1-4] 국제 자본이동액 추이

- 다극화체제 및 아시아 급부상
 -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가 미국중심의 단일 성장기축국 체제에서 다극화체제로 변모 전망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CHIME(중국, 인도, 중동), MAVIS(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다극화
 - 신흥국 기업들이 정부 및 국부부펀드의 지원 하에 선진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압축성장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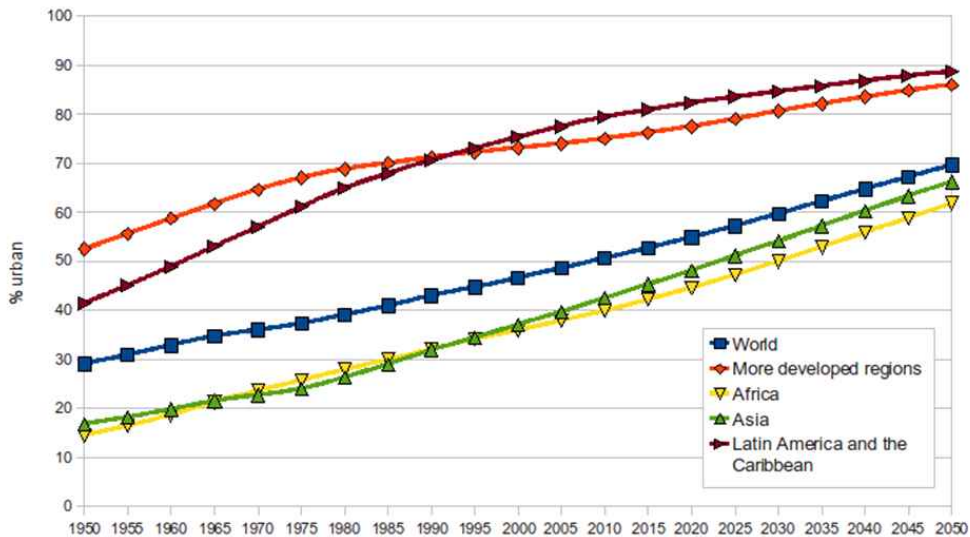
[그림 2-1-5] 신흥국-선진국의 세계 GDP 비중 변화전망

- 3극 경제블럭화
 - 북미경제공동체, 유럽연합경제권, 아시아연합경제권의 3극체제로 재편
 - 각 경제블럭은 인구 5-7억명, GDP 100천억 달러 이상의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지식기반 및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
 - 지식기반 경제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 정착되면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
 - 산업구조에서 지식(정보통신 서비스, 컨설팅, 기업전문서비스) 및 서비스산업(금융, 교육, 법률, 의료, 복지, 문화 등)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전망
 - 지식주도형 선진국과 첨단 제조 중심의 기타 국가로 양분, 국가간 지식에 의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
 - 전체 산업은 산업간, 혹은 비즈니스간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네트워크형 산업구조로 변모

③ 신중세(新中世)²⁾ 시대 도래

○ 도시화 국가시대 도래

- UN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인구는 2007년 50%를 넘어서고, 2010년에는 약35억명, 2030년에는 49억 6천만명으로 도시인구 비중이 60%까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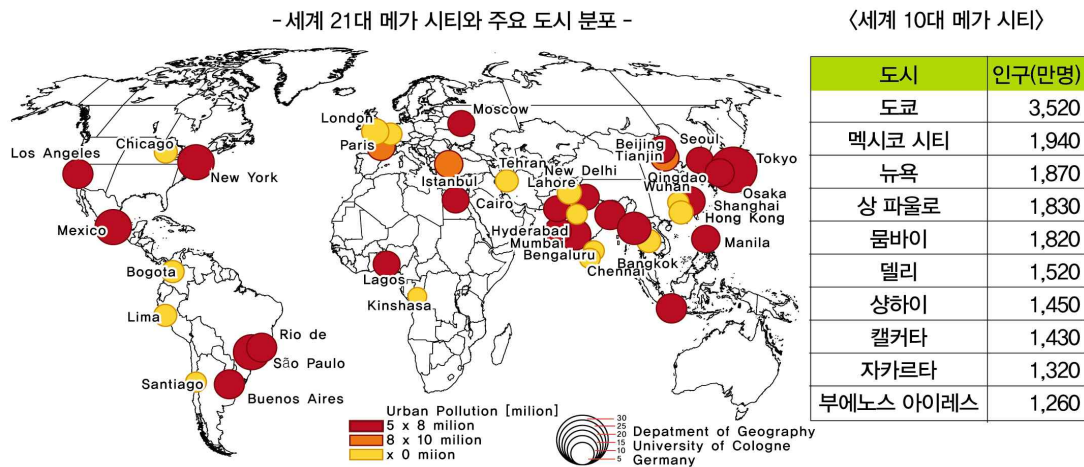


[그림 2-1-6] 세계 도시화 추이 및 전망(UN)

○ 메가시티(megacity)의 부상

-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현재 21개에서 50년 2배 이상 증가하여 상업, 문화, 지식, 산업의 중심지로서 발전의 중핵이 될 전망
- 메가시티간 금융, 상업, 문화, 정보, 산업 등 글로벌 경쟁을 위한 경쟁이 더욱 뚜렷할 전망

2) 국경의 의미가 나날이 퇴색하는 가운데 도시나 지역 혹은 권역이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재부상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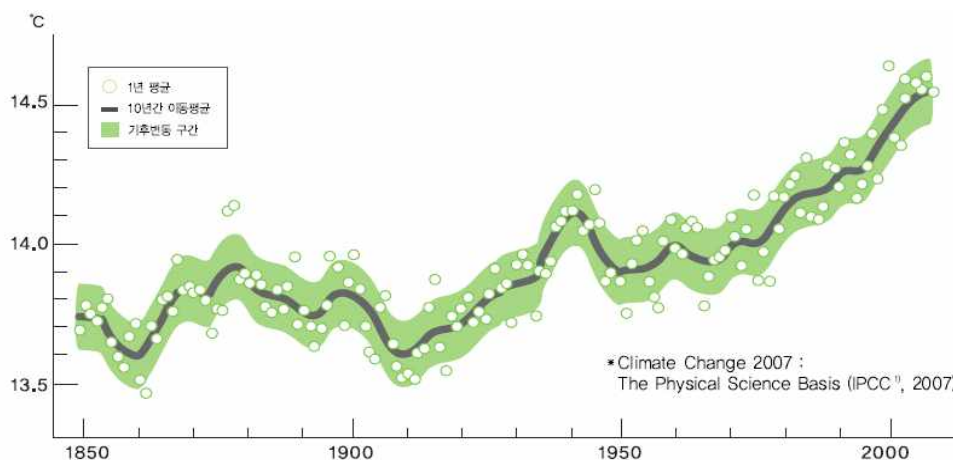


[그림 2-1-7] 세계 주요 메가시티 현황(독일 쾰른 대학)

- 다양한 도시유형의 출현
 - 압축도시, 에너지고효율도시, 수직도시, 부유하는도시 등 다양한 형태 도시출현

4] 기후변화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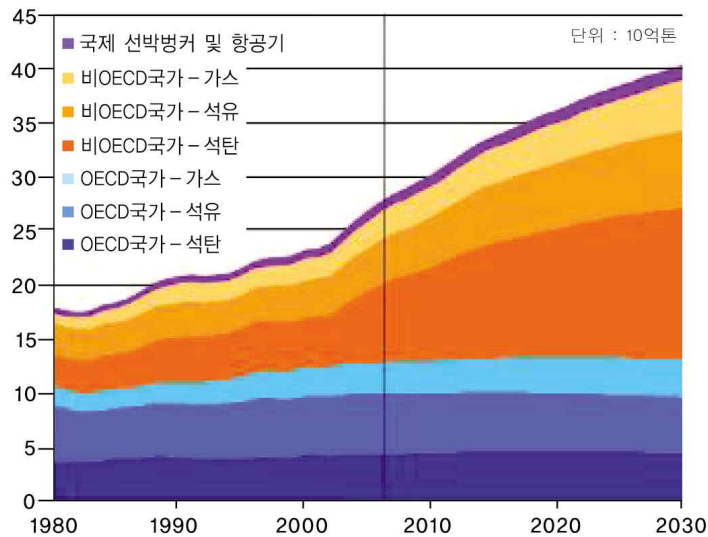
- 지구온난화 가속
 - 산업화와 도시화가 확대되고,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의 증가로 온난화와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지난 100년(1906-2005)간 전 세계 기온은 0.74℃ 상승, 지난 12년(1995-2006)은 1850년 이래 가장 무더운 기간으로 기록



[그림 2-1-8] 세계 주요 메가시티 현황(독일 쾰른 대학)

○ 온실가스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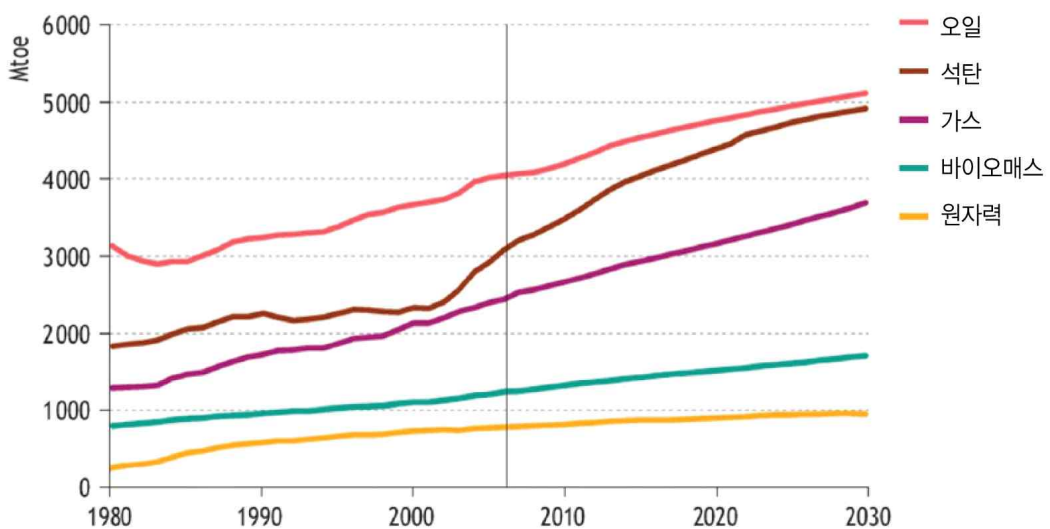
- 2030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전망
- 2100년 무렵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금보다 최고 6.4℃까지 상승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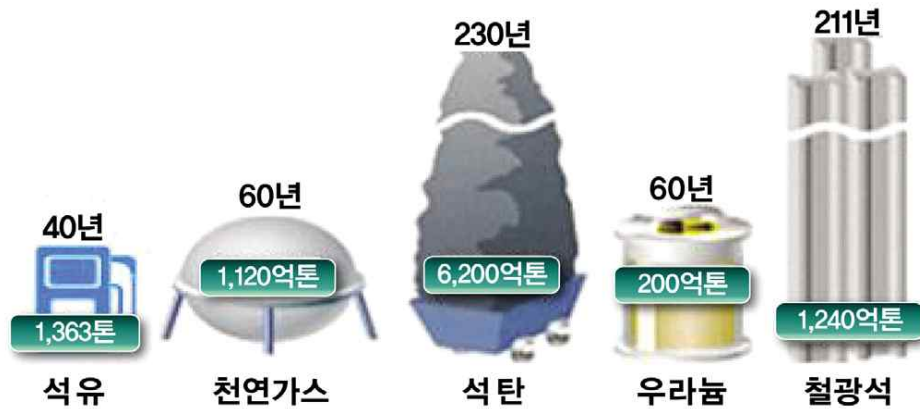
[그림 2-1-9]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전망

○ 주요 자원의 고갈

- 선진국의 삶의 질 제고, 중국 및 인도 등의 급속한 산업화가 맞물리면 21세기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석유 40년, 가스 60년, 석탄 230년, 우라늄 60년 후 고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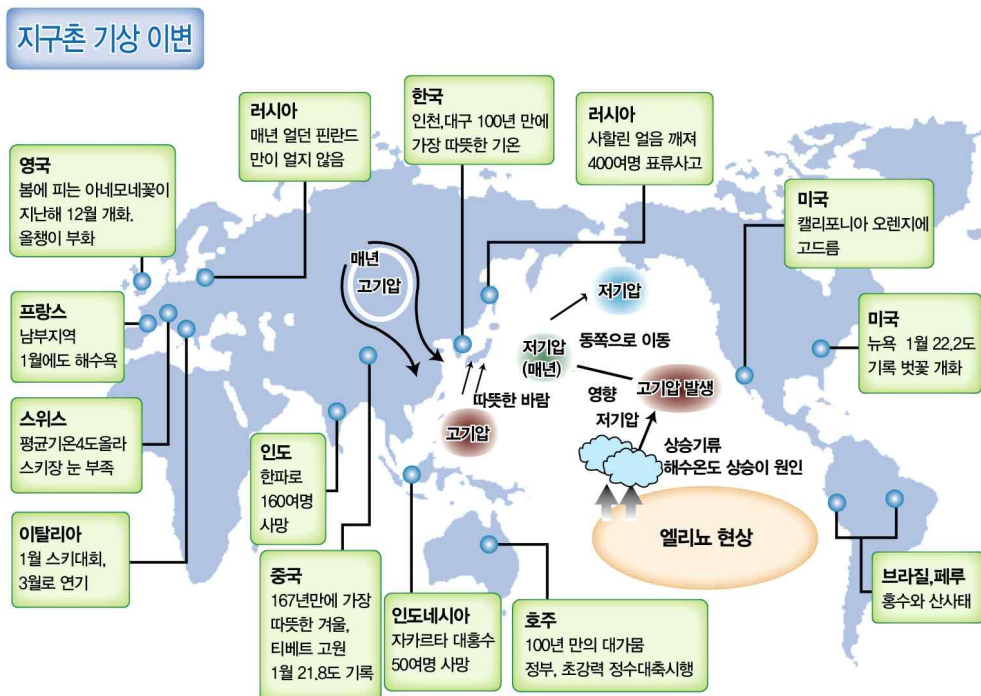


[그림 2-1-10] 에너지원별 수요예측



[그림 2-1-11] 에너지원별 채굴 가능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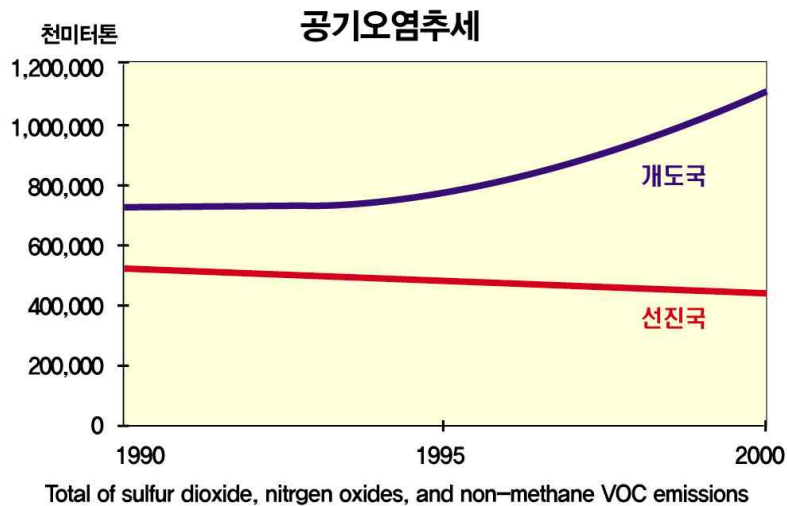
-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
 - 2050년 물부족 인구는 24.5억명에 이를 것임
- 대형 재해가능성 증대 및 생물종 감소
 - 가뭄과 홍수,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악화



[그림 2-1-12]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영향

○ 환경오염의 양극화

- 선진국은 환경오염 위협을 인식하고, 다각적 노력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환경오염을 통제 및 저감시킬 것임
- 개도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오염을 용인하게 되고, 해당지역의 오염수준이 크게 악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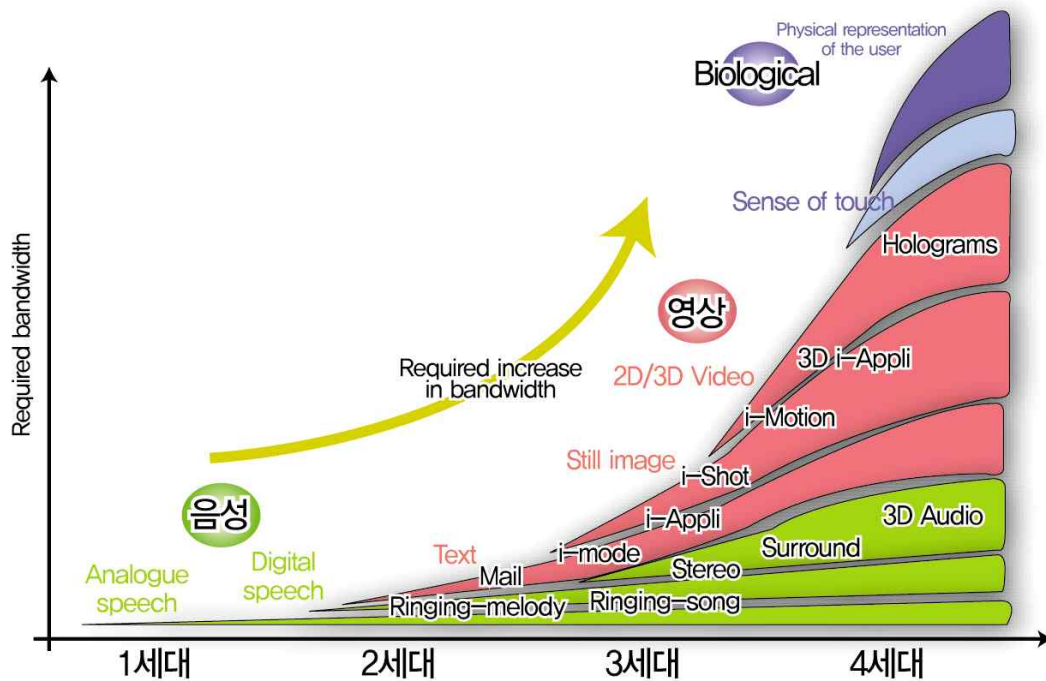
[그림 2-1-13] 선진국, 개도국의 대기오염 추이

5 IBEC³⁾ 융합·초기술의 발전

○ 융합사회(Fusion Society)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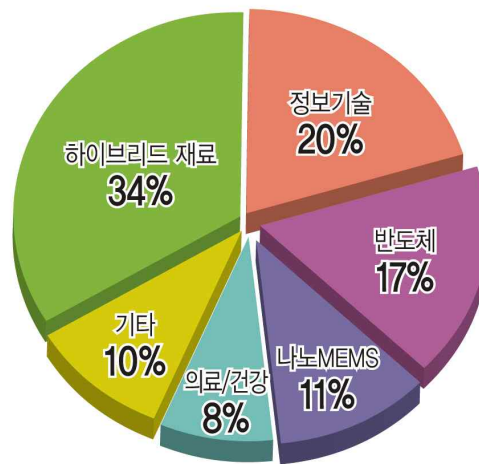
- IEBC초융합 통합체계 실현으로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문화, 가치관에도 변화 전망
-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은 더욱 발전하며, 각종 통신 및 정보서비스의 품질개선으로 연결
- IEBC초융합은 웹 2.0과 유비쿼터스 사회를 넘어 지식기반 사회로서 세계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할 전망

3) IT(정보산업), BT(바이오산업), ET(에너지기술산업), CT(문화산업)



[그림 2-1-14] 이동통신기술 발전전망

- 바이오 경제시대의 도래
 - 세계경제의 중심을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에서 바이오 경제로 이동
 -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2005년 6,000억 달러에서 2010년 1,000억 달러로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이 전망됨
 - 2030년 OECD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바이오 관련 시장은 1조 620억 달러로 예상
- 21세기의 연금술 나노기술의 발전
 - 마이크론보다 더 작은 나노단위에서 물질을 조작하는 나노기술은 반도체 집적, 의학, 신물질, 이차전지, 신약전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가능
 - 나노기술 관련 시장은 2009년 약 2,500억 달러에서 2015년 약 2.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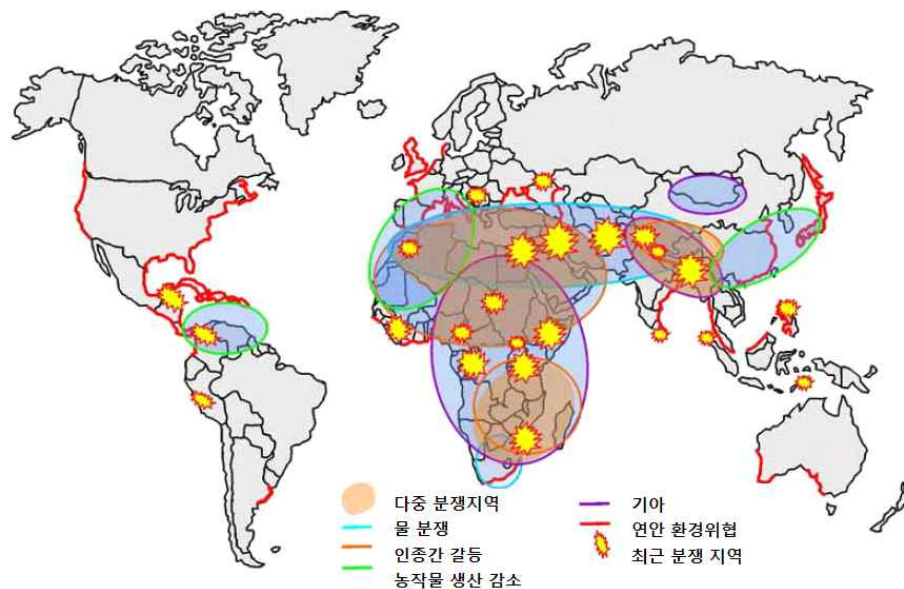


[그림 2-1-15] 나노기술 경제의 현황

- 로봇의 상용화
 - － 노동시간의 50%가 로봇으로 대체, 2025년 로봇시장의 규모가 800억 달러에 이를 것
- 우주시대 개막
 - － 우주분야는 2015년 4,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중국은 2040년까지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낼 전망
- 초기술 이동수단 및 신종 건축물 등의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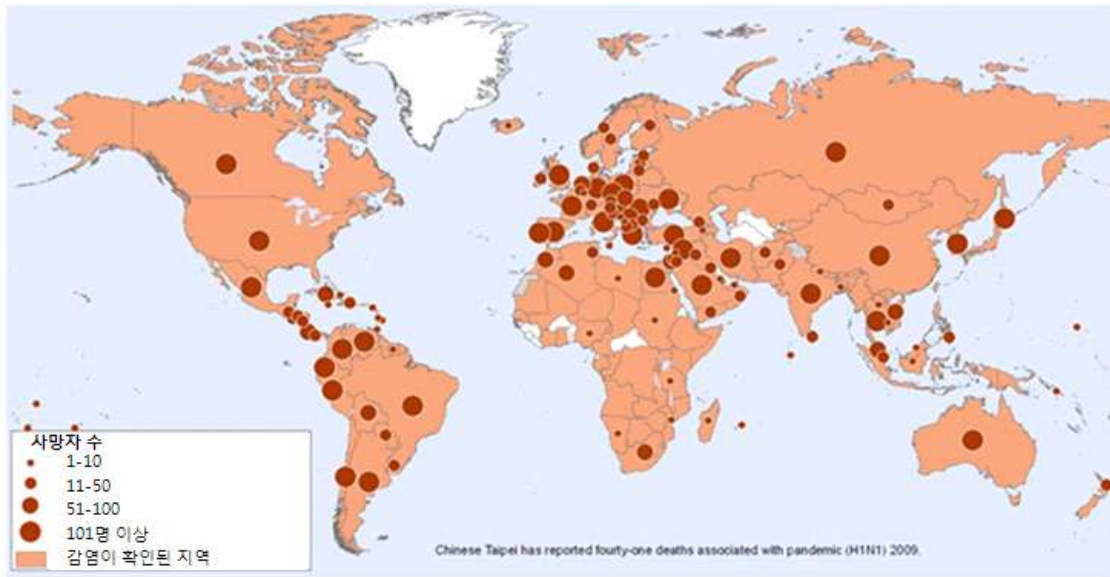
⑥ 새로운 안보이슈 등장

- 종교적·문화적·역사적 갈등의 지속
 - － 종교간 혹은 문명간 충돌과 이로 인한 상호작용은 냉전시대 종식 이후 점차 대두
 - － 세계화에 따른 교류 증가로 인해 문명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충돌도 증가



[그림 2-1-16] 지구촌 주요 분쟁지역 및 요인

- 새로운 전염병 위협의 대두
 -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약 3년 동안 총40여종의 전염병 병원체가 추가로 확인
 - － 대량 가축사육시설의 비위생적 환경에서 인간과 동물의 바이러스가 서로 섞여 인수공통의 신종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음
 - － 1919년 스페인독감과 1958년 아시안 독감은 영국에 각각 16.9%, 3.3%의 GDP 손실을 야기하였고,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286명에 달함
 - － 새로운 질병의 확산은 국제여행의 증가, 저개발국 국민의 영양결핍, 열악한 위생상태, 인구 밀집지역의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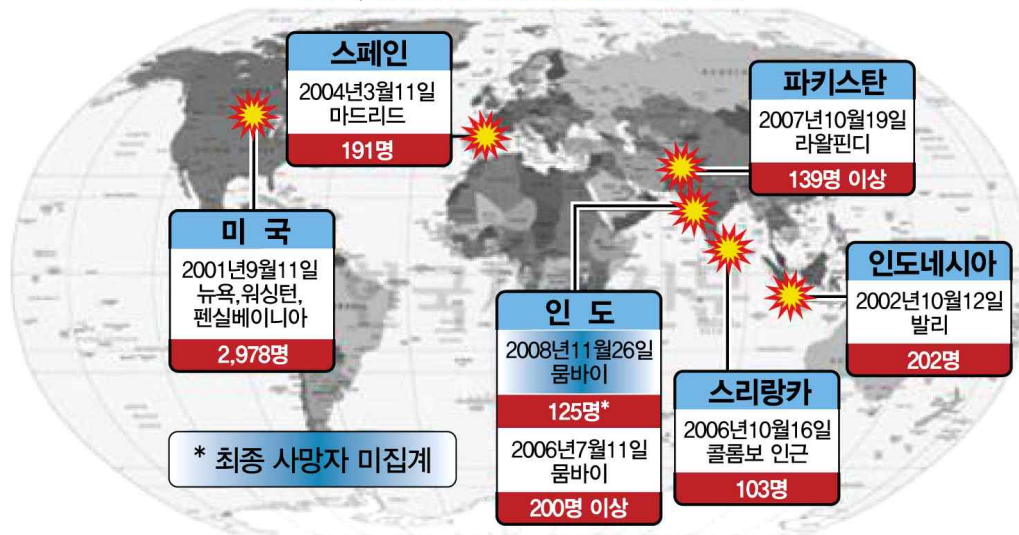


[그림 2-1-17] 2009년 신종플루 발생국가 및 사망자수

○ 테러위험의 증가

- 21세기 들어 테러무기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는 추세
- 테러의 지리적 범위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가능성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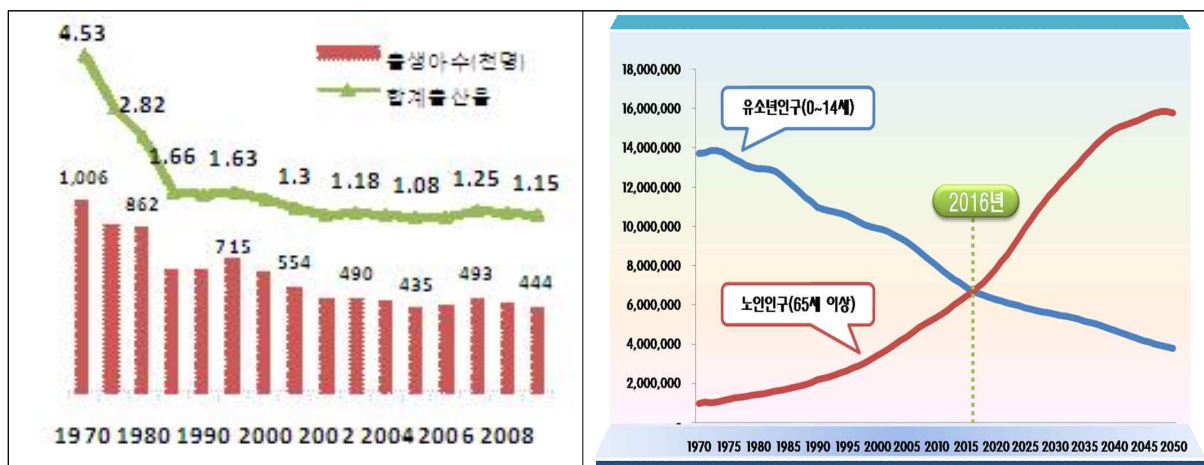


[그림 2-1-18] 9.11 테러이후 세계 테러일지(재경일보)

2. 한국의 여건전망 및 과제

① 저출산 및 총인구 감소

- (현황)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 지속
 - 20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미국 2.12, OECD평균 1.71, 우리나라(2009년) 1.15
- (전망)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추세로 반전 전망
 -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 2016년 유소년 인구(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65세 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38.2%)에 육박, 국가운영 자체에 문제 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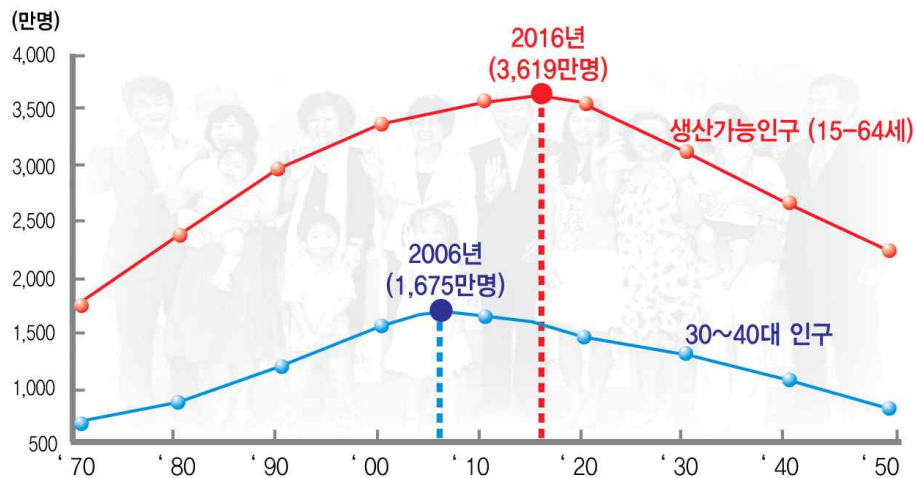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06), 각 연도 출산동향

- (영향) 성장잠재력 약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
 - 노동력 질과 양 저하 및 소비위축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소비•투자위축 등으로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노동력의 질이 현저히 저하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42만명씩 2050년까지 1,377만명 감소

-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으로 내수 위축논
- 이로 인해 204-50년 잠재성장률은 1.4%수준으로 하락예산(KDI, 2007)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
 - 저출산 및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기반이 감소
 - 학령인구 감소로 각급 학교 구조조정
 - 군입대자원 감소로 군인력 축소
 - 1인가구 등 증가로 주택수요가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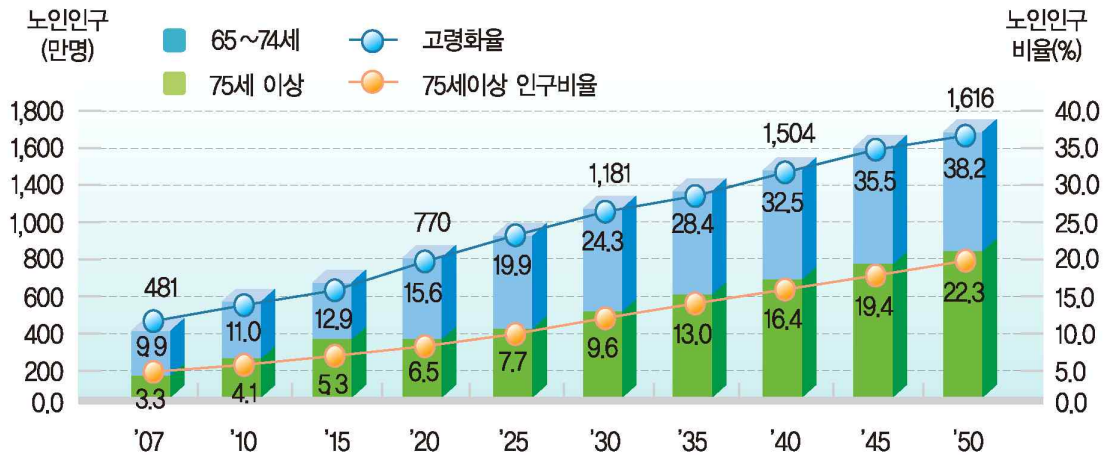


[그림 2-2-1]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추이전망

②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

- (현황)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1% 차지
 - 2010년 노년부양비는 15.0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6.6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는 수준
 - 2009년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27.6%로 2005년에 비해 11.5%상승
- (전망)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사회적 지출 증가 전망
 - 노인인구는 2010년 536만명에서 2030년 1,181만명, 2050년 1,616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노인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30년 10가구 중 3가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38.2%)에 육박, 국가운영자체에 문제 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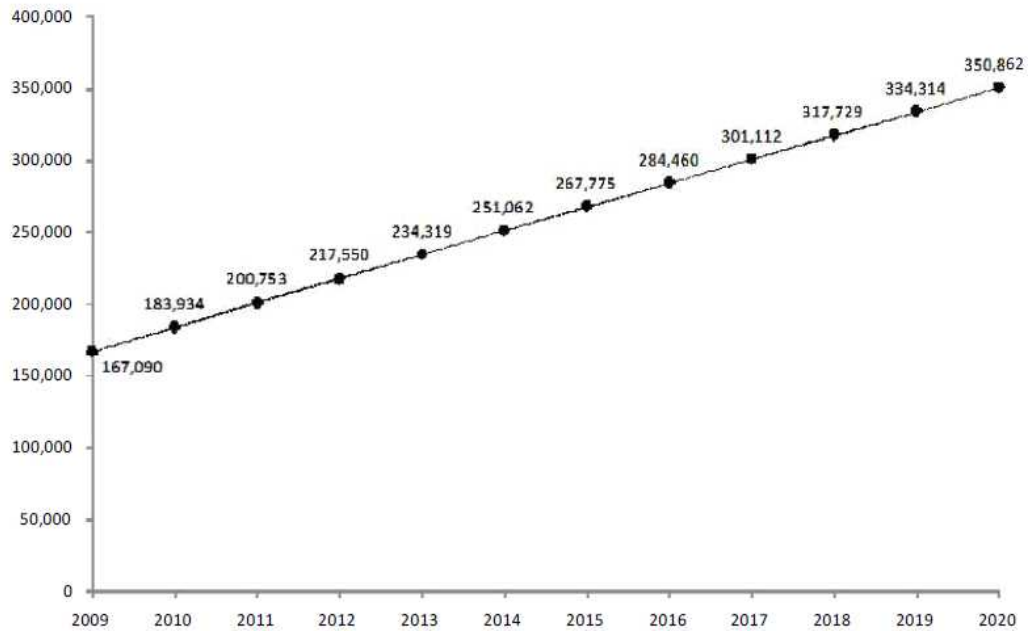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2006)」, 「2007 고령자 통계」

- (영향) 사회적 부담 및 노인자살자 수 급증
 -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등 부담증가로 세대간 갈등 야기
 -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저하
 -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과 노후대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 공적연금 수급자 및 건강보험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 사회적 활력의 저하, 노인관련 재정지출 증가
 - 노인자살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80세 이상은 3배)
 - 독거노인이 늘고 노후 경제적 부담 등이 자살률 증가요인으로 작용

3] 다민족사회로 진전

- (현황) 2009년 국내 외국인인 111만명이며, 다문화가족 가구수는 167,090명임
 - 결혼이민자가 125,673명, 혼인귀화자 41,417명
- (전망) 다문화가족 가구 수는 2020년 351천명으로 증가 전망
 - 남성결혼이민자는 2020년 39천명, 여성결혼이민자는 312천명으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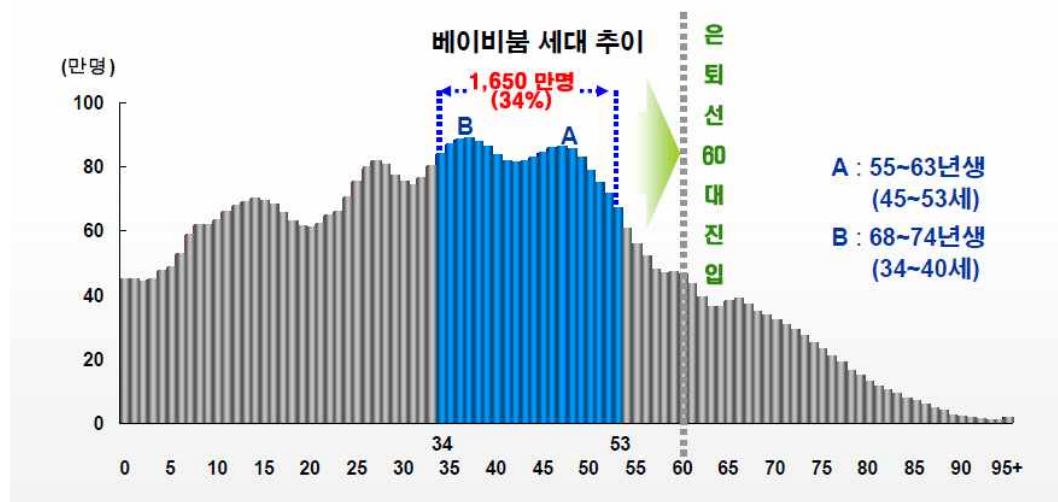


○ (영향)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문화적 다양성 고취효과

- 경제적 편익과 비용
 - 일자리소득, 기술혁신산업구조 조정
- 사회적 편익과 비용
 - 세계도시, 게토(ghetto)화, 사회적 격리에 따른 비용증가
- 문화적 편익과 비용
 - 문화다양성, 문화적 배제 또는 갈등
- 정치적 편익과 비용
 - 정치참여 증대
- 연쇄이민의 편익과 비용
 - 가족이민, 이민의 장기지속

4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 (현황)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생(A)과 1968~1974년생(B)으로 1,6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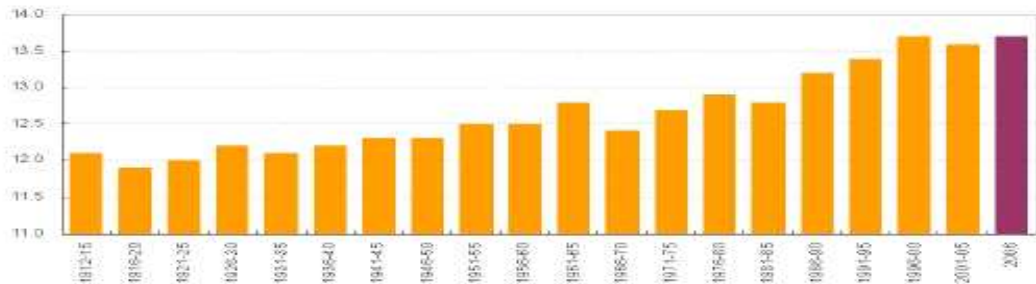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2009.

- (전망)교육, 주택, 노동 등 각종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켜왔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5~10년 이내 시작되어 내수위축, 저성장, 양질의 노동력 부족 등 사회 다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영향) 주택시장, 소비,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침
 -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들어 주택보유가 늘어나면서 50대에 최대보유, 60대 들면서 감소 : 대략 35-54세를 주택매입세대로 볼 수 있음
 - 내수소비 위축(소비)
 -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수준
 - 취업경쟁 완화(고용)
 - 베이비붐세대 약진으로 그 앞 세대가 조기 강제퇴직하는 등 직업안정성 취약
 -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퇴장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직업안정성이 제고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증대

○ (현황)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발생

-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가 증가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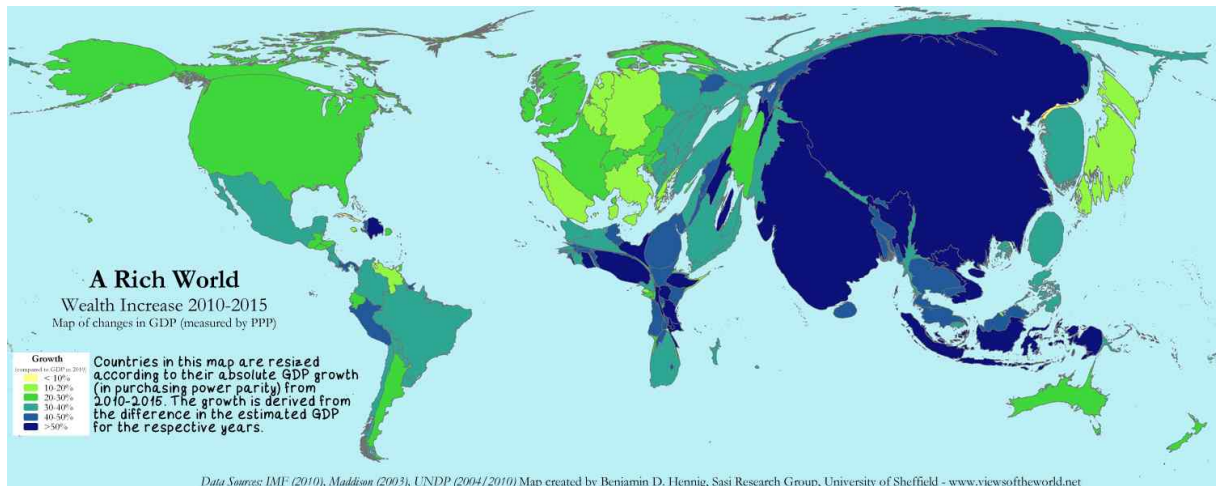


우리나라 평균기온(1912-2006)

- 열파·가뭄·홍수의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였으며, 바람·강수량의 유형교란 등 물리·생태계 전반의 심대한 변화
- (전망) 21세기에는 기후변화 가속화 전망
 -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 사용시 금세기 말까지 지구평균 기온 최대 6.4°C, 해수면 59cm 상승 전망
- (영향) 생태계, 산업·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 한반도 기온상승 및 강수량 증가
 - 산림생태 : 기존 산림생물들이 고사되거나 고립되는 등 멸종위기에 처함
 - 수자원부문 : 태풍 등 기상이변의 빈도와 피해증가(경제적 피해규모 2000년 이후 2.7조원대로 확대)
 - 건강 :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인한 초과사망자수는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에 비해 2배,
 - 해안 : 전체적 평균 해면 상승은 연간 1.0-0.6cm로 연안지역 침수가능성 증가
 - 해수온도 : 1968년-1997년 30년동안 동해 0.62°C, 남해는 0.61°C, 서해는 0.88°C상승으로 비브리오균 등 미생물 증식, 해수나 해산물 통한 질병발생 가능성 증대
 - 산업·경제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 화석연료 고갈 :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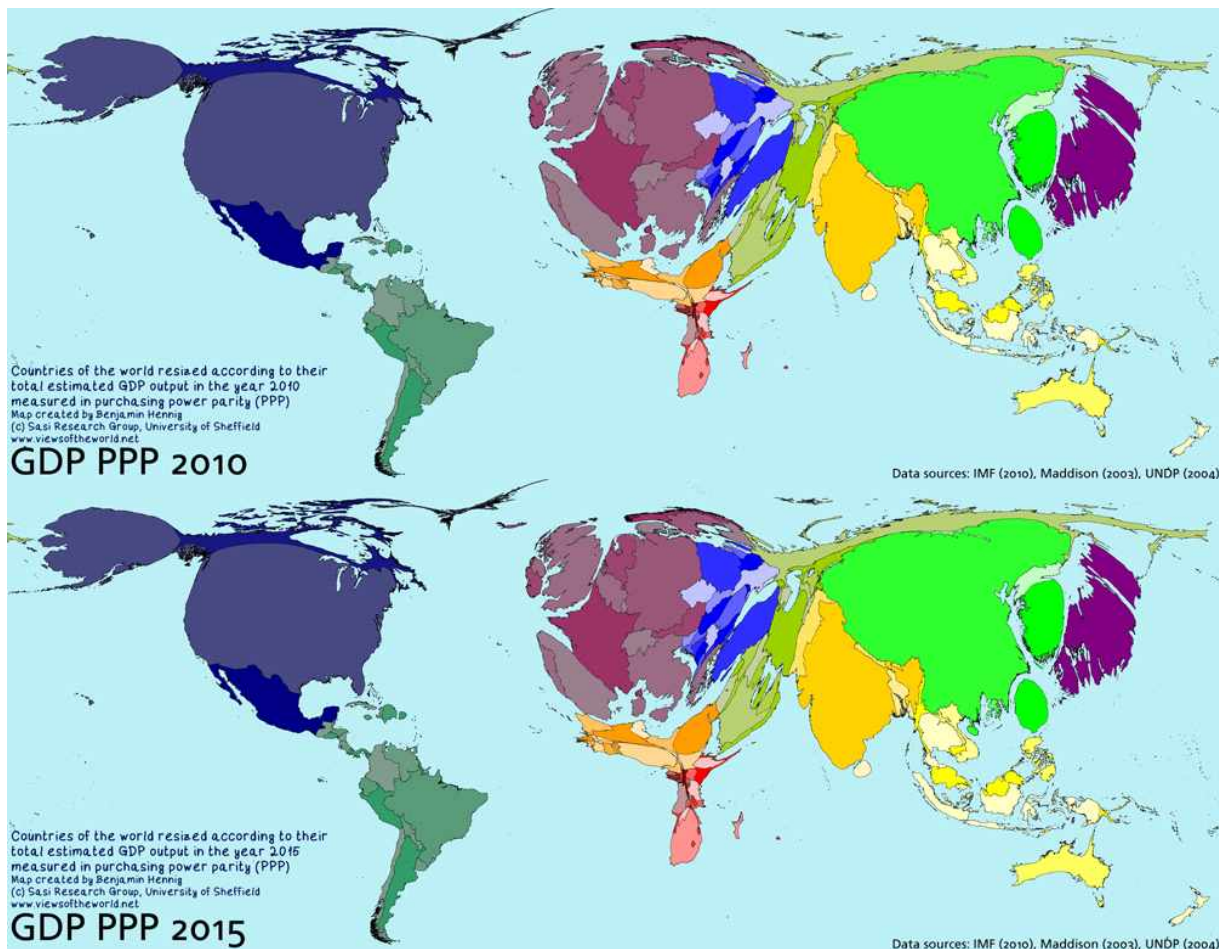
⑥ GDP 및 구매력의 급속한 증가(2010-2015)

-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의 Research Group의 세계 GDP 성장률 도면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에 비해 30-40% 증가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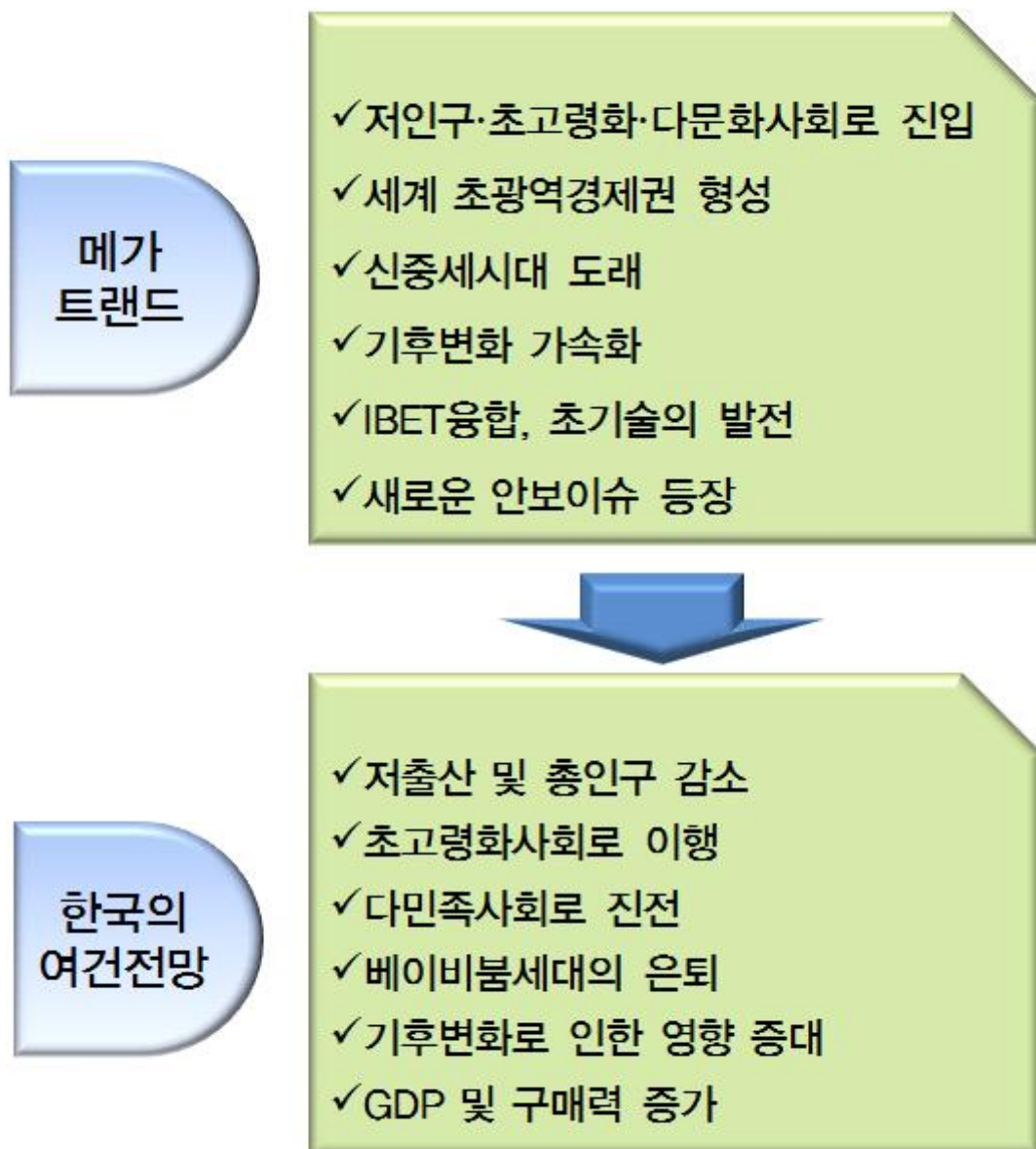
자료 : worldmapper, <http://www.viewsoftheworld.net/>

[그림 2-2-2] GDP의 변화를(2010-2015)



[그림 2-2-3] 구매력 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

<메가트렌드와 한국의 여건변화>





제3장 비전과 전략

충남의 여건과 전망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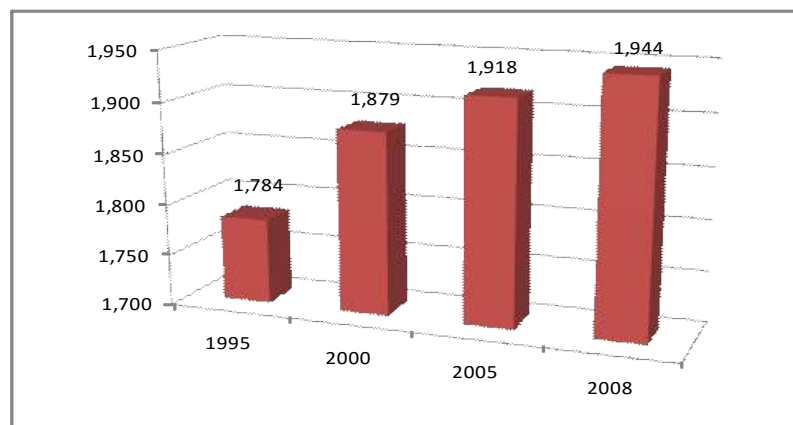
1. 충남의 여건과 전망

① 충남의 여건변화

가. 인구 및 가구

- 완만한 인구증가 추세와 전국 대비 4.0% 수준의 인구규모 유지
 - 2008년 현재 충남의 인구는 1,944천명임. 이는 1995년의 1,784천명과 비교할 때 연평균 0.69% 증가한 것임
 - 한편 충남의 인구규모는 전국 대비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에서 인구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향후 충남지역은 다른 비수도권과 달리 인구증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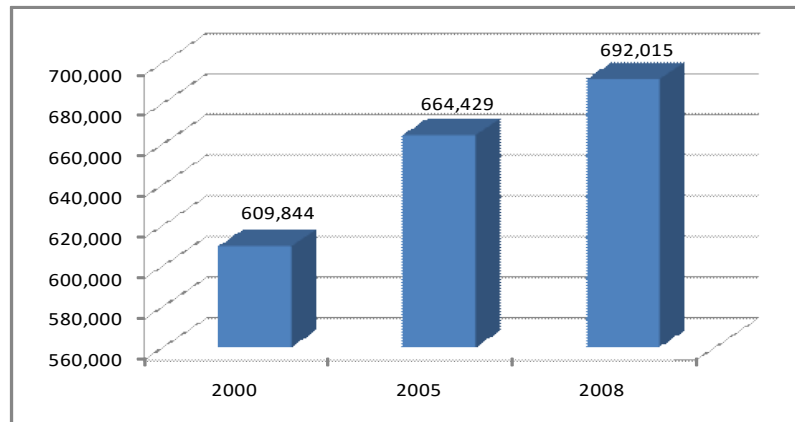
(단위 : 천명)



[그림 3-1-1] 충청남도 인구추이

- 인구에 비해 가구수의 급증으로 가구당 인구수 감소
 - 2008년 현재 충남의 가구수는 48,874가구임. 이는 2000년의 609,844가구와 비교할 때 연평균 1.68% 증가한 것임
 - 충남은 인구수에 비해 가구수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가구당 인구수가 2000년에는 3.08명에서 2008년에는 2.81명으로 감소하였음
 -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가구당 인구수가 3.08명으로 전국(3.45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현재는 가구당 인구수가 2.81명으로 오히려 전국의 2.91명보다 작은 실정임

(단위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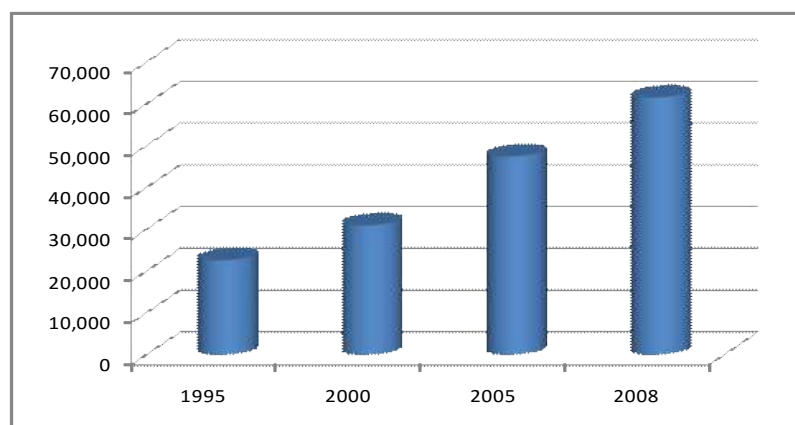


[그림 3-1-2] 충청남도 가구수 추이

나. 지역경제

- GRDP 및 제조업 생산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높은 증가 추이
 - 충남은 최근 13년간 GRDP 및 제조업 생산액에서 연평균 16.1%와 49.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2008년 현재 충남의 GRDP는 61,569십억원이고, 제조업 생산액은 113,852십억원임
 - 충남의 지역경제는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전국에서 차지하는 충남의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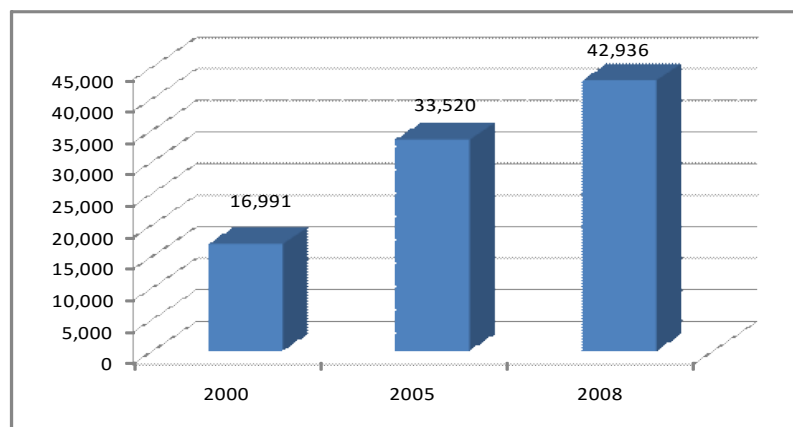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그림 3-1-3] 충청남도 GRDP

- 충남지역의 수출액과 투자액이 지속적인 성장 추이 유지
 - 2008년 현재 충남지역의 수출액은 42,936백만달러인데, 이는 2000년과 비교할 때 연평균 19.1% 증가한 것임
 - 또한 지역내 투자액의 규모가 연평균 5.1%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2008년 투자액은 20.075십억원임
 - 수출액과 투자액의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19.1%와 7.0%로 매년 충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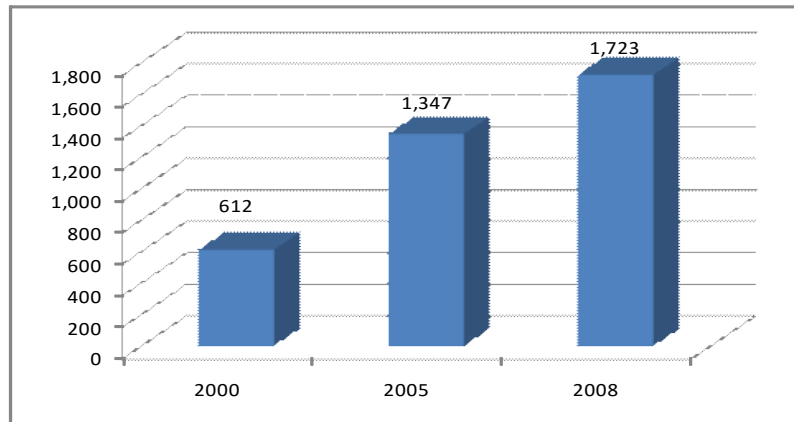


[그림 3-1-4] 충청남도 생산액

다. 지방재정

- 지방세와 재정자립도의 증가로 재정건전성 제고
 - 2008년 현재 충남의 지방세는 1,723십억원임. 이를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연평균 22.7% 증가한 것임
 - 한편 재정자립도 역시 최근 8년간 연평균 1.35%씩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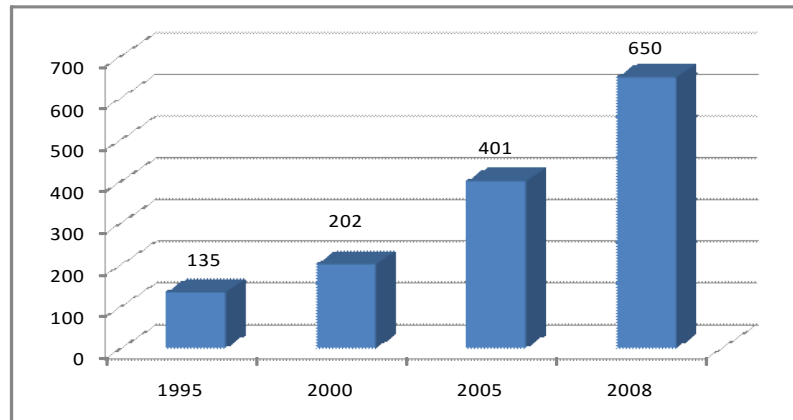
[그림 3-1-5] 충청남도 지방세

-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세 규모와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재정여건 열악
 - 지방세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지방세는 전국 총 지방세의 3.6%에 불과한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29.7%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라. 연구개발 및 지식창출

- 연구개발조직과 연구개발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국 대비 비중 증대
 - 2008년 현재 충남지역의 연구개발조직은 650개인데, 이는 1995년과 비교할 때 연평균 29.3% 증가한 것임
 -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은 18,916명으로, 최근 13년간 연평균 43.7%의 높은 증가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 그 결과 연구개발조직과 연구개발 인력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전국의 비중이 최근 1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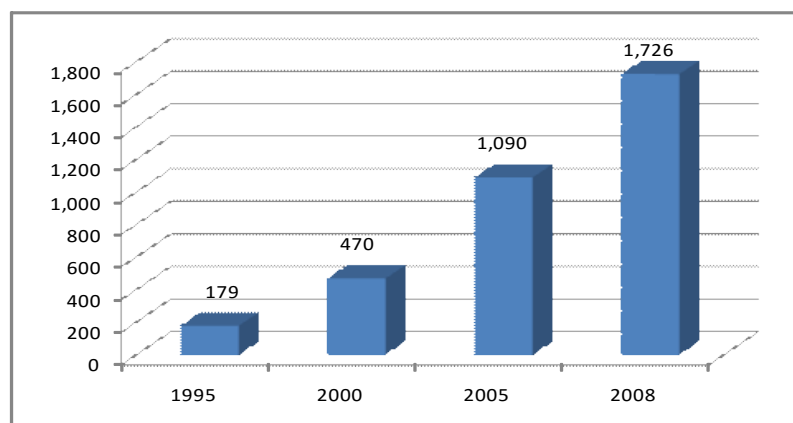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그림 3-1-6] 충청남도 연구개발 조직

- 연구개발투자비와 특허건수의 비약적 증가 추이
 - 2008년 현재 충남의 연구개발투자비는 1,6726십억원으로 최근 13년간 연평균 66.5%의 높은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특허건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2,159건으로 최근 13년간 연평균 528.0%의 비약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충남지역은 최근 13년간 연구개발투자비의 증대로 인해 특허건수 등의 지식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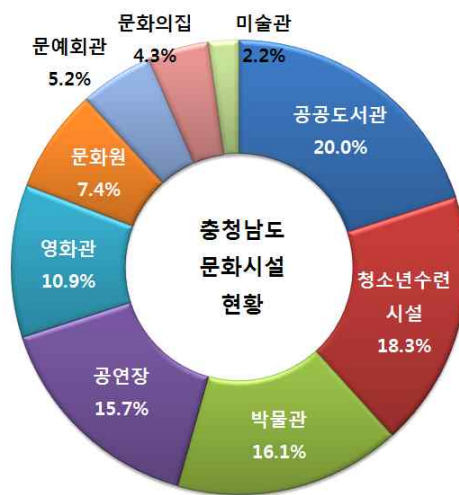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그림 3-1-7] 충청남도 연구개발투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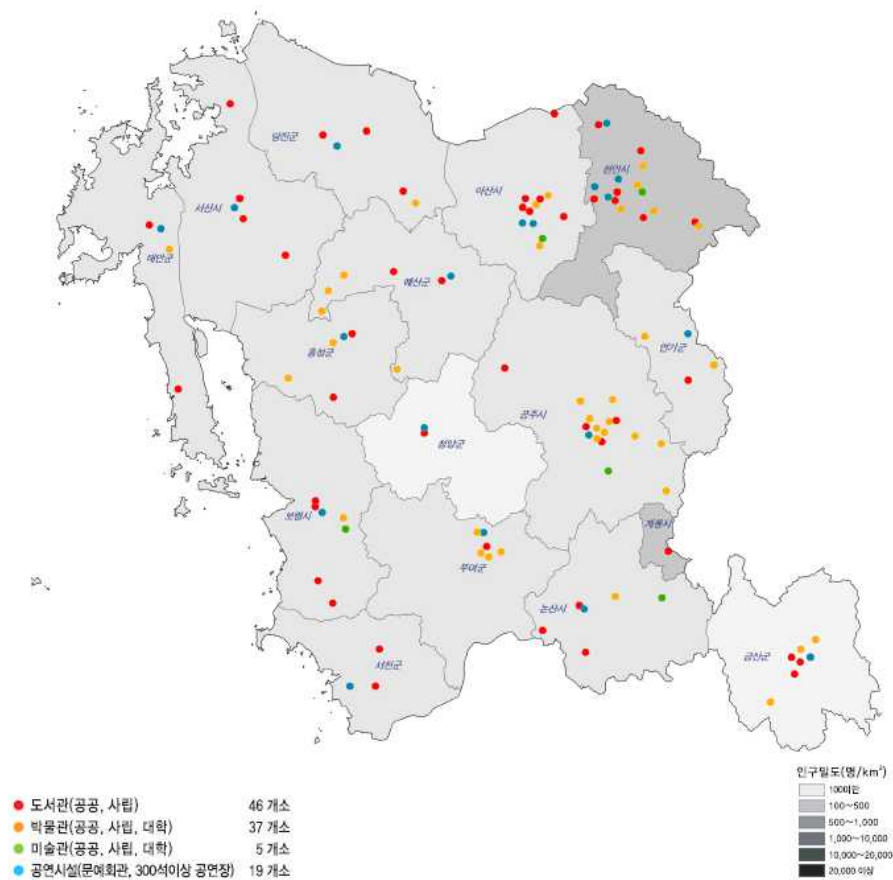
마. 문화·관광

- 충남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230개소의 문화시설(전국의 6.4%)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한 문화지수는 매우 낮은 상태임
- 문화시설의 비중은 공공도서관 20.0%, 청소년수련시설 18.3%, 박물관 16.1%, 공연장 15.7%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술관은 5개소에 불과함



[그림 3-1-8] 충청남도 문화시설현황(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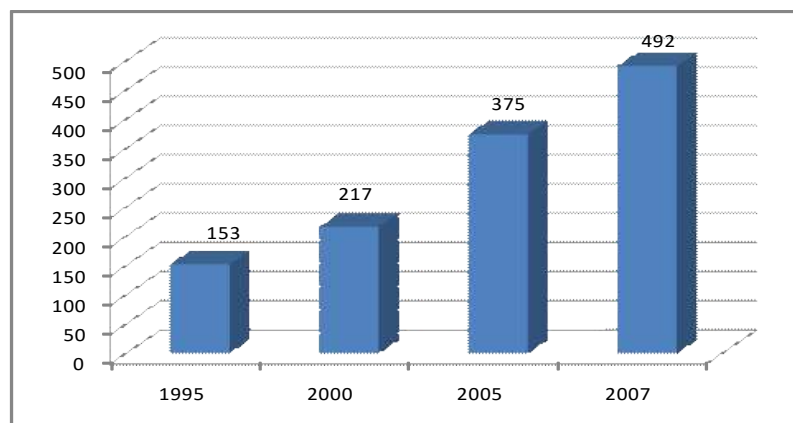
-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활용도 또한 낮은 상태에 있어 시설 확충 뿐 아니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 또한, 충남의 문화예술활동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지만,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생활로서의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3-1-9] 충청남도 시군별 문화시설 분포현황(2009)

-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안정적 기반 확보
 - 2008년 현재 충남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은 492개소임. 이는 전국 9,949개소의 4.9%에 해당하는 것임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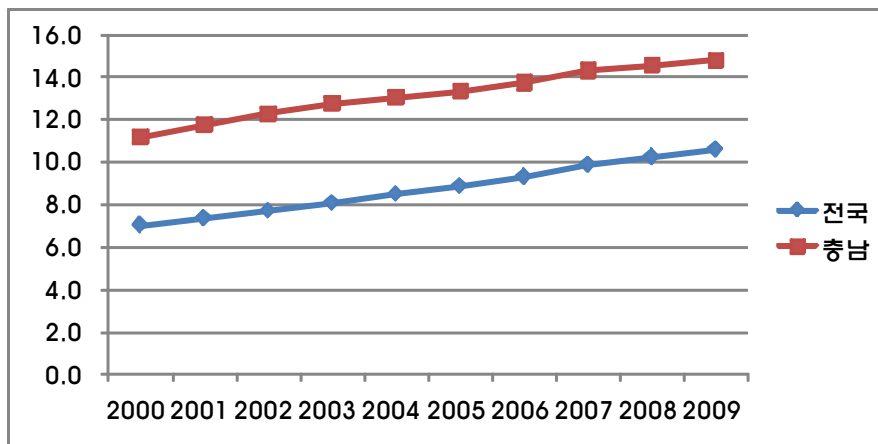
[그림 3-1-10] 충청남도 공공체육시설

- 최근 13년간 공공체육시설은 연평균 18.5%씩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는바, 필요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된 것으로 판단됨

바. 교육·복지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유아 및 학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농 지역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 소규모화가 심화되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과 특기적성교육 실시 등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가 어려운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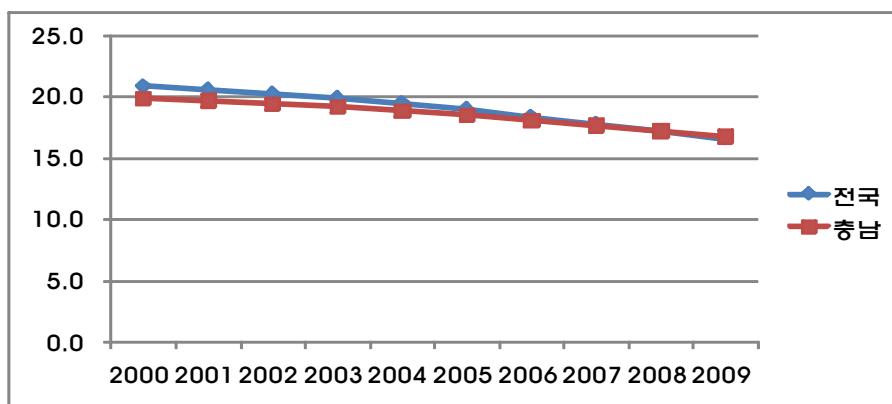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1-11] 고령인구(65세이상) 인구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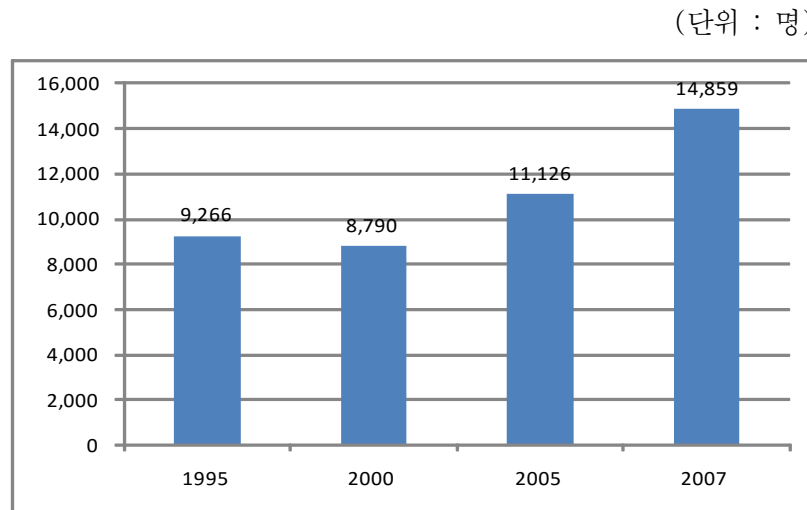
- 경제활동 참여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위 : %)



[그림 3-1-12] 유소년(0-14세)인구 비율

- 의료기관수와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2008년 현재 충남지역에 의료기관수는 3,009개소이고, 의료인력은 14,859명임. 이는 전국 대비로 볼 때, 각각 3.9%와 3.6%에 해당되는 것임
 - 충남지역의 전국대비 규모를 볼 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1-13] 충청남도 의료인력

사. 도시개발

- 충남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도청신도시,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역세권 개발도시(아산신도시, 남공주역) 등이 건설되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서북부권과 나머지 권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천안·아산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들의 중심지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고, 중소도시의 기존상권 침체가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사람중심의 도시환경정책이 보다 중요해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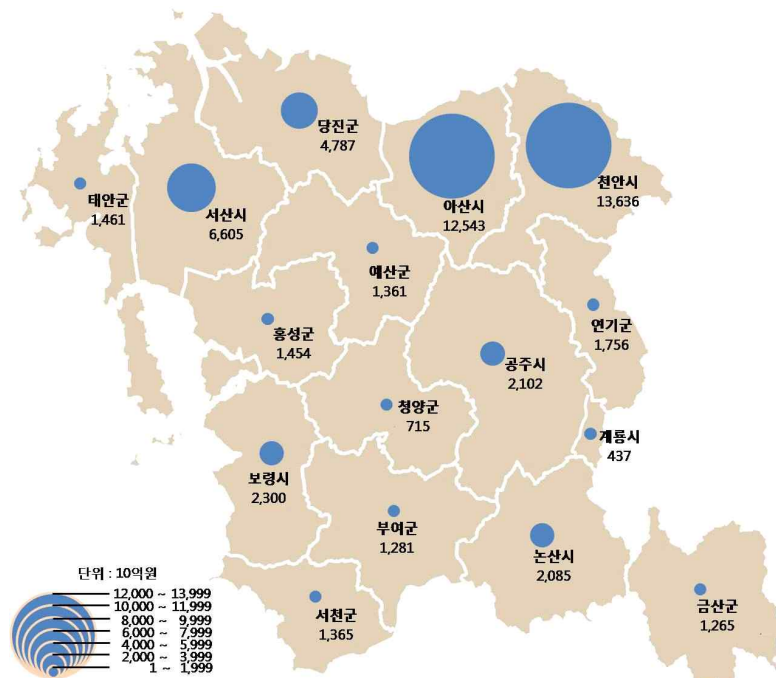
아. 농업·농촌

- 충남의 농가인구는 2000년 539천명에서 2007년 434천명으로 연평균 -3.05%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2.39%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임

- 그러나 충남도의 농가수는 전체 가구수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지면적은 246,145ha로 2003년 이후 연평균 -0.54%씩 감소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도 연평균 -1.73%씩 감소추세임
- 충남의 농가소득은 35,377천원으로 경기도와 제주도 다음으로 높고 농가부채는 24,990천원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음
-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 확충에 따라 농촌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오지·도서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어촌지역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되고 있어 면중심지 기능이 쇠퇴하는 한편 지역사회 기능도 약화고 있음
- 따라서, 농어업 자체의 혁신과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융합산업화와 농어촌 주민의 정주와 도농교류 전개를 통한 복합생활공간으로 재구조화가 요구됨

자. 지역불균형

- 2007년 권역별 지역내총생산액은 북부권이 충남전체의 6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나머지 권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그림 3-1-14] 충남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 규모(2007년)

자료 : 충청남도, 2007년 시군단위 GRDP추계결과, 2010.1, p.5.

- 2007년 권역별 1인당 GRDP는 북부권이 40,196천원으로 타권역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권역간 격차는 2005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권역별 재정력 지수 역시 북부권이 0.570으로 타 권역의 2배 정도 높고, 2010년 현재 권역별 재정자립도(44.5%) 및 재정자주도(71.3%) 또한 타 권역에 비해 월등 높은 수준임
- 따라서, 북부권과 같은 개발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낙후지역의 자원잠재력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도차원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충남의 위상과 잠재력

가.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지역

-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세종시가 충남도 지역내에 건설됨에 따라 충남도는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지역일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내포)신도시의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부상

나. 전국 최고의 무역흑자 기록지역

- 2009년 현재 충남의 수출규모는 394억불로 전국의 10.8%를 차지해 전국에서 네 번째의 규모이지만, 무역수지는 119억 달러로 전국의 29.3%를 차지해 경북 다음으로 많은 흑자규모를 내고 있어 전국최고 무역흑자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음

다.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 견인지역

- 충남은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수도권기업 입지가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를 통해 비수도권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라. 역사·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

- 충남은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과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 논산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문화권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공존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임

마. 지역혁신역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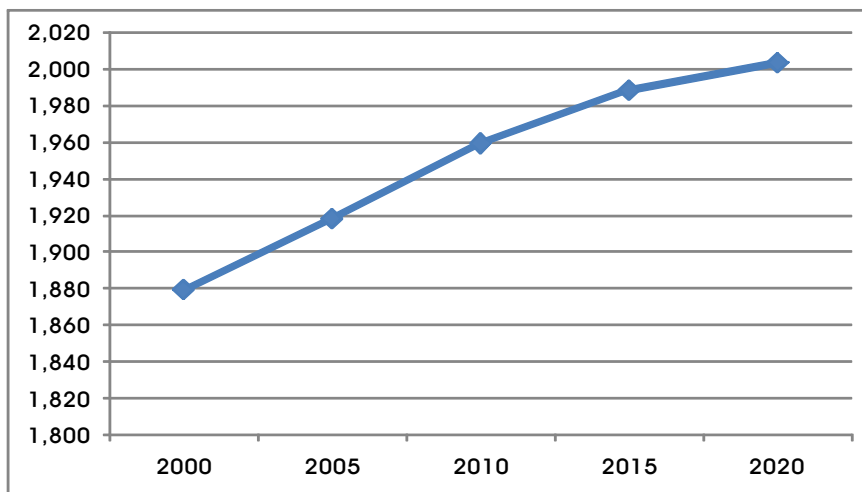
- 충남은 2004-2007년간 지역혁신역량(인적자원, 지식창출, 혁신활용, 지식재산권)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임

③ 충남의 미래전망

가. 인구총량은 증가하나 증가추세는 둔화

-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충남인구 1,879천명에서, 2010년 1,959천명, 2020년 2,003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10년 충남의 주민등록인구수는 2,054천명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수보다 9만 5천명이 더 많음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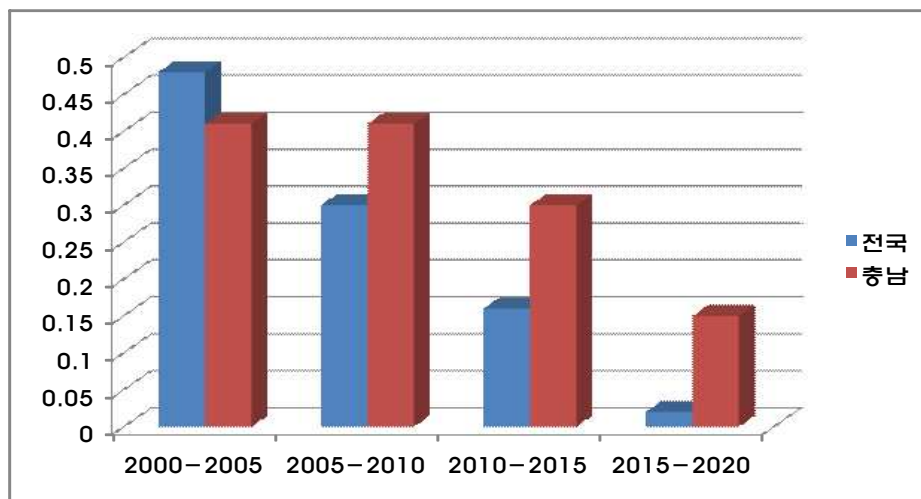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7.5계갯

[그림 3-1-15] 충청남도 추계인구(2020년)

- 따라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분리에 따른 인구감소분을 적용하면, 통계청의 인구추계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충남인구는 전국인구의 4.1%로 2000년 4.0%에 비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0-2005년 충남의 인구성장률은 전국보다 낮았으나, 2005-2020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인구성장률은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충청남도 내에 건설중인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아산만권배후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성장거점도시 건설에 따라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고려하면 통계청에서 추계한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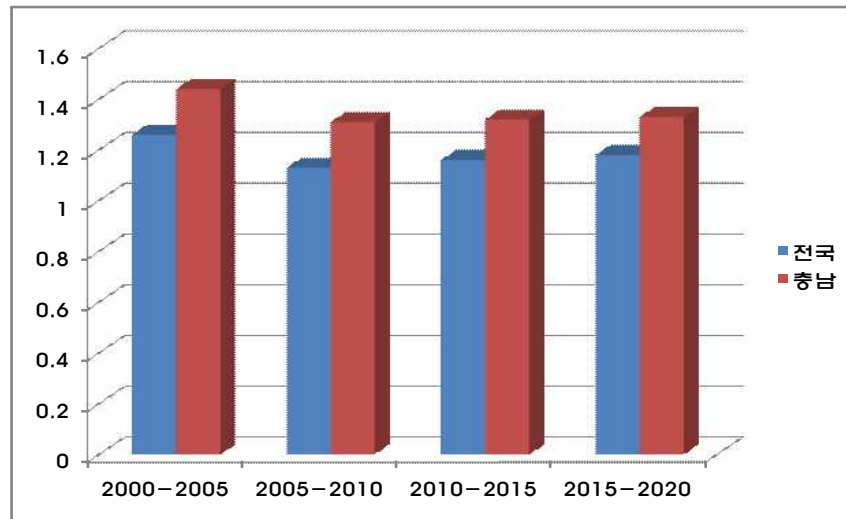
[그림 3-1-16] 연평균 인구성장률

나. 출산력은 저하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 충남의 합계출산률⁴⁾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2005년 중에는 연평균 1.44명으로 감소하였음(전국평균 1.26%)
- 전국의 도(道) 가운데 제주,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그러나 2010-2015년 이후의 합계출산률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2015-2020년 1.33명, 2020-2025년 1.37명, 2025-2030년 1.4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합계출산률(TFR) :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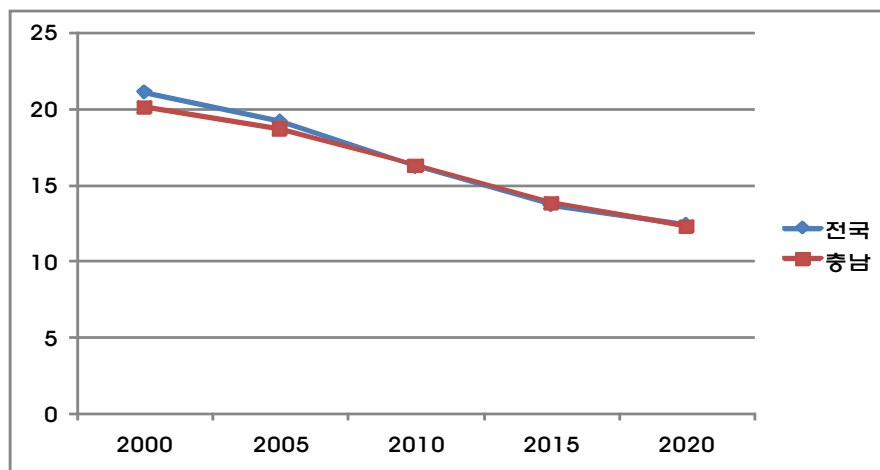


[그림 3-1-17] 합계출산물 전망

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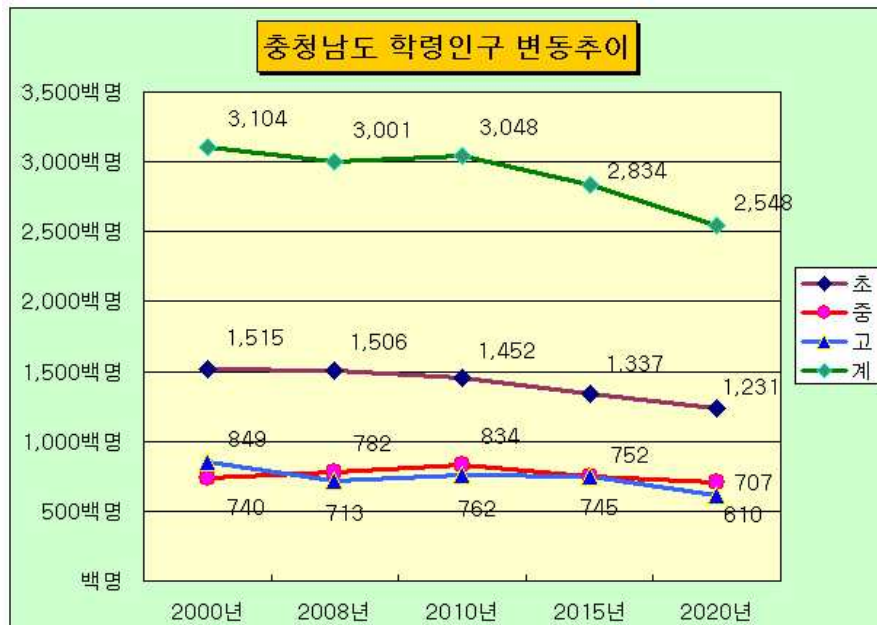
- 충남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비중은 2005년 18.7%에서 2015년 13.8%, 2020년에는 12.3%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

(단위 : %)



[그림 3-1-18] 유소년(0-14세) 인구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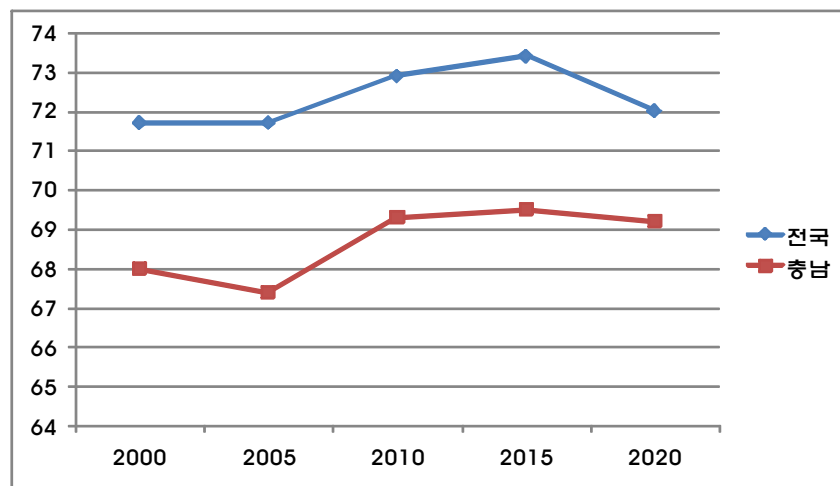
- 충남의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2000년 31만명에서 2010년 30만명, 2015년 28만명, 2020년에는 2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3-1-19] 충청남도 학령인구 전망

- 또한, 생산가능인구(16-64세) 비중도 2005년 충남의 67.4%에서 2015년 69.5%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다시 69.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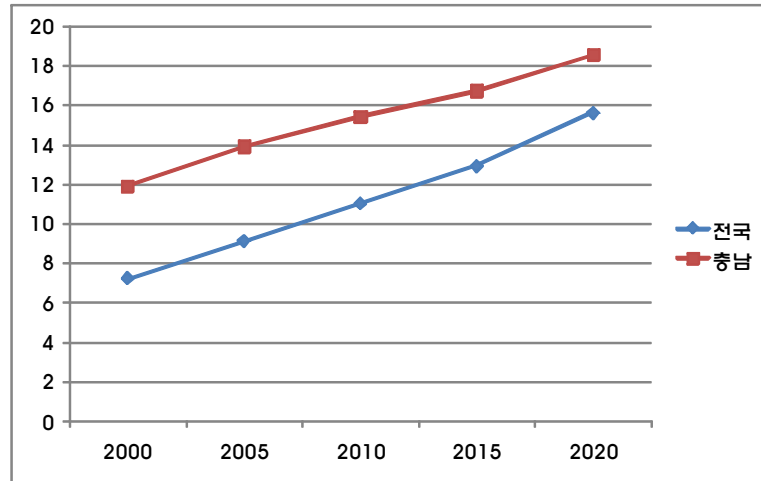


[그림 3-1-20] 생산가능(15-64세) 인구비

라.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 충남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05년 13.9%에서 2015년 16.7%, 2020년에는 18.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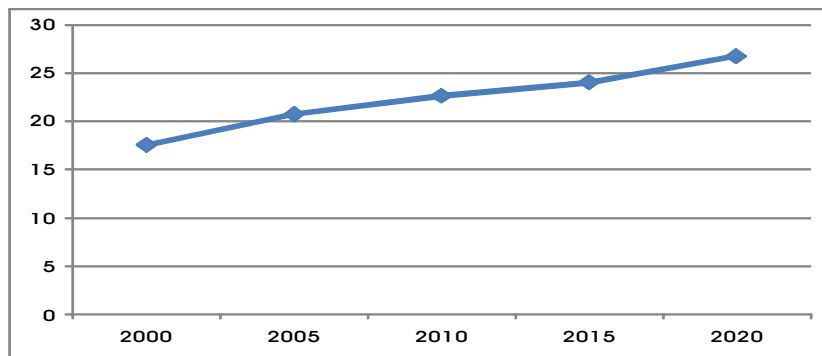


[그림 3-1-21]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비

마.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년부양비의 급속한 증가

- 충남의 노년부양비(65세 이상인구/15-64세 인구)는 2005년 20.7%에서 2015년 24.0%, 2020년에는 26.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전국의 부양비 21.7%에 비해 충남은 5%가 더 높게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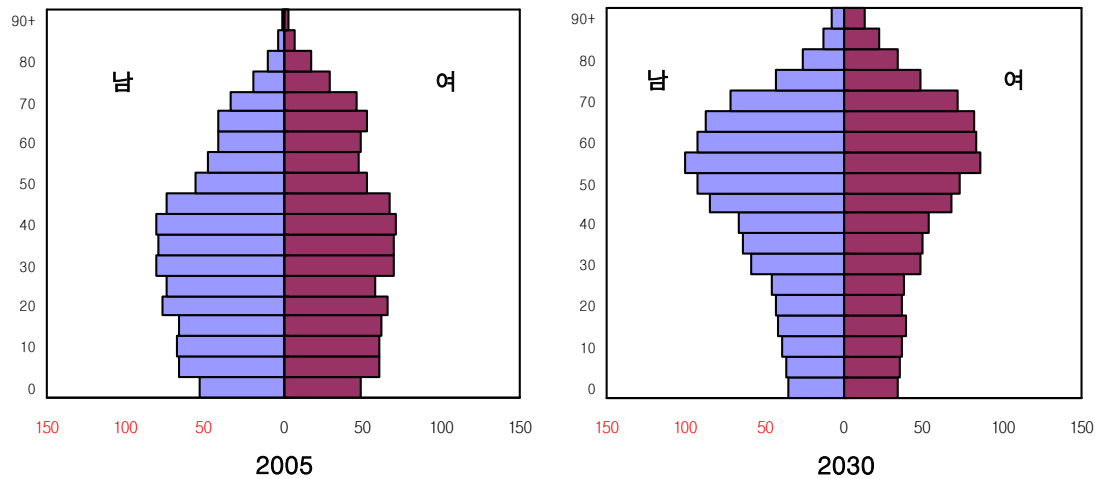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1-22] 노년부양비 전망

바. 저출산·고령화로 화병형 인구피라미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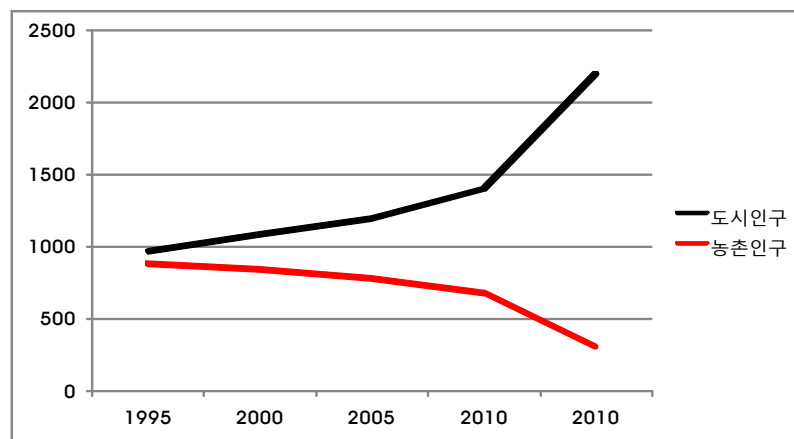
- 2005년에 비해 2020-2030년의 충남 인구는 유년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병형(유아·청소년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은 형태) 인구피라미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사. 도시와 농촌, 권역간 차별적인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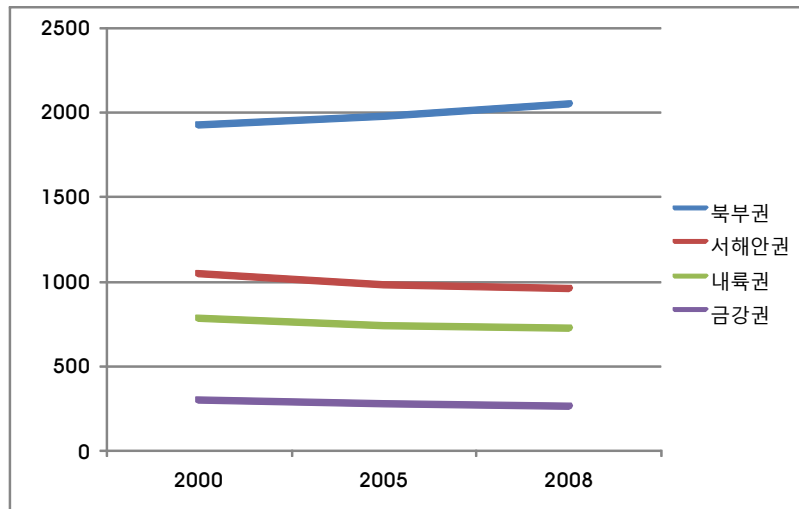
- 충남의 도시 및 농촌인구는 차별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향후에도 차별적으로 변화해갈 것으로 전망됨
 - 도시인구는 2005년 1,198천명(60.4%)에서 2020년 2,189천명(87.6%)로 증가
 - 농촌인구는 2005년 784천명에서 2020년 311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단위 : 천명)



[그림 3-1-23] 도시와 농촌인구 전망

- 또한 충남의 권역별 인구추이를 보면 북부권만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북부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권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인구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3-1-24] 권역별 인구추이

아. 복지재정의 지방비 부담비중 급격한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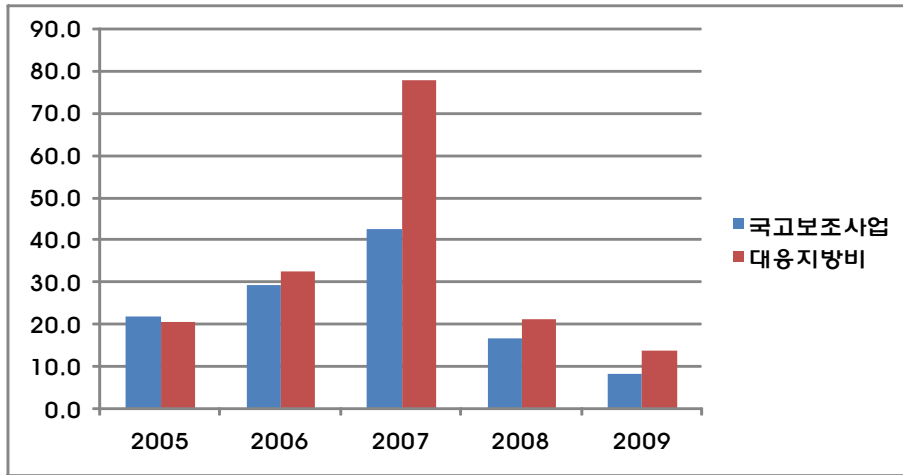
-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재정 지출규모가 2004년 GDP대비 8.5%에서 2050년 22.4%로 증가할 전망
- 국고보조사업 정비방안(2004.7)에 의해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연27%씩 증가
-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의 제정(2005)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추진에 범정부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데 따른 지방비 대응부담의 증가(2005-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23.3%증가, 동 국고보조사업 위한 지방비 부담증가율은 연평균 31.5%씩 증가)

[표 3-1-1]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비과 대응지방비 비중

(단위 : 조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고보조사업	4.95	6.04	7.82	11.16	13.02	14.11
대응지방비	1.78	2.15	2.85	5.07	6.15	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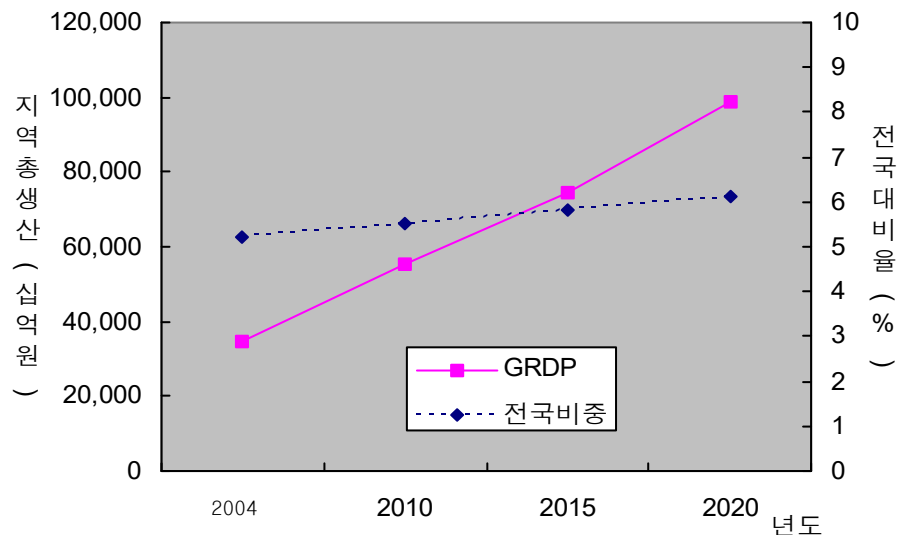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1-25]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비와 대응지방비의 연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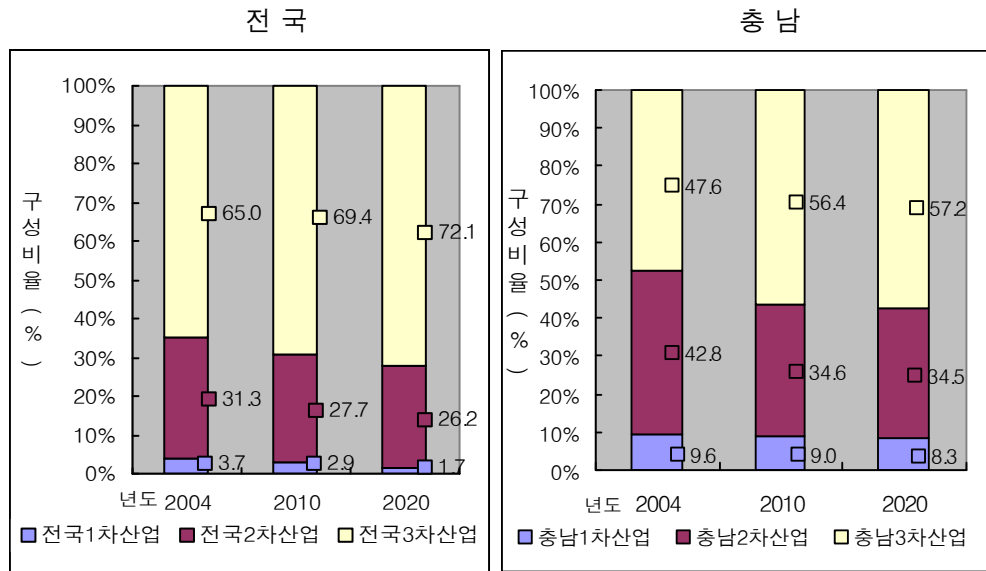
자. 지역내 총생산의 지속적인 성장

-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규모는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5년 45조 573십 억원에서 2020년에는 114조 23십억원으로 연평균 6.3%씩 성장이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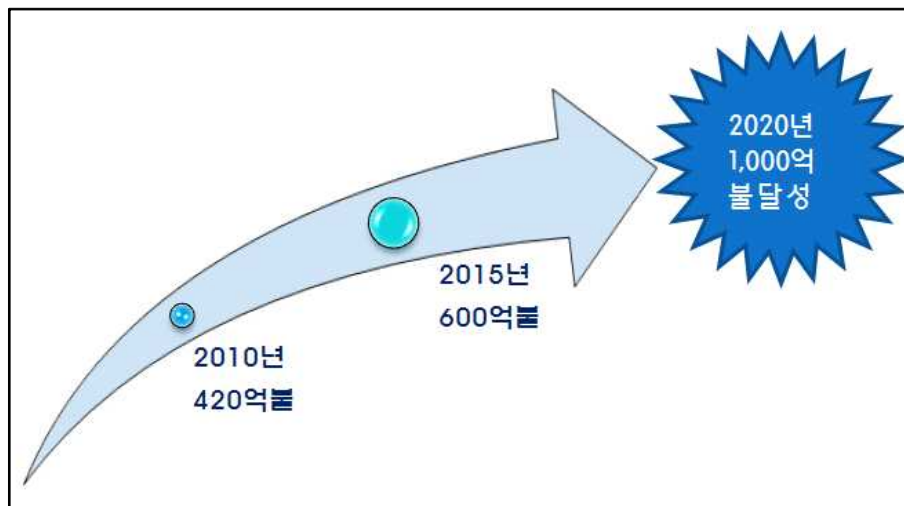
차. 3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 형성

- 생산액 기준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은 2010년 9.0%, 2020년 8.3%로 감소하고, 2차산업 역시 2020년 34.5%로 감소하는 반면, 3차산업은 2010년 56.0%, 2020년 5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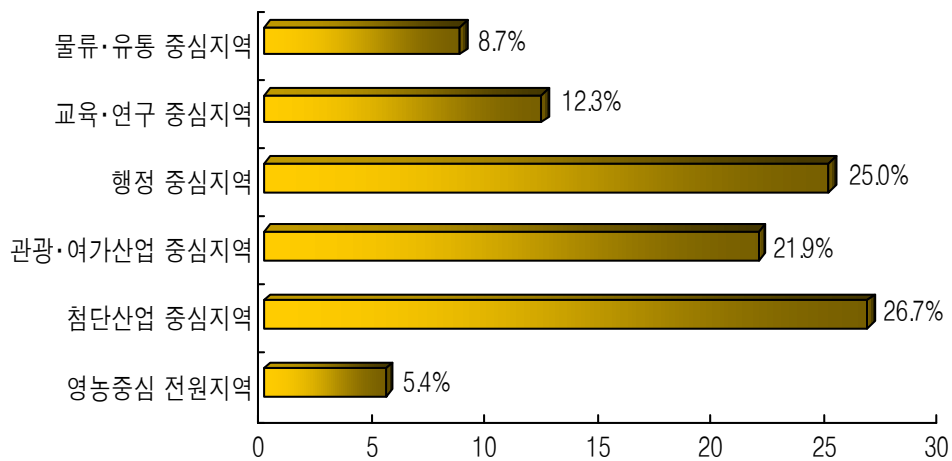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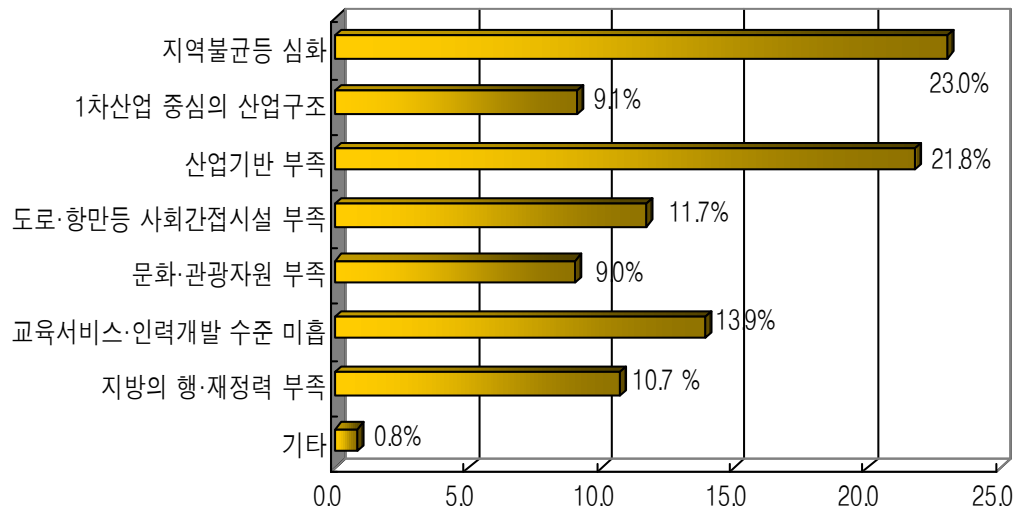
카. 수출 1,000억 달러시대 도래

- 충남의 수출규모는 2009년 394억불이었으나, 2010년 420억불, 2015년 600억불, 2020년에는 1,000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타. 첨단산업·행정중심·관광여가중심지역으로 발전희망

- 2006년에 조사한 충청남도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지역간 불균형심화, 산업기반 부족, 교육인적자원 수준 미흡 등을 들고 있음



<충남의 여건변화와 2020년 미래모습>

충남의 여건변화

- 완만한 인구증가 및 가구수의 급증으로 가구당 인구수 감소
- GRDP 및 제조업 생산액의 지속적 증가와 높은 증가 추이
- 수출액과 투자규모의 지속적 성장추이 유지
-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재정여건 열악
- R&D투자 및 특허건수 증가 등으로 연구개발 역량의 지속적 증가
- 다양한 문화자원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유아 및 학생인구의 지속적 감소
- 지역간 교육격차 발생 및 학교 소규모화 심화
- 노령인구의 지속증가·노년부양 부담 등 사회적비용 증가추세
- 천안·아산을 제외한 중소도시의 중심지 기능과 역할 미약
- 농산어촌지역의 상대적 낙후 지속과 면 중심 기능의 쇠퇴
- 권역간 지역불균형 발전 및 개발격차 심화



충남의 위상과 잠재력

-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지역
- 전국 최고의 무역흑자 기록지역
-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 견인지역
- 역사·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
- 지역혁신역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충남의 미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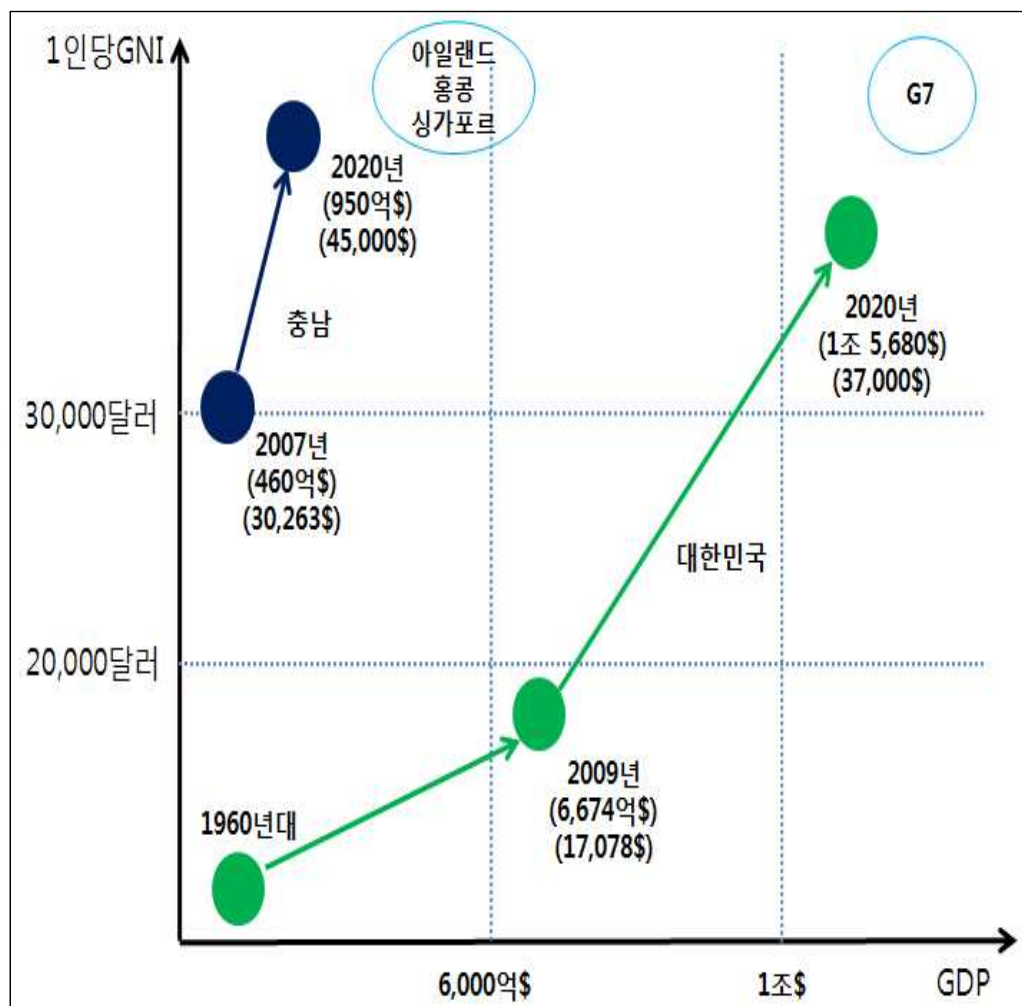
- 인구총량은 증가하나 증가추세는 둔화
- 출산력은 저하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년부양비의 급속한 증가
- 저출산·고령화로 화병형 인구피라미드 형성
- 도시와 농촌, 권역간 차별적 인구변화
- 복지재정에서 지방비 부담비중 급격한 증대
- 지역내 총생산의 지속적인 성장
- 3차 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 형성
- 수출 1,000억 달러시대 도래
- 첨단산업, 행정중심, 관광여가 중심지역으로 발전희망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및 도시, 제조업 생산에 의존하여 총량적 발전을 이룩해 왔음.

이러한 추세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재정 부담의 가중, 2·3차 산업중심의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20년까지 연평균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충남의 지역총생산액은 950억\$, 1인당 GRDP는 45,000\$에 달해 전국에서 경제적 활력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충남발전의 문제와 새로운 패러다임>

-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2·3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경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에서 서북부 4개 시군(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68.1%(2007년)를 차지하는 반면, 계룡과 청양은 각 1%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서북부 4개 시군중심의 충남지역 경제의 이면을 보면 이 권역에 입지한 대규모의 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로 인해 전체 지역총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지역내로 투입되어 확대 재생산되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은 미흡한 수준임
- 충남도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수도권 등으로 유출됨으로써 충남도내 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는 미흡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대규모의 기업유치에 의존하는 제조업 의존형 경제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로 지소가능성 확보 및 지역내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충남북부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들이 기업입지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역불균형을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지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충남도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어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며,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민선5기 충남비전에서는 각 분야별 그동안 충남의 외생적 발전전략의 성찰, 신지역주의의 이념과 신내생적 발전전략의 기초 하에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비전과 목표, 역점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① 외생적 발전전략의 성찰

가. 외생적 발전전략의 개념

- 국가 등 지역외부의 세력에 의해 지역발전이 주도되고, 지역발전의 동인도 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본에 의존하는 개발방식
- 외부의 기반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장려

나. 외생적 발전전략의 한계

- 지역의 발전이 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
- 보조금에 의존한 개발과 외부에 의한 정책결정의 문제
- 지역경제의 특성을 무시한 특정분야의 특정계층 위주의 왜곡된 대규모 개발급
-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차이를 무시한 파괴적 개발가능성
- 외부전문가와 계획가들에 의한 일방적 개발

② 신지역주의의 대두

가. 구지역주의의 한계

- 지역주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그 연대 및 협력을 촉진하려는 입장
- 영호남간 지역감정 등 중앙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 및 동원됨
- 사회전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지역주의를 왜곡하는 비민주적 정치문화 구조로 인해 생긴 현상

나. 신지역주의 대두

- 지역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구지역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
- 신지역주의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개성적 삶을 자율적으로 꾸리는 정체성의 공간으로 인식 및 실천하면서 가지는 지역에 대한 정서
- 지역을 표상하는 이념 및 정서로 내용은 지역차원에서 민주주의 구현을 전제
- 민주주의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이념적 기제

다. 신지역주의 한계

- 지역사회가 중앙정치의 영향에 노출되어 분권적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한계
- 지역시민사회가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전근대적 활동과 관계들로 작동하고 있어 시민적 민주주의를 발현할 수 없는 한계
- 한국특유의 지방자치제도로 인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없는 한계
- 집단이기주의와 관료주의의 온존으로 협의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없는 한계

③ 신내생적 발전전략의 대두

가. 내생적 발전전략의 개념

- 지역발전의 자원이나 원동력을 지역 내부에서 동원하는 개발방식
- 지역발전의 문제와 지방분권을 밀접히 연관시킨 개념
- 지역발전의 추진주체와 발전의 동인, 발전성과의 구속 등이 지역내에 존재하는 발전 방식

나. 내생적 발전전략의 특징

- 주민중심의 개발을 추구하고 인간중심적인 목적을 지향

-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목표를 달성
- 환경친화적인 개발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형태의 전형적 모형
- 지역주의에 바탕을 두고 지역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전략
- 타율적 발전 혹은 중앙집권적 발전을 배제하고 지방분권적인 경제사회 구조 하에서 지역의 내발성과 자립성에 기초하여 지역발전 유도

다. 내생적 발전전략의 한계

- 지나친 지역내부화 강조로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지역경쟁력 약화
- 저발전지역에서 내부수요 유발의 한계로 규모의 경제이익 실현 어려움으로 사업 결과의 효과성에서 투입에 비해 산출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대기업의 입지 등이 세계경제 동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내부 자원동원만으로 생존키 어려움
- 수도권 일극집중구조 개선 없이 지역역량 배양만으로 지역발전이 가능한가?

3. 비전과 전략

① 비전(Vision)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Happy Change, Fresh Local Government)

- 2020년의 충청남도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립적 성장동력을 배양함으로써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복지와 교육, 일자리와 평생교육이 보장되는 행복한 충남공동체를 형성할 것임

② 목표

■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아기를 낳아 키우는 시스템 확립으로 누구나 아기를 낳고 키우고 싶은 충남구현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 경제활동이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 생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스템 구축
-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사회참여가 보장으로 노년생활의 활력이 증진되는 고령친화적 사회기반 구축

■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 및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건설을 통한 도내 균형발전 실현
- 권역·계층·도농간 구분 없이 충남도내 어디에 살더라도 수준 높은 삶의 질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

■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

- 청년, 중년, 노년, 인생의 각 시기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일자리지원, 평생직업교육시스템 구축
-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 자립적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내생적 경제기반 구축

3] 도정방향

- 대화와 소통
 - － 도정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
- 공정과 투명
 - － 도내 어디에 살더라도, 도민 누구에게라도 도민의 정치·경제·사회·복지혜택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
- 견제와 균형
 - － 집행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어느 한쪽으로 과도한 권한이 치우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도정 주체간의 힘의 균형 유지
- 참여와 창의
 - － 도정의 계획, 실천, 평가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한곳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

[목표와 과제]

비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목표

출산 및 양육을 책임지는 충남
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영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

방침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견제와
균형

참여와
창의

과제

- 1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 2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경제 육성
- 3 선진국형 맞춤형복지 실현
- 4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 5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 6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창조
- 7 사람중심 생활공간 조성
- 8 지속가능한 환경 창출

4 8대 역점과제

역점과제	비전과 목표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구현	[참여와 소통행정으로 자치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주도형 창조행정체제 구축 •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구축 • 도민생활안전 도정체제 구축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경제 육성	[지속가능한 충남 경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인프라 구축 • 사회적 경제발전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확보 •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구축
선진국형 맞춤형복지 실현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반 확충 및 참여형 복지체계 구축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제고 • 건강한 고령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립 • 사회적 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지속가능한 농어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체계 혁신 및 농어업 인력 육성 • 농산업 및 농식품 경쟁력 강화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기반 지원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충남의 미래를 창출할 행복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양극화 극복 • 지역주민의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기회 제공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충남교육 추진 • 교육을 통한 지역과 개인의 상호 발전 도모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조성	[행복이 흐르는 문화 중심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통한 지역문화 창출 • 수요 중심의 문화·관광사업 육성 • 미래 변화되는 환경을 대비한 문화·관광 기반구축 •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사람중심 생활공간 조성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구도시가 조화로운 충남 실현 • 주민참여 중심의 지속가능한 충남 구현 • 녹색교통 중심의 열린 충남 구축
지속가능한 환경 창출	[기후변화 대응, 자연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 • 맑고 깨끗한 통합적 물관리 •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5 전략

■ 지방분권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분권요구
- 분권을 전제로 충남도와 시군간 역할분담 및 협력
- 충남도와 민간영역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 도민의 도정참여 유도 및 도민의 창조적 에너지 도정유인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택과 집중

- 제한된 자원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한 재정운용
-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문에 전략적 재정투입
- 도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투입

■ 내발전 발전에 기초한 지역경영 추구

- 외생적 개발의 부작용 및 한계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 충청남도 자산과 도민역량으로 경제활성화 및 성과의 지역내 환원 유도
- 사회적 경제부문(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등)활성화에 주력
- 지역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과 협력체제 강화

■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파워 강화

- 문화(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육성 및 사회자본의 형성
- 복지재정의 확충 및 복지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
- 지역밀착형 교육 등으로 지역에 돌아와 기여하는 인재 육성
- 문화의 생활화 및 전통문화의 재창조와 향유기회 확대

■ 지역혁신 리더양성 및 도민역량 강화

-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육성
- 지역혁신리더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 집중
- 도민의 민주적 소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민주주의 교육노력
- 도정 및 시군정에 민간의 전문역량 활용 및 참여방안 강구

[역점과제와 전략]



6 2020년 달성지표

삶 의 지 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20
인 구	천명	2,090	2,130	2,173	2,216	2,259	2,003
1 인 당 G R D P	천원	33,140	35,120	37,220	38,040	38,640	45,000
수 출	억불	420	870	1,350	1,850	2,370	10,000
외 국 기 업 유 치	업체	5	12	19	26	30	50
기 업 유 치	업체	300	500	700	900	1,000	2,000
고 용 률	%	63	63.2	63.5	63.7	64	65
문 화 시 설 확 충	개소	74	79	87	93	96	150
관 광 객 유 치	천명	22,100	22,972	23,431	23,900	24,378	30,000
농 어 촌 주 택 개 량 률	%	54.5	54.7	64.8	70.0	75.2	80.0
농 수 산 물 수 출	백만불	450	480	520	560	600	1,000
초 중 학 교 무 상 급 식	천명	—	139	152	173	217	270
영유아보육시설이용률	%	55	58	61	63	66	80
저소득층자립자활지원	명	2,073	2,300	2,400	2,500	2,600	3,000
행 복 경 로 당 조 성	개소	—	63	113	163	213	400
상 수 도 보 급 율	%	80.8	83	87	90	92	95
하 수 도 보 급 율	%	63	67	70	73	76	80
도 로 포 장 율	%	80.1	80.5	81	81.6	81.9	85.0
취약지구화재경보기보급률	%	6.3	25	50	75	100	100

제4장 분야별 사업계획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경제 육성

선진국형 맞춤형복지 실현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조성

사람중심 생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 창출

1.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① 여건변화 및 과제

가. 여건변화

■ 집권에서 분권으로 패러다임 변화

- 국가운영의 핵심 : 집권(centralization) ⇒ 분권(decentralization)
 - － 성장거점 전략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개발 전략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
- 시장개방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 － 지방자치단체도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필요성 증대
- 공공서비스 체감지수에 대한 관심 제고
 - －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주민과의 접촉면에 있는 지방행정의 적실성과 대응성에 대한 관심 증가

■ 지방정부 역량 강화의 필요

- 지방정부에 대해 사회저변층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고양된 서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쾌적한 환경, 양질의 문화 및 교육서비스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내 균형발전, 급증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생성

-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강력한 수단
 - － 자치행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지방정부 간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임
 - －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해소
 - － 지방정부 간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이를 위한 조직, 인사, 재무 차원의 제약조건 해소를 위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신장 노력

-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과 협조의 심화는 이들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초래할 것임
 - 지방자치와 분권의 문제는 지방마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 신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는 선순환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임

■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 심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열악성은 진정한 자치를 위한 걸림돌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임. 따라서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확충 문제는 지속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 국가재정 총 규모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별 비중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60:40 이었던 것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1.4: 38.5% 였다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62.40: 37.60이 되었음
 - 그러나, 이런 재정규모에서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재원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재정과 관련한 지방의 자율성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 도정의 투명성 및 도민참여 요구 증대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도입요구 증가
 - 사회적 약자 공무원 채용 확대, 여성공무원 5급 이상 임용 확대
- 자치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요구
 -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광범위한 민주성 요구와 자치행정에 대한 다양한 참여욕구가 표출되고 있음
- 각종 정보시스템 통합 및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방행정조직의 조정능력 저하

- 중앙정부의 제도적 통제와 지원으로 분권화에 역행양상이 지속됨
 - 지방행정 조직 역시 기본적으로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통제와 의사소통은 비교적 원활하나 수평적 차원의 자율적 협력과 조정능력은 저하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구조와 경직성으로 인한 행정수요 대응능력 저하
 -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규모나 형태 등 기본적인 골격이 중앙의 지침에 따르고

있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성과관리제도의 다양화로 효율성 저하

- 현재 충남도에서는 실국장책임경영제 및 BSC 등 성과관리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혼란과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성과지향적 도정운영을 위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통합운영방안 모색이 필요시되고 있음

■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가용투자재원의 부족

- 총계규모 3조 9,235억원으로 전년대비 1.5%증가함

<표 4-1-1 > 2010년 충남의 회계별 재정규모(당초예산)

(단위 :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0 예산(A)		39,235	33,427	5,808
	증감액(A-B)	594	1,047	-453
	증감율	1.5	3.2	-7.2
2009당초(B)		38,641	32,380	6,261
2009최종예산		42,189	35,887	6,302

자료: 충남 도청 홈페이지(2010.9.2)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표 4-1-2 > 충남 재정규모의 연도별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연도	금액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2005	25,236	-	11.2
2006	27,614	9.4	
2007	31,799	15.2	
2008	35,499	11.6	
2009	38,641	8.9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현황 지방예산규모.

- 2010년 충남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은 3조 3,427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0%,⁵⁾ 의존재원의 비중은 72.0%임

5) 뒤에서 언급되는 행정안전부의 시도 단위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자체재원의 비중과 재정자립도는 일치하지 않음

<표 4-1-3 > 2010년 충남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조

(단위: 억원, %)

구 분		금액	비중
자체재원	지방세	7,850	23.5
	세외수입	1,526	4.5
	소계	9,366	28.0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5,651	16.9
	국고보조금	18,410	55.1
	지방채*	0	0.0
	소계	24,061	72.0
합계		33,427	100.0

주: * 2010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음.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도의 일반회계 예산.

- 2005~2009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 2.1%에 그침
 - 충남 지방세 수입은 2005년 7,441억원에서 2009년 8,095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하는데 그쳤음
 - 이는 동 기간 충남의 재정규모가 연평균 8.8%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이며,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표 4-1-4> 충남 지방세(도세)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연평균 증감률
소계	744,118	787,104	781,173	804,481	809,513	(100.0)	2.1
취득세	291,226	307,115	297,341	293,040	295,416	(36.5)	0.4
등록세	276,859	284,721	274,016	280,655	287,433	(35.5)	0.9
면허세	2,170	2,343	2,469	2,625	2,666	(0.3)	5.3
레저세	4,386	6,115	9,008	11,535	12,350	(1.5)	29.5
공동시설세	16,868	19,821	21,921	23,911	24,063	(3.0)	9.3
지역개발세	451	503	517	493	520	(0.1)	3.6
지방교육세	140,194	155,913	164,341	179,738	184,833	(22.8)	7.2
과년도수입	11,964	10,573	11,560	12,484	2,232	(0.3)	-34.3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2010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⁶⁾ 38만 5천원으로 도 평균보다 낮음

<표 4-1-5>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1,136	761	452	442	391	126
최 고 (단체명)	1,136 서울본청	927 인천본청	841 제주도본청	753 경기광주시	1,357 충북진천군	923 서울중구
최 저 (단체명)	- -	650 광주본청	275 전남본청	76 충남계룡시	134 충북단양군	33 부산북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 2010년 충남의 재정자립도⁷⁾는 24.0%에 그침
 -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24.0%까지 떨어졌으며, 전국 지자체 평균인 52.2%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표 4-1-6>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2010년)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83.4	56.3	31.6	40.0	18.0	35.4
최고 (단체명)	83.4 서울본청	70.0 인천본청	59.3 경기도본청	67.4 경기성남시	48.6 울산울주군	82.9 서울중구
최저 (단체명)	- -	43.2 광주본청	11.5 전남본청	9.3 전북남원시	8.6 전남고흥군	11.4 부산서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재정자립도.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추진이 미흡

-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충남-전북교류협의회」, 「황해권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물리적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혐오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운영, 교육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은 미흡한 실정임

6) 2010년 지방세액을 200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로서 나누어 산출함.

7)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여 전국 평균 및 시도평균은 순계 기준으로, 자치단체평균은 총계기준으로 작성함.

나. 과제

■ 충남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 행정의 책임성과 경영마인드를 토대로 창의성 있는 시책개발과 시행분위기 확산
 -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지역경제발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충남의 여건과 특색을 살린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

■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공개화·투명화

- 지방행정 전반에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혁신 확산
 -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활동 등을 통해 행정 및 의정과정을 공개하려는 노력이 가시화
 - －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와 참여방안 모색 필요

■ 주민참여의 활성화

- 도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함
 - － 지역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및 감시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인사운영의 합리화

-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기반 조성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유도하며 근무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투명성 인사제도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함

■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추진

- 도정운영의 성과향상과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을 통해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의 성과와 고객만족을 제고시켜야 함

2 비전과 전략

가. 비전과 목표

“참여와 소통행정으로 자치역량 강화”

- 도정운영에 있어 정당한 절차와 수단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참여와 다양한 소통행정으로 도민이 함께하고 신뢰하는 자치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함

구 분		내 용
비 전		참여와 소통행정으로 자치역량 강화
	목표1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민주도형 창조행정체제 구축
	목표2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구축
	목표3	도민생활안전 도정체제 구축

■ 목표1 :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민주도형 창조행정체제 구축

- 도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민참여 기제의 제도화 및 활성화
- 인권취약 계층에 대한 침해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목표2 :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구축

-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과제를 고려한 조직성과관리 및 개인역량평가제도의 재설계 및 선진화
-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기반 조성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목표3 : 도민생활안전 도정체제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연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해예방의 통합적, 체계적 시스템 구축
- 재난취약요소의 사전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재난 피해의 저감

나. 전략

■ 전략1 : 참여기제의 제도적 정착

- 도민의 의견수렴을 정례화하여 이를 도정의 시책구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민참여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도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중심역할을 수행
- 도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고 현장의 문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형 정보시스템 구축

■ 전략2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 도 예산편성에 도민들의 의견을 예산내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 충남도내 행정소송 및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해석과 민원인들의 법률적,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민간컨설팅 추진
- 현행 인사기준을 개선하여 불투명한 인사관행을 혁신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킴

■ 전략3 :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구축

- 현행 다양한 성과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인사체계와 연계시킴으로써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을 확대
- 공무원들의 명확한 업무목표 설정과 관리를 위해 성과계약제를 도입하여 도정목표와 개인업무목표를 효과적으로 연계

■ 전략4 : 도민생활 안전체계 구축

-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관·유사기능의 개별·분산 관리에서 통합·협력의 재난상황관리 운영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로 재편
- 민간전문자원을 적극영입하여 전문정예조직으로 육성함으로써 의용송방대의 대응능력을 강화시킴

3. 전략별 정책과제

구분	내용
비전	
목표1	참여와 소통을 통한 창조행정체제 구축
전략1	참여기제의 제도적 정착
정책과제1	도민참여 전략회의 개최
정책과제2	참여와 소통위원회 구성
정책과제3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전략2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정책과제4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정책과제5	충남감사위원회 구성
정책과제6	도정변호사제 운영
정책과제7	객관적 인사기준정립
목표2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구축
전략3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구축
정책과제8	통합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정책과제9	성과계약제 도입
목표3	도민생활안전 도정체제 구축
전략4	도민생활안전체제 구축
정책과제10	통합재난상황실 운영
정책과제11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① 참여기제의 제도적 정착

■ 기본방향

- 도정 운영을 위한 정책의 구상 및 결정 등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 도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정발전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도민참여 전략회의 개최
 - － 도의 주요한 핵심과제 및 제안되는 시책사업들을 구상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여 도정 시책 구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민참여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함
- 참여와 소통위원회 구성·운영
 - － 도정의 주요 정책 및 현황 관련 제안, 자문, 평가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공개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통합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②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추진방안을 모색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향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 도 예산편성에 도민들의 의견을 예산내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외부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과정을 신설하여 지방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함
- 충남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하여 개방형 위원장을 임용한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도민참여 전문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도정변호사제 운영
 - 충남도내 행정소송 및 조례제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해석, 민원인들의 법률적,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민간컨설팅을 추진하여 부패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행정관리를 수행함
- 객관적 인사기준 정립
 - 불투명한 인사관행을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고 기피부서 및 격무부서의 근무성과를 우대하며 인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③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구축

■ 기본방향

- 도정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관리를 위해 각종 성과관리제도를 일원화 시키고 이의 결과를 인사체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효율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향

- 통합성과평가지스템 구축
 - 도정의 전략과제를 성과목표(지표)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통합하는 등 도정의 주요시책 및 고객만족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 및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환류시킬 수 있는 통합적업무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공무원 성과계약제 도입
 - － 공무원들의 업무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성과평가를 목표관리제에서 합의에 근거한 성과계약제로 전환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정착함

4] 도시생활안전체계 구축

■ 기본방향

- 지역 중심의 효율적 지역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도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난상황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향

- 통합재난상황실 운영
 - － 긴급 재난정보처리 및 현장대응력이 높은 119를 중심으로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 통합 상황관리가 가능한 종합 컨트롤 타워로 재편하기 위해 현행 재난관리 유관·유사기능의 개별, 분산 관리에서 통합, 협력의 재난상황관리 운영시스템 구축
-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 －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역할 변화, 지역친화적 안전지킴이 이미지, 관설 소방력 대비 지역 민간자율봉사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 부여하며 도·농간 의용소방대 운영 차별화 및 전문의용소방대 운영으로 대응능력 강화

4. 정책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
도민주도형 창조행정체제 구축	○ 도민참여 전략회의 운영	(명)		1만명당 2.5명	1만명당 5명	1만명당 7.5명	1만명당 10명	1만명당 15명
	○ 도정운영 만족도 제고	(%)	—	88	88.5	89	90	92
	○ 법률/행정건설팀 건수			30	40	50	60	80
	○ 입법활동 지원 건수	(회/년)		10	15	20	20	30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구축	○ 사업별 목표 달성율	%		90	92	94	95	95
	○ 인사위원회 민간참여	(명)		6	6	6	6	8
도민생활안전 도정체제	○ 전담의용소방대수	(소)	36	56	9	5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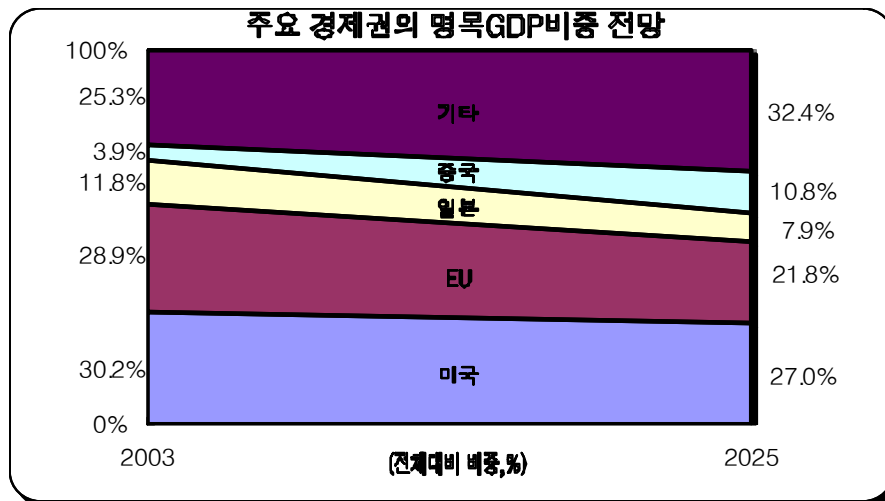
2.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경제 육성

① 여건변화 및 과제

가. 여건변화

■ BRICs의 부상 및 동북아 경제권 확대

- 국토 및 인구 면에서 규모가 크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등 BRICs의 발전은 세계경제질서에 새로운 변화의 축으로 등장
- 아울러 세계경제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영향증대로 동북아 지역은 경제규모면에서 NAFTA, 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 중이며, 한·중·일 3국간의 교역 및 투자는 급증하는 등 역내 경제의존도 증대



자료: IMF(2005), Global Insight, *World Economic Outlook*.

- 이처럼 동북아 경제권이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질서가 변화함에 따라 환황해권 전진기지로서 충남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다만,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흡수하며 세계의 공장지로 부상한 중국과 새만금, 인천, 광양 등 환황해권에 입지한 국내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전제로 양호한 외투환경 조성과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당진항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 WTO DDA 및 FTA 확산

-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하고 국제분업구조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간 제도적 공조의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범세계적인 질서의 형성이 촉진되고 있으며, 이는 WTO, DDA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와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로 발현
- WTO의 새로운 다자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서비스,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을 논의 중임
 - FTA를 통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경제통합은 더욱 가속화되고, 최근에는 무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음
- 이처럼 세계화 및 지역화를 매개로 한 국제규범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파급경로에 의해 충남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산업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

■ Greenomics의 신성장 동력화

-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Green Growth)개념에 주목
- 이에 따라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그리노믹스(Greenomics) 중요성이 대두
 - 이에 정부는 17개 신성장 동력 중 녹색분야로 그린에너지, 그린카, 2차전지 등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개선하는 경제성장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변화
IT접목
에너지 효율적인 활용

시너지효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 소비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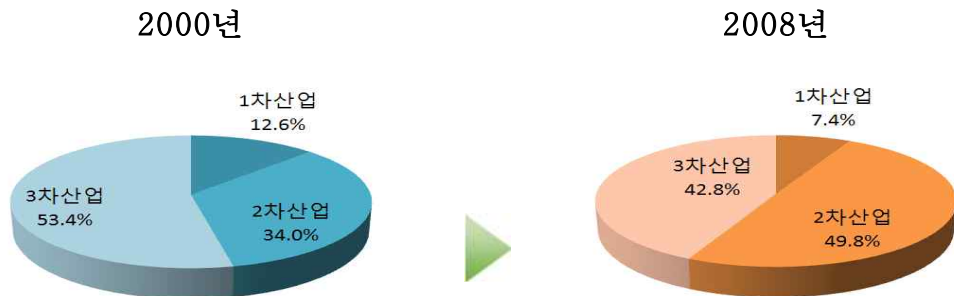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선순환구조의 경제성장

- 다만, R&D투자비용 등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up-front cost)이 투입되어야 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상 공공부문의 다각적 지원으로 기업의 녹색시장 진입 유도함

- 충남도는 현재, 지역내 강점을 가진 저탄소 분야 산업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연계한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 중임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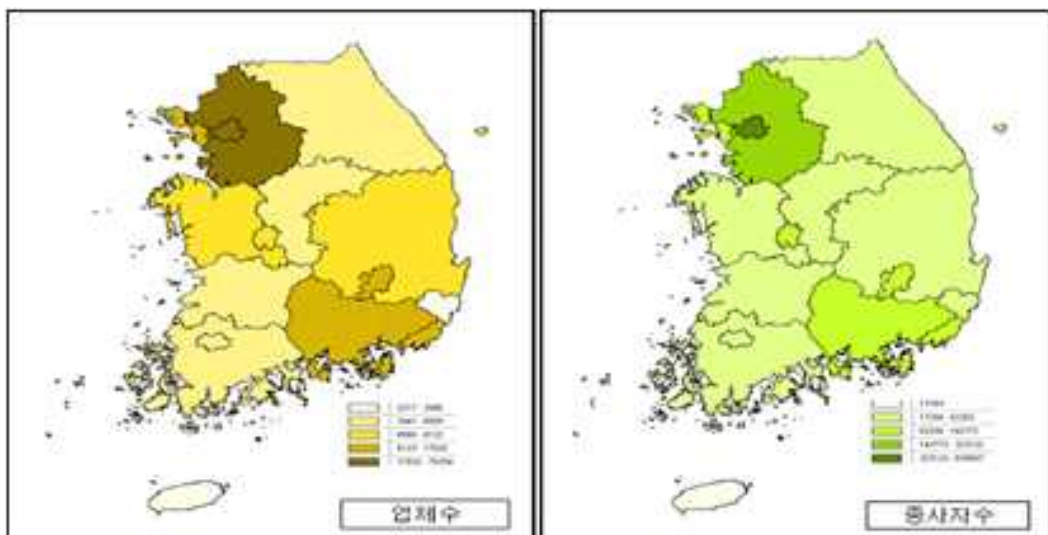
- 충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2008년 현재, 제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8%에 달함(전국 평균비중 28.8%)



자료: <http://kosis.kr/>.

[그림 4-2-1] 충남의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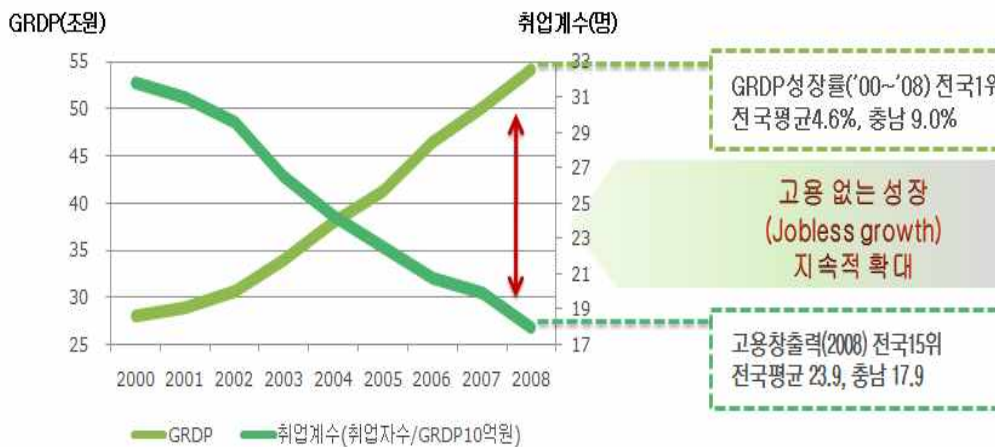
- 반면, 3차산업 중 제조업을 지원하는 생산자 서비스는 대도시 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적 정도 미흡
- 업체 및 종사자기준으로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전 업종의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음



자료: <http://kosis.kr/>.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심화

- 충남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적성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00~'08년 기간 중 전국의 고용은 연평균 1.4%씩 증가하는 가운데, 충남지역의 고용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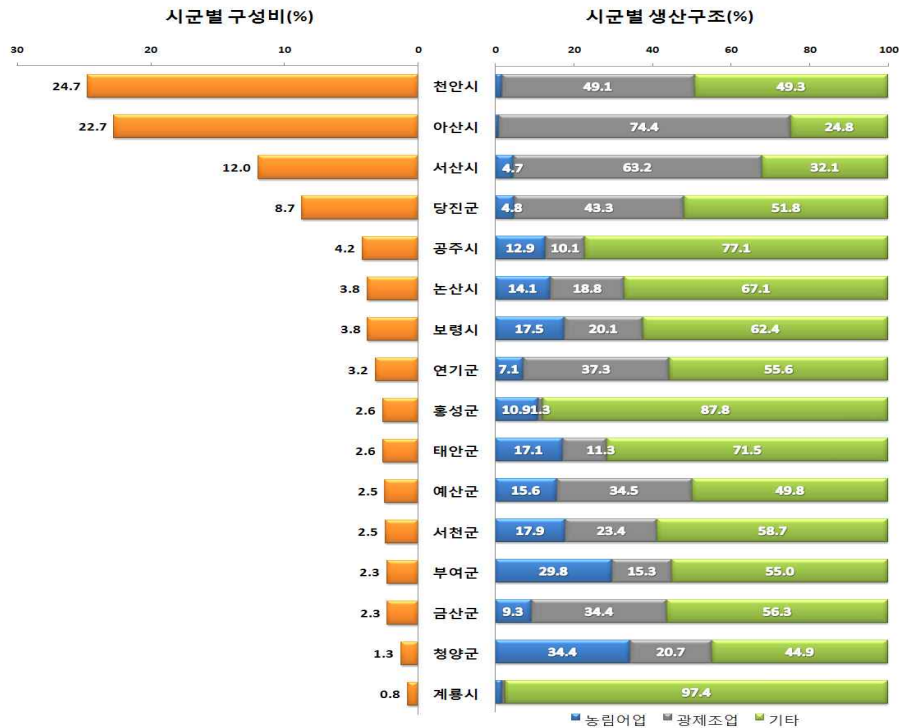


자료: <http://kosis.kr/>.

- 이는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기인한 것임
- 취업계수(취업자수/GRDP 10억원)가 지속적으로 감소 : 28.8명('00) → 17.9명('08)

■ 지역간 경제력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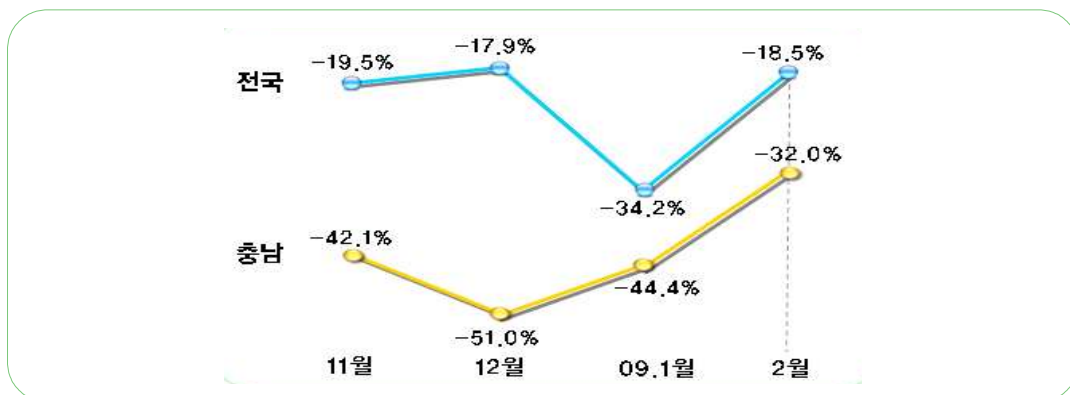
- 도내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집중되어 시·군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
- 2007년 현재, 북부권 지역이 GRDP 중 약 68.1%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31.9%를 점유하는데 그침
- 이처럼 북부권 지역은 제조업의 중심의 양적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침체 내지 정체되어 있는 실정
- 이러한 북부권 중심의 산업발전은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야기한 주된 원인임



자료: 2007년 충남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2009).

■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중심의 산업구조

- '00~'09년 기간 중 충남의 수출액은 연평균 9.8%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 무역수지 흑자는 20,299백만\$에 달함(수출규모 전국 4위)
- 다만, 충남 지역경제는 외부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충남의 수출 감소세는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2009년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2.1% 감소하였으며, 12월과 이듬해인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0%, 44.4%씩 감소하는 등 전국평균 감소율을 크게 상회



자료: <http://www.kita.net/>.

- 특히, 2008년 12월에는 충남의 주요 수출품목 중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감소율이 전년 동월 대비 39.0%~63.6%에 달함
- 이는 전략산업 중심의 충남 지역경제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임을 시사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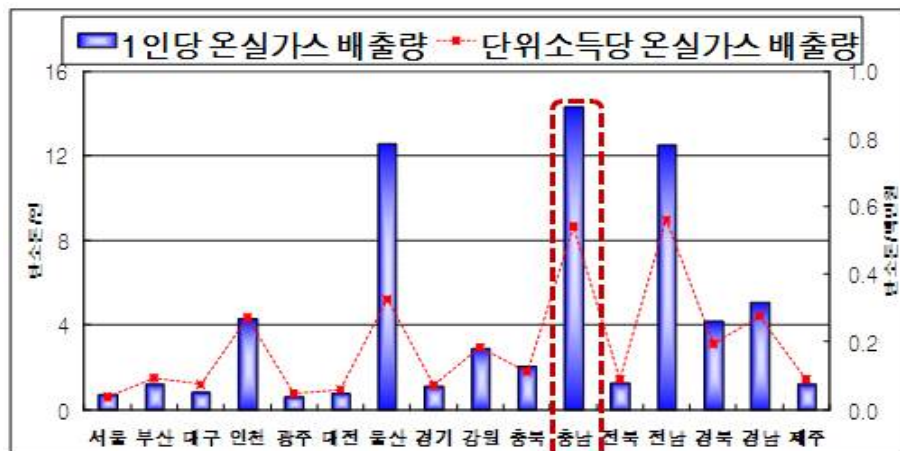
<표 4-2-1> 금융위기 당시 충남 주요 수출품목의 감소

2008.11				2008.12			
순위	품목명	금액(천\$)	증가율(%)	순위	품목명	금액(천불\$)	증가율(%)
	총수출	2,717,822	-42.1		총수출	2,089,321	-51.0
1	평판디스플레이	924,466	-20.4	1	평판디스플레이	671,786	-39.0
2	집적회로반도체	654,107	-58.5	2	집적회로반도체	456,835	-63.6
3	합성수지	110,053	8.3	3	합성수지	112,574	-5.8
4	승용차	108,494	-13.3	4	석유화학중간원료	58,228	-50.8
5	경유	70,151	22.4	5	중유	45,466	-64.3
6	제트유 및 등유	64,796	85.1	6	승용차	45,158	-62.5
7	자동차 부품	50,030	-52.8	7	자동차부품	44,724	-57.2

자료: <http://www.kita.net/>.

■ 전국 최상위 수준의 CO₂ 배출량

- 충남의 1인당 CO₂ 배출량은 15.21탄소톤(TC)으로 전국평균 3.34탄소톤의 4.6배에 달함(전국 1위)
- 소득대비 배출량은 0.51탄소톤/백만원으로 전국평균 0.19탄소톤/백만원의 2.7배 수준임(전국 2위)



자료: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2009).

- 이처럼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및 소득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남지역이 그동안 질적성장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시사함
-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 수단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로 인한 기업유치 난관

- 그간 수도권 기업의 충남 내 이전이 증가한데는 수도권 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2000~2005년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기업 중 총 844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이 중 14%에 해당하는 126개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
- 그러나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충남의 수도권 기업유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표 4-2-2>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구 분	규제완화 前		규제완화 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신증설 원칙금지	전 업종·규모 허용
	공업지역	첨단업종 신증설(1천m ² 이내) 기존공장 내 10개 업종증설	첨단업종 200% 이내 증설 기존공장의 부지내 전업종 증설
	기타지역	신증설 원칙금지	첨단업종 100% 이내 증설
성장억제권역	산업단지	신증설 원칙금지	전 업종·규모 허용
	공업지역	신증설 원칙금지	모든 첨단업종 규모제한 폐지 과밀·자연→성장내 공업지역이전
	기타지역	신증설 원칙금지	96개 첨단업종 200%이내 증설
자연보전권역	도시지역 개발사업	6만m ² 이내	도시지역 10만m ² 이상 비도시지역 10~50만m ²
	관광지조성	6만m ² 이내	상한폐지
	대형건축물	15천~25천m ² 이내	입지허용
	폐수비발생 공장신증설	1천m ² 이하	규모폐지

자료: <http://www.gg.go.kr/>

나. 과제

■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 제고

-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는 경제성장을 지속·유지함에 있어 제약요인(binding constraint)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생산적 활력을 부여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

■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 조화되는 질적성장 도모

- 제조업 중심의 양적성장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는 질적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공정을 개선함과 아울러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 신산업 육성

■ 지역의 공익 추구 및 경제적 약자계층을 지원할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

- 지역경제의 근간이나, 시장경쟁력을 상실하여 정체 내지는 침체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지역단위(area-based)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 기존 공급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토착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강소기업(small-giant)육성기반으로 활용

■ 민간주도의 고용 창출력(job creation capacity)확대

- 노동수요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신규기업의 역내 유인 및 육성이 요구되며, 노동공급측면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재진입을 진작하는 고용정책 수립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virtuous circle) 도모

- 제조업을 지원하는 생산자 서비스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아웃소싱(outsourcing)을 유도하되, 대도시 지향적 서비스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관련 서비스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적 구조 정착

2 비전과 전략

가. 비전과 목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충남경제 구현”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에 생산적 활력을 부여 함으로써 충남경제의 성장을 지속·유지(sustaining)함

구 분		내 용
비 전		지속가능한(sustainable) 충남경제 구현
	목표1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목표2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목표3	사회적 경제발전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목표4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확보
	목표5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구축

■ 목표1 :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민간주도의 고용 창출력(job creation capacity)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신규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 토착화 지원
- 기업의 노동비용 절감 및 취업지원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유도

■ 목표2 :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지역단위(area-based)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virtuous circle)도모
-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유도 및 자생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

■ 목표3 : 사회경제적 발전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 사회경제적 발전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및 지역공동체적 성격의 협동조합을 육성

하고, 이를 지원할 조직 및 추진체계 구축

- 전통시장 및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부여

■ 목표4 :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지역 전략산업의 고도화 및 융·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단위의 원활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 지역에서 강점을 가진 산업 인프라의 활용이 가능한 저탄소 녹색분야 집중·육성

■ 목표5 :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구축

- 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당진항에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을 확충
- 한·미FTA, 한·EUFTA에 따른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주체들간 의견수렴 및 협의기구 구성

나. 전략

■ 전략1 : 내실 있는 신규기업 유치 및 토착화

- 기업의 미흡한 공급사슬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신규기업을 유치하여 충남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되, 기업의 유치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기업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토대로 지역내 토착화 유도

■ 전략2 :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 실질적으로 청년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 청년 구인·구직간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청년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전략3 : RASS 시스템 구축

-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

■ 전략4 : 강소기업 육성기반 조성

- 우수 기술 및 시장경쟁력을 갖춘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자

금지원, 인력 및 기술개발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유도

■ 전략5 :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마련

- 대·중소기업간 상시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상생을 위한 자율적 협력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체계적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

■ 전략6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발의(local initiatives)에 기초한 충남형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토대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전략7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 보호

- 경제적 약자인 전통시장 및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서민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 자금지원 및 종합컨설팅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기반 도모

■ 전략8 : 충남 자립 광역경제권 구축

-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동사업발굴이 어렵고 동시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노정하는 기존 충청 광역경제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모델 개발 및 추진체계 개선

■ 전략9 :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신산업 육성

-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및 생산공정을 개선하는 녹색화를 추진하고, 기존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

■ 전략10 : 환황해권 전진기지 구축 및 FTA 대응체계 구축

-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전제로 양호한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당진항의 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해 환황해권의 물류거점으로 육성. 아울러 FTA 등 국제규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

3. 전략별 정책과제

구분 비전	내용
목표1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전략1	내실 있는 신규기업 유치 및 토착화
정책과제1	경영환경 지원
정책과제2	정주환경 개선
정책과제3	기업정착 지원
전략2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4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및 이행기업 인센티브 제공
정책과제5	산학연관인 청년취업 네트워크 구축
정책과제6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목표2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전략3	RASS 시스템 구축
정책과제7	Real service제공 및 After care 지원
정책과제8	Single gateway 및 Single window 구축
전략4	강소기업 육성기반 조성
정책과제9	강소펀드 조성
정책과제10	R&D 및 판로지원
전략5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마련
정책과제11	상생협력 협의회 구성·운영
정책과제12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결 유도
목표3	사회경제적 발전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전략6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과제11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정책과제12	사회적 경제 추진체계 구축
전략7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 보호
정책과제13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추진
정책과제14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조치 마련
정책과제15	자영업자 종합경영 컨설팅 지원
목표4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8	충남자립 광역경제권 구축
정책과제16	충청광역경제권 추진체계 구축
정책과제17	상생발전모델 개발 및 선도사업 발굴
전략9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 신산업 육성
정책과제18	녹색석유화학단지 조성
정책과제19	그린카 및 2차전지 산업 전략적 육성
정책과제20	녹색에너지 전담기구 설치·운영
목표5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전략10	환황해권 전진기지 구축 및 FTA 대응체계 구축
정책과제21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정책과제22	당진항 물류기반 확충
정책과제23	지역산업구조 재편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① 내실 있는 신규기업 유치 및 토착화

■ 기본방향

- 충남의 산업생태계의 공급사슬을 보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업유치는 지양
- 우수한 기업경영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토대로 내실 있는 신규기업을 유치단계부터 지속적인 애프터 케어(after care)를 통해 지역내 정착 유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경영환경 지원
 - －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영위를 위해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별로 인력, 물류, 금융, 기술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
- 정주환경 개선
 - － 주거·교육·문화·의료환경 개선 등‘삶의 질’확보를 통해 우수한 노동력 확보
- 기업정착 지원
 - － 유치기업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애프터 케어 프로그램 운용

②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 기본방향

- 창직·창업 활성화 등 청년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으로 청년 고용창출의 선순환적 구조 정착 유도
- 좋은 일자리(descent job)창출을 통해 청년층에 만연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현상을 완화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및 이행기업 인센티브 제공
 - － 도내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체중 근로자의 3%이상 신규채용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신용보증보험료, 사업장 환경개선 등 인센티브제공
- 산학연관연 청년취업 네트워크 구축
 - － 청년 취업관련 관계전문가,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구축

을 통해 청년취업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차원의 고용사업 활성화 도모

-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 도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만 18~39세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창업활동비,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③ RASS 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 기업지원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토착화 기반 마련
- 도내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기업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Real Service 제공 및 After Care 지원
 - 창업, 기술, 홍보·마케팅, 법률·회계, 특허 등 지원분야별 전문가 확보 및 맞춤형 상담기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서비스 공급기반 구축
 - 투자유치에서 정착까지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애프터 케어(after care) 프로그램 구비
- Single Gateway 및 Single Window 구축
 - 기업지원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간 상호연계를 위한 지원 상담과 중개기능을 담당할 원스톱 솔루션 플랫폼 구축
 - 비즈니스 링크를 구축하여 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④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 기본방향

-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 기술 경쟁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중견 수출기업으로 성장토록 각종 제도적 지원책 마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강소펀드 조성
 - － 지역내 기업과 도가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을 기술력 및 시장성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 R&D 및 판로지원
 - －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벤처프라자 등 판로지원

⑤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마련

■ 기본방향

- 판로, 기술, 인적자원 등에서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상생협력 협의회 구성·운영
 -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을 구축하여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결유도
 -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문화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간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⑥ 지역공동체 활성화

■ 기본방향

- 주민발의(local initiatives)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내생적 지역발전(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을 도모

- 민간주도의 고용창출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을 피하고 나아가 지역단위의 지속적·생산적 일자리로 확대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사회적 기업육성
 - －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마련과 범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립경영 지원
- 협동조합 육성
 - － 경제적 약자계층이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구매, 생산, 판매, 소비를 협동으로 영위토록 지역공동체적 조합 육성
- 추진체계 구축
 - － 충남도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충남 사회적 경제지원 민관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7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 보호

■ 기본방향

-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환경 개선, 고객 편의시설 확충 및 매출향상을 위한 경영혁신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 대규모점포 및 SSM 진입에 대응한 영세슈퍼·전통시장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추진
 - － 시설이 노후화된 도내 전통시장 60개소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마케팅 교육 등의 실시로 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조치 마련
 - － SSM 입점규제 조례 제정,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 및 SSM 진입에 따른 영세슈퍼·전통상인 보호
- 자영업자 종합경영 컨설팅 지원
 - － 컨설팅 지원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창업단계부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기본방향

- 3개 시·도간 공동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충청자립 광역경제권 구축
- 현행 광역경제권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된 광역경제시스템 모델 개발 및 적용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충청광역경제권 추진체계 구축
 - － 충청권 경제포럼을 구성·운영함으로써 3개 시도간 공동의 사업추진체계 구축
- 상생발전모델 개발 및 선도사업 발굴
 - － 기존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새로운 모델의 광역경제시스템 개발·적용

9]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신산업 육성

■ 기본방향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화(greening)를 추진
- 도내 자동차 및 부품,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부품소재 인프라를 활용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그린카와 2차전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녹색석유화학단지 조성
 - － 대산단지 내 입주업체 대상 부생가스 연료전환, 잉여수소 공급, LPG 직공급, 공업용수 통합공급, 열 통합공급, 공동 pipe rack 등 공동사업 추진
- 그린카 및 이차전지산업의 전략적 육성
 - －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기자동차 운행 인프라 구축 및 부품업체 고도화를 추진하고 그린카를 시범적으로 보급·운행
 - － SK에너지, 삼성SDI 등을 중심으로 2차전지와 이를 구성하는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광역권 단위에서 충북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실증단지 조성
- 녹색에너지 전담기구 설치·운영
 - － 도내 녹색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

10 환황해권 전진기지 구축 및 FTA 대응체계 구축

■ 기본방향

- 환황해 경제권 선도를 위한 산업 및 물류 전진기지 구축
- FTA체결에 따른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정책수립 및 대응 체계 구축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 원활한 해외기업 유치에 위해 물리적 조건(hardware)과 생산요소 조건 (software)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FDI유치활동 전개
- 당진항 인프라 확충
 - － 항만물류, 항만배후단지, 배후산업단지가 상호연계된 항만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확충 및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 강화
- FTA 대응체계 구축
 - － 성장잠재력을 갖춘 산업 관련 FDI 유치, 지역산업구조 재편,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업 지원, 경제주체들간의 의견수렴 및 협의기구 구성, 모니터링체계 구축

3. 정책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력 강화	○ 기업이전 보조금*	(억원)	150	714	857	857	900	100
	○ 토착화 지원	(건)	500	500	500	500	500	500
	○ 청년일자리	(개)	1,150	500	500	500	500	500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 강소기업 선정·육성	(개소)	10	25	25	25	15	20
	○ 상생협력체결	(건)		50	50	50		
	○ Single Window	(개)					1	1
사회경제적 발전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 사회적 기업 인증	(건)	20	50	50	50	30	20
	○ 시설현대화·경영혁신	(개소)	27	27	27	27	27	10
	○ 영세 자영업자 컨설팅	(건)		200	300	330	360	300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확보	○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고용	(명)	410	420	430	440	400	500
	○ 그린카 단지 조성	(개소)		1				
	○ 실증단지 조성	(개소)					1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 물류거점시설	(개)				1	1	
	○ 모니터링 시스템	(개)		1	1			

* :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탄력적 운용

3. 선진국형 맞춤형 복지 실현

① 여건변화 및 과제

가. 여건변화

■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복지수요 증가

-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로 가족의 자녀양육기능과 노부모, 장애인 부양기능 약화
- 1세대가구와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2·3세대가구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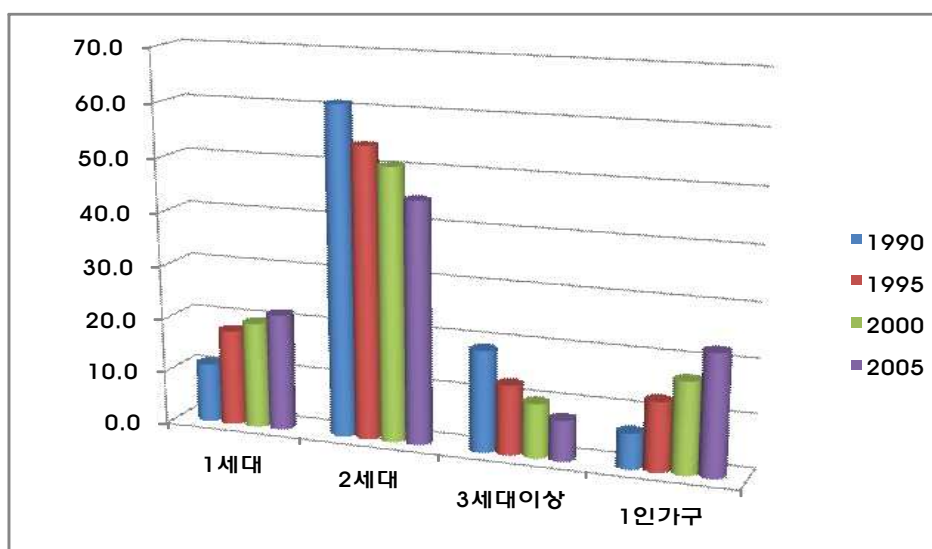
<표 4-3-1> 가구구성별 가구 및 구성비추이

(단위 : 가구)

구 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이상	1인가구
1990	478,579	52,953	292,588	90,491	31,566
1995	514,254	91,887	278,155	66,936	66,240
2000	591,971	116,942	299,805	59,905	101,097
2005	659,871	143,741	296,889	50,073	149,162

주) 1세대가구 : 동일세대로 구성, 2세대 : 2개 세대로 구성, 3세대 : 3개 이상 세대로 구성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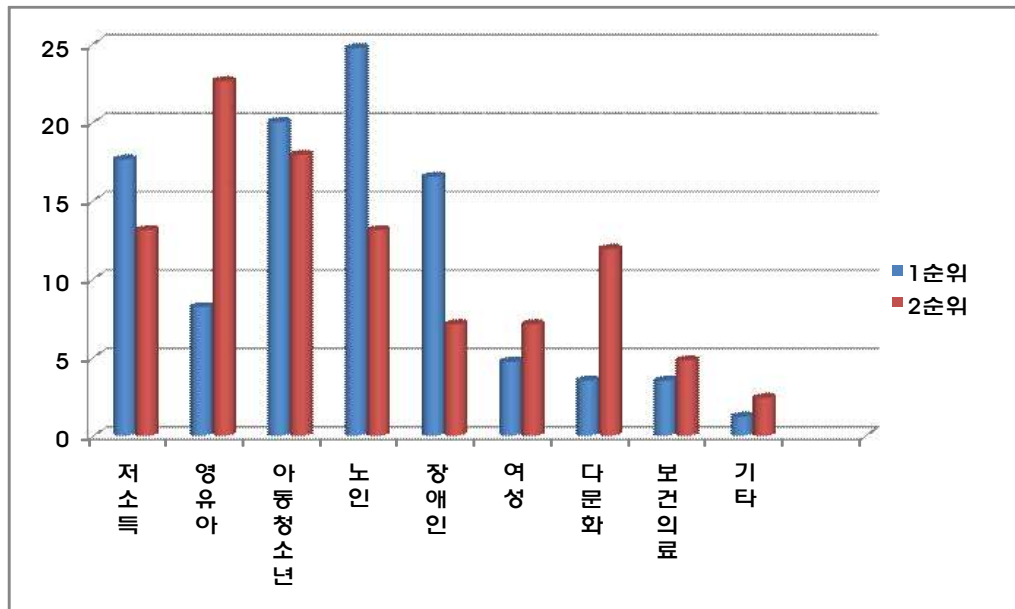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4-3-1] 가구구성별 가구구성비 추이

- 노인, 영유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요 증가
 - 충남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정책분야로 1순위 노인복지정책, 2순위 영유아복지정책을 들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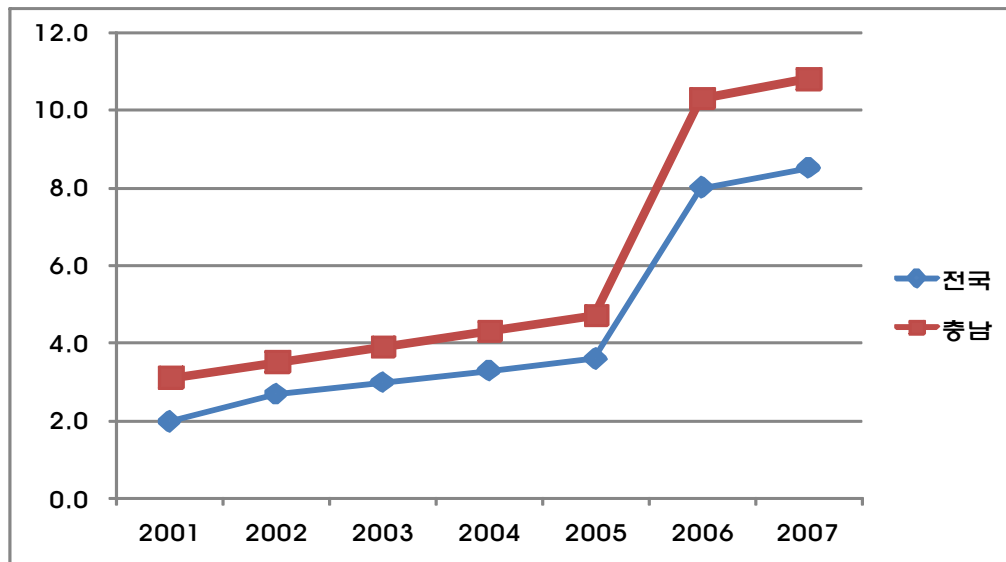


[그림 4-3-2] 충남의 주요사회복지 정책 문제

자료 : 충청남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 등록장애인의 증가 및 사회참여 욕구 증가
 - 충남도의 등록장애인은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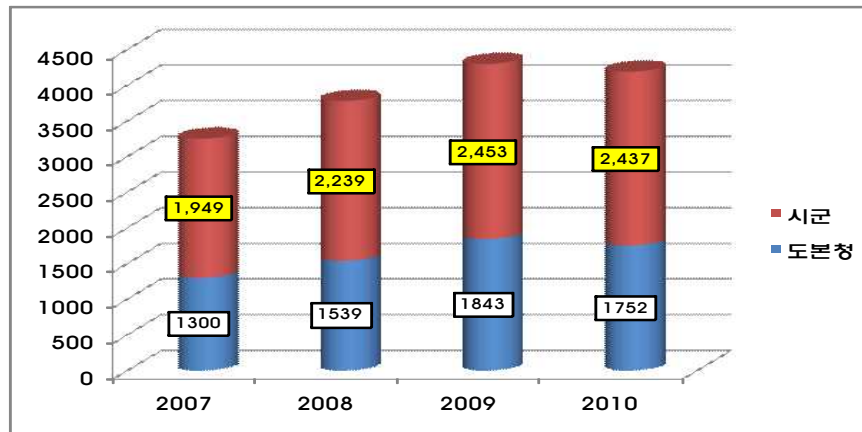


[그림 4-3-3] 등록장애인 비율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재정수요 증대

- 생산가능인구 및 유소년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 노인인구 부양에 따른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세대 간 갈등 야기
- 연금고갈, 건강보험 재정부담, 재정수지악화
 - 충남의 복지재정은 2007년 이후 증가해 왔으나, 2010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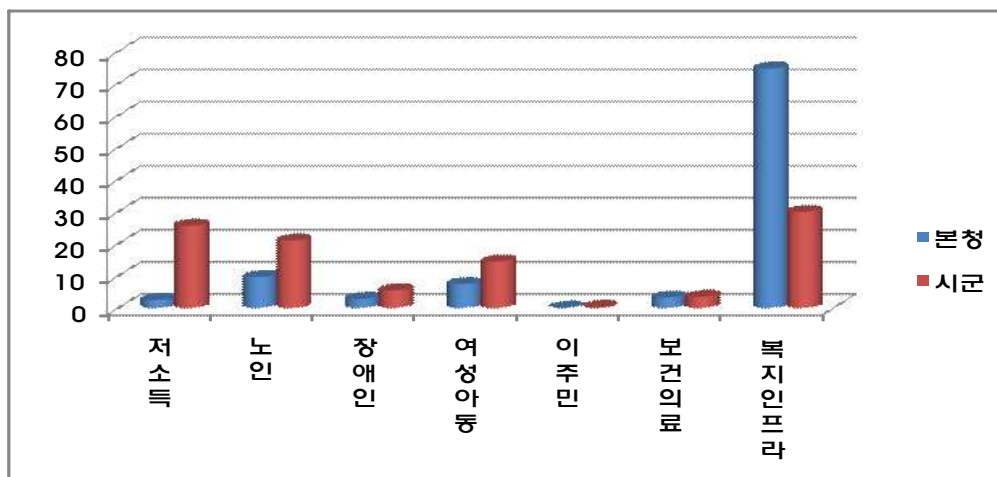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그림 4-3-4] 충남의 복지재정추이

- 2010년도 충남의 분야별 사회복지 예산은 지역사회인프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노인과 저소득, 여성아동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도 본청 예산은 지역사회복지 인프라가 약75%, 노인분야 9.6%, 여성아동분야 7.4 등의 순인 반면, 시군예산은 복지인프라 29.9%, 저소득분야 25.6%, 여성아동 14.4%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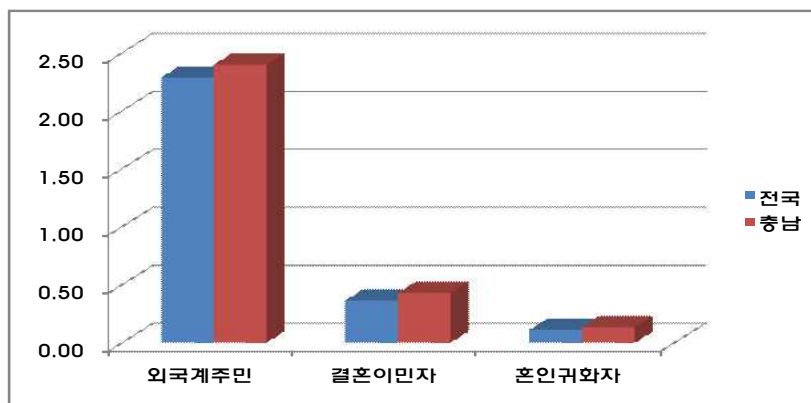


[그림 4-3-5] 충남의 분야별 복지재정 현황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통합 필요성 대두

-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에 따른 사회통합문제 대두
- 2010년 현재 충남의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8,781명으로 전체인구의 0.43%를 차지하여, 전국의 0.36%에 비해 높은 수준임
 - － 전체인구에 대비 국적취득자는 0.13%로 전국의 0.11보다 높음
 - － 이중 국적취득자는 31.3%인 2,748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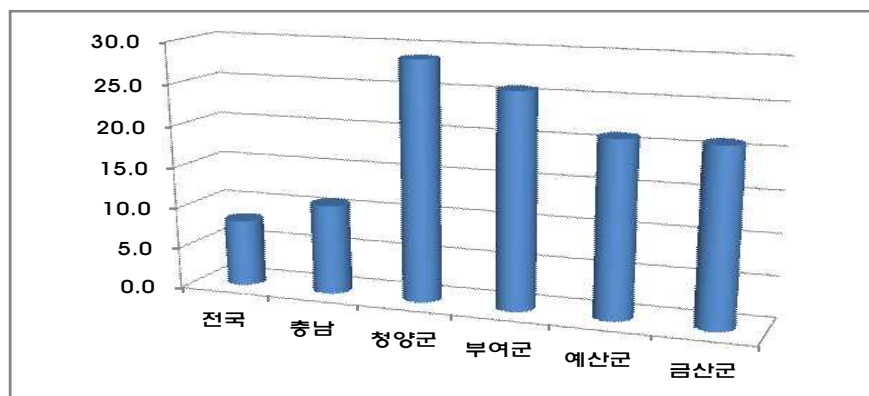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4-3-6] 충남의 결혼이민자 비중

- 2009년 기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 국제결혼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10.9% 수준임
 - － 전라남도(13.3%), 전라북도(11.9%), 충청남도(10.9%)
 - － 기초자치단체중 청양군(28.8%)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부여군(25.8%)이 세 번째, 예산군과 금산군이 각각 21.1%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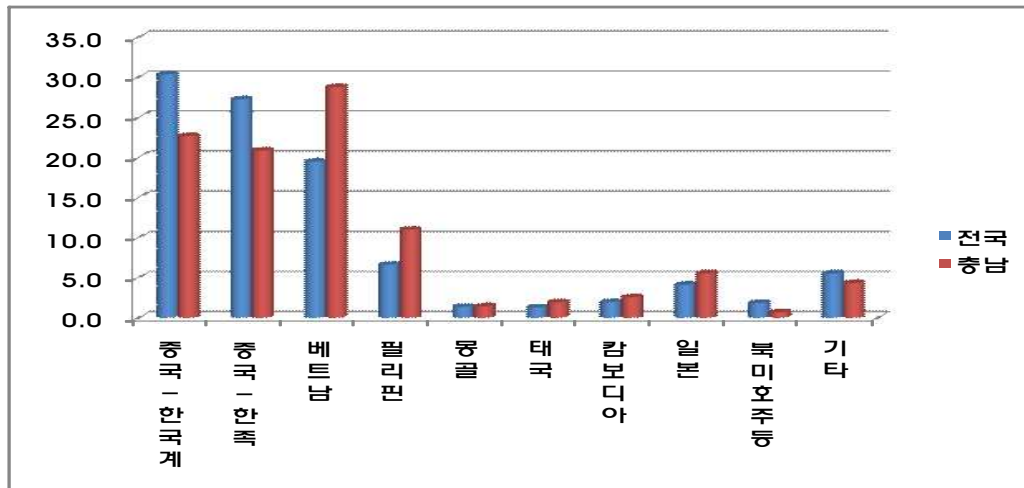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4-3-7] 충남의 국제결혼 비중

- 전국의 결혼이민자 131,703명중 출신국적은 중국(한국계, 한족 등)과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충남은 8,003명중 베트남, 중국(한국계), 중국(한족 등)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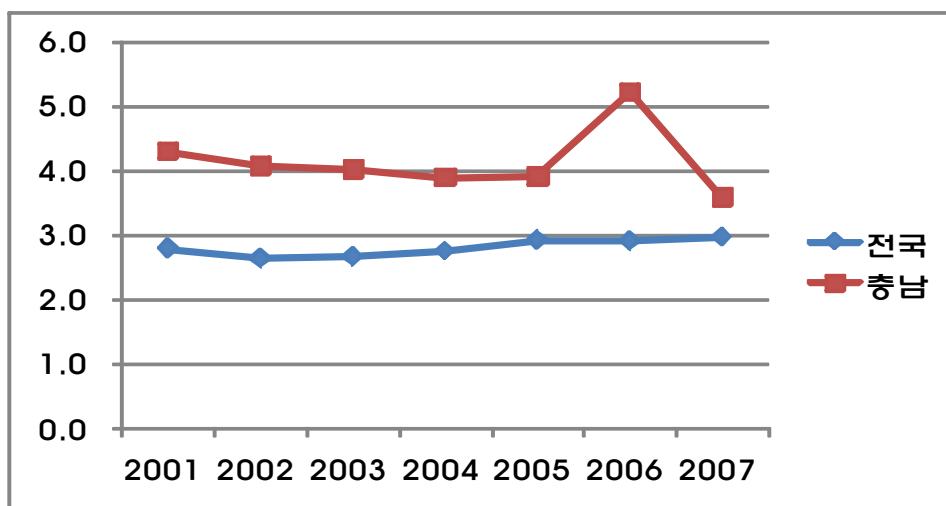


자료 : 200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10.

[그림 4-3-8] 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분포(2009)

■ 저소득층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소득분배구조 불균형 현상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로 사회적 복지 수요의 증대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빈곤층의 감소 예상
 - 충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전국에 비해 1.3%정도 높지만,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



[그림 4-3-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추이

나. 과제

■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환원 통한 국비지원 확대

-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은 국가가 사업규모를 확정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가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통한 국비지원확대 필요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 저출산이 일반화되고,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활력이 저하되고, 노인부양에 따른 경제활동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재정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출산과 양육을 위한 자치단체 책임 강화

- 가족의 아동 돌봄 기능을 대신할 사회보육(양육)의 중요성이 확대, 사회양육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충남도의 적극개입에 의한 보육문제 해결방안 마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권익 및 건강 증진, 복지전달체계 증진 등 복지서비스 강화

■ 가족친화적 사회복지 욕구에 유연한 대응

- 가족내 돌봄기능을 수행했던 다세대 구성이 감소하고 부부 등 1세대 가구 증가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적 복지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빈곤의 악순환 차단 및 사회경제적 비용감소를 위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프로그램 마련

■ 나눔과 상생의 행복충남 공동체 실현

-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의 마련

2 비전과 전략

가. 비전과 목표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 2020년의 충남도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과 영유아,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 위한 맞춤형 복지기반 구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등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충남형 복지공동체를 형성할 것임

구 분		내 용
비 전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목표1	사회복지기반 확충 및 참여형 복지체계 구축
	목표2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목표3	건강한 고령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립
	목표4	사회적 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 목표1 : 사회복지기반 확충 및 참여형 복지체계 구축

-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을 양적확충 및 질적 제고
- 자치단체, 기업 및 도민이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지역복지자원을 확대하고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충남형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목표2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보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보육 및 보육교사 지원확대
-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표3 : 건강한 고령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립

- 고령자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및 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식사제공 사업이나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권 보장과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영역의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목표4 : 사회적 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 저소득층, 여성,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보장,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자차단체의 책임성 강화

나. 전략

■ 전략1 : 행복충남 복지인프라 강화

- 저출산·고령화시대 다양한 복지요구에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복지기관 및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복지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협치 및 민간네트워크를 중시한 충남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

■ 전략2 : 도민공공의료 환경 개선

-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핵가족화시대의 대응한 간병부담 해소, 일년 365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전략3 : 나눔과 상생의 행복충남 만들기

-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지역에서 돕는다는 기조 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연계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 필요

■ 전략4 :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교사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출생 이후부터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다자녀가구의 보육료지원 확대, 보육교

사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강화함

■ 전략5 : 아동보호시스템 강화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한 지역 아동센터 확대, 방과 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 중복조정 및 협력 강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근무자 처우개선을 추진

■ 전략6 :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고령화사회 다양한 노인들의 건강 등 노인케어서비스를 공적영역에서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사회참여를 강화

■ 전략7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 전략8 :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인적자원 개발과 취업지원 기반체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참여의 질 제고 필요성

■ 전략9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정착지원, 자녀교육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친정부모 초청·모국방문 지원

■ 전략10 :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들인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환경공간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확대

3. 전략별 정책과제

구분	내용
비전	
목표1	사회복지기반 확충 및 참여형 복지체계 구축
전략1	행복충남 복지인프라 강화
정책과제1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정책과제2	통합상담 콜센터 설치
정책과제3	충남사회복지 공제회 설립·운영
정책과제4	충남형복지를 주도하는“행복비나리”설치·운영
전략2	도민공공의료 환경 개선
정책과제5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정책과제6	보호자없는 병실운영
정책과제7	심야시간대약품구입, 도민편의 제공
전략3	나눔과 상생의 행복충남 만들기
정책과제8	1도민 1행복구좌 만들기 운동
정책과제9	지역기업의 사회공헌활성화와 지원체계 구축
정책과제10	지역단체 및 기업 등 나눔과 기부운동 전개
목표2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제고
전략4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교사 지원
정책과제11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정책과제12	보육교사 처우개선
전략5	아동보호시스템 강화
정책과제13	지역아동센터 지원
목표3	건강한 고령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립
전략6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과제14	행복경로당 조성운영
정책과제15	노인복지시설 확충
목표4	사회적 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전략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정책과제16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확대
전략8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정책과제17	여성인력개발 및 가족지원
전략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정책과제18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전략10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정책과제19	사회적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정책과제20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지원확대

1 행복충남 복지인프라 강화

■ 기본방향

- 저출산·고령화시대 다양한 복지요구에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복지기반 및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상담콜센터 설치,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한 충남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 및 운영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 다양한 복지분야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및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총량을 확대하기 위한 광역단위 복지서비스 개발중심기관으로 육성
- 복지거버넌스 구축
 - 기업, 노조, 시민단체 및 출향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의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욕구의 효율적 수렴 및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
- 통합상담콜센터 설치
 - 보건·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운영
 - 도내 복지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
- 충남형복지를 주도하는“행복비나리”설치·운영
 - 충남도민의 욕구반영 및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제공
 - 지역사회부문 일자리 창출과 충남 사회적 기업과 연계를 위한 충남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행복비나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복지사업간 민간협치 및 복지네트워크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

② 도민공공의료 환경 개선

■ 기본방향

-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영유아무료 예방접종 확대, 핵가족화 시대 가족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확충, 심야시간 심야약국 운영 등을 추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
 - 영유아의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퇴치수준 95%이상으로 향상
 - 보건소·보건지소 기능보강 및 우리 마을 주치의제 도입으로 소외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
-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현으로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호서비스 향상
- 심야시간대 약품구입, 도민편의 제공
 - 심야시간 응급약품구입을 위한 심야약국 지정·운영으로 도민편의 및 건강증진

③ 나눔과 상생의 행복충남 만들기

■ 기본방향

-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지역에서 돕는다는 기조 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도민 1행복구좌 만들기 운동, 지역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지역단체 및 기업 등 나눔과 기부운동 전개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1도민 1행복구좌 만들기 운동
 - －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나눔운동 일환으로 추진
- 지역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 충남도내 입지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강화
- 지역단체 및 기업 등 나눔과 기부운동 전개
 -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나눔과 기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복지 문화형성 및 도민참여 증진

4]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교사 지원

■ 기본방향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출생 이후부터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보육교사의 자긍심 및 사기양양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시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 － 다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 위해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 만5세아 무상보육
 - － 저소득층 계층 만5세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으로 보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강화

5] 아동보호시스템 강화

■ 기본방향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한 지역 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 및 급식예산 우선편성,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교구·교재비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체제를 구축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 및 급식예산 우선편성
 - － 지역아동센터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급식지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교구·교재비 지원
 - － 지역아동센터 시설노후화에 대응한 환경개선과 아동학습에 필요한 교구·교재비 지원으로 보육환경의 질 향상

⑥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기본방향

- 고령화 사회 다양한 노인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경로당을 조성·운영하고, 독거노인 행복프로젝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및 정보화사업,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동목욕탕 및 이동빨래차 운영, 고령친화사업을 추진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행복경로당 조성 및 시설 증개축
 - － 읍면동별 1개소씩의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여가와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행복경로당을 조성·운영함으로써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 － 행복경로당을 이용하는 저소득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정보화사업 추진
 - －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노년신문 및 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정보습득기회 제

공 및 정보화 능력 향상 도모

- 노인복지종합복지관 건립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 1시군 1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이동목욕탕 및 이동빨래차 운영
 -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탕 및 이동빨래차를 운영함으로써 생활복지 향상
- 고령친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 고령자를 위한 거주공간, 체육 및 요양시설 등 고령친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기본방향

-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도모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사회적응과 지역내 자립생활프로그램 보급을 추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발달장애인 사회적응과 지역내 자립생활프로그램 보급
 - 발달장애인의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프로그램 발굴·보급을 통한 사회적응과 자립생활 도모
- 장애인 재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장애인 재활체육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및 연차적 개발·보급

⑧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 기본방향

-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인적자원 개발과 취업지원 기반체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참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기관확대,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등을 추진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기관확대
 - －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및 One-stop취업지원
-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 － 전업주부, 중고령 여성, 비정규직, 실직여성 등의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미설치지역의 직업훈련 교육 확대

⑨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기본방향

-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강화, 모국방문(또는 친정부모 초청) 지원·운영, 취업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교육프로그램 지원
 - － 방문교육 확대,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한국어 및 나눔화 이해교육을 강화
-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문 지원
 - －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을 지원
- 취업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보급
 -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취업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복지사각지대 지원강화

■ 기본방향

-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추진하고,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확대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사회적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구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생활 질 향상 및 복지체감도 증진
-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지원확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복지 발생시 생계, 의료, 교육비 등 지원
 - 일시적 생계난으로 인한 가족 해체, 빈곤층 전락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자금 지원

4. 정책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
사회복지기반 확충 및 참여형 복지체계 구축	○예방접종콜센터	(개소)	—	17	17	17	17	20
	○보건기관 신축	(개소)	8	5	5	5	5	5
	○건강관리센터 신축	(개소)	—	2	2	2	3	5
	○복지콜센터 설치 시·군	(개소)	—	4	8	16	16	16
				(시범설 치운영)		(전시군 설치)	(전시군 설치)	
	○심야 약국운영	(개소)	44	44	44	44	44	44
	○주건환경 개선사업 건수	(건)	—	500	1000	1500	2000	2000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의료기관 수	(개소)	—	202	전시군	전시군	전시군	전시군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 담률	(%)	—	100	100	100	100	100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제고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개소)	시범	158	158	158	158	158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수혜자 수	(명)	6,249	8,431	8,853	9,295	9,759	9,000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수혜자 수	(명)	3,346	6,967	7,176	7,401	7,623	7,00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	6,249	6,549	7,149	7,749	8,349	9,000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4대보험료 지원	(명)	—	4,361	4,579	4,808	5,048	8,000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대상자수	(명)	400	450	500	550	600	900
	○방과후 돌봄서비스 MOU 체결 건수	(건)	2	14	—	—	—	—
건강한 고령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건) (시간)	1,023 40이내	1,200 80이내	1,300 80이내	1,400 80이내	1,500 80이내	2,000 100이내
	○노년신문보급	(명)	5,580	5,670	5,780	5,880	5,980	8,000
	○노인행복폰 지급	(대)	—	3,000	6,000	9,000	10,000	20,000
	○노인종합복지관건립	(건)	—	1	1	1	1	1
	○이동목욕탕운영	(대)	51	51	51	51	51	51
	○이동빨래방운영	(대)	—	5	4	4	3	5
	○지역거점 경로당지정수	(개소)	—	63	50	50	50	50
	○무료경로식당운영수	(개소)	—	63	113	163	213	350
사회적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1도민 1행복구좌 수	(건)	100	500	2,000	5,000	10,000	30,000
	○지역기업 사회공헌 건수	(건)	10	100	200	300	400	1,000
	○나눔과 기부운동 참여단 체 수	(개)	10	50	100	200	300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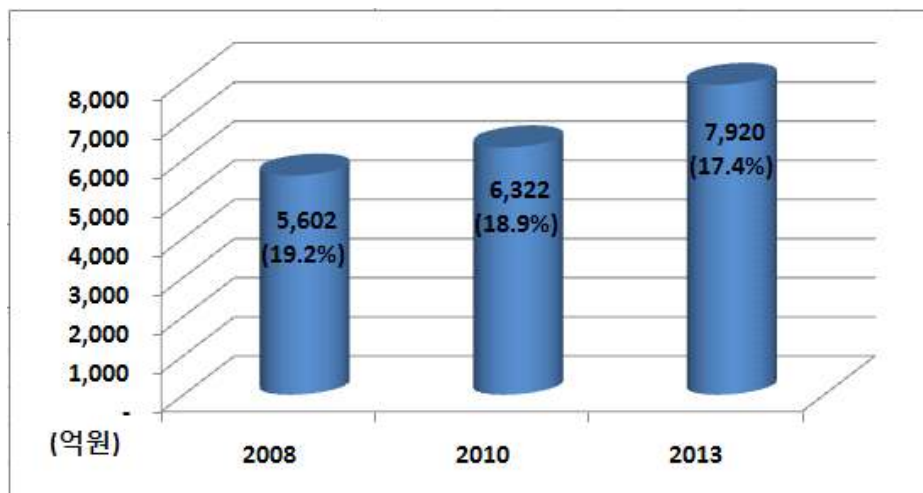
4.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① 여건변화와 과제

가. 여건변화

■ 농림해양수산부문의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현재 충청남도 농림해양수산부문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32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9%를 점유하여 사회복지부문 다음으로 큰 규모임
- 농림해양수산부문의 세출규모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08년 5,602억 원(19.2%) → '10년 6,322억 원(18.9%) → '13년 7,920억 원(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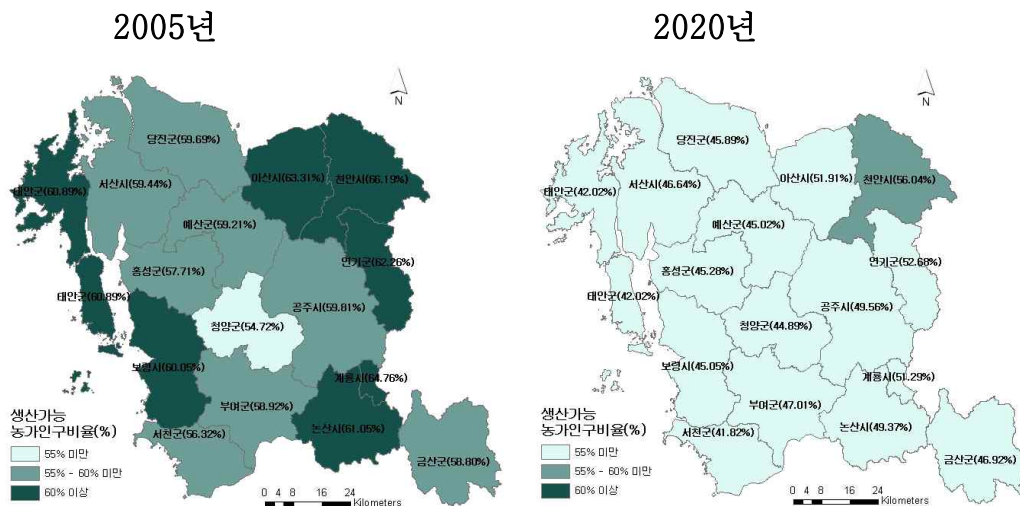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

[그림 4-4-1] 충청남도 농림해양수산부문 세출규모의 변화 및 전망

■ 농촌지역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농어업인력 감소

- 농가인구 감소와 농가인구 고령화가 더욱 진행될 전망
 - 농가인구 : '05년 466.0천명 → '20년 327.1명으로 감소
 - 어가인구 : '08년 26.2천명 → '20년 27.3명으로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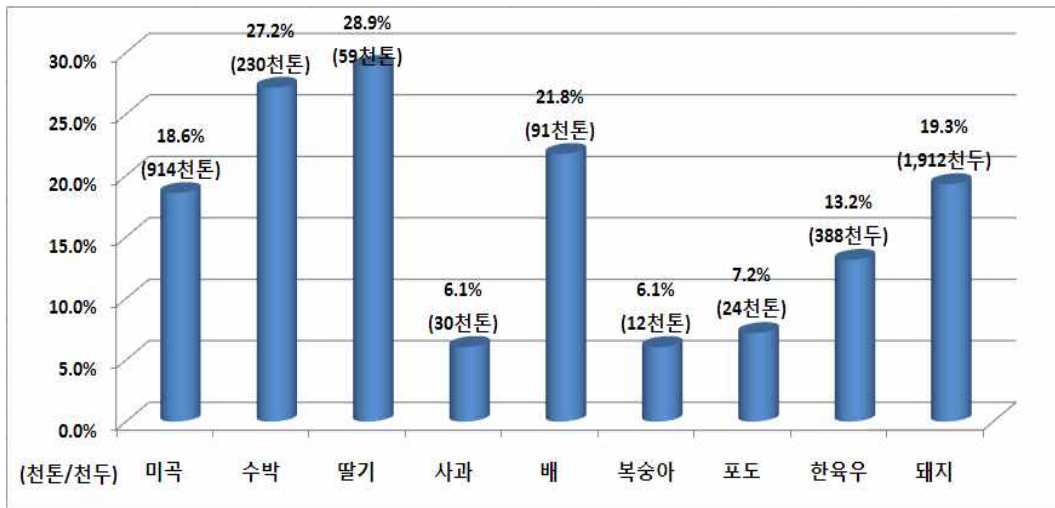
- 65세 이상 농가인구 : '05년 30.2% → '20년 43.4%로 증가 전망
-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핵심농업인력(20~49세)의 감소 전망
 - 생산가능인구 : '05년 268.7천명 → '20년 157.0명으로 감소
 - 핵심농업인력 : '05년 123.1천명 → '20년 77.9명으로 감소



자료 : 충청남도,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2009
 [그림4-4-2] 충청남도 시·군별 생산가능인구 변화 전망(2005-2020)

■ 쌀, 과수, 축산 등에서 전국 비교우위 품목 보유

- 충청남도의 2009년 미곡 생산량은 173,804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17.2%를 점유하고 있어 전국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높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음
- 과채류에서는 딸기와 수박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엽채류와 근채류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10% 이하임
- 과수에서는 천안-배·포도, 아산-자두, 논산-감, 연기-복숭아, 예산-사과가 전국 비교 우위를 점유하고 있음
- 축산에서는 한육우, 젓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의 사육두수가 전국 사육두수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통계자료, 2009, 2010

[그림4-4-3] 충청남도 주요 품목별 전국 대비 생산비율

■ DDA, FTA 진전에 따른 농수축산물시장 개방 확대

- 한미 FTA 체결, 한중 FTA 협상 등으로 지역 농수축산물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지역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됨
 - － 농산물은 채소와 과일 부문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됨
 - － 임산물은 목재류, 단기 소득 임산물 모두 큰 폭의 관세감축 및 생산 감소가 예상됨
 - －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확대로 지역의 한우,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수산물은 수산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로 지역수산업 전체가 위축될 전망

■ 웰빙문화 확산 및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 증대

- 웰빙문화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안전한 농수산물 및 농식품 수요증가에 대응한 농수산물 생산안전제도 확충이 요구됨
- 아울러, 유전자조작, 인공사료에 의한 광우병 파동 등으로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이 강화되고, 소득증가와 웰빙 생활양식 확대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임

<표 4-4-1>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 전망(전국)

(단위: 억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5년
총 계	7,788	9,130	11,069	19,833	31,577	43,240
곡 류	2,317	2,565	3,078	5,318	8,088	10,696
채소류	3,149	3,779	4,724	9,227	15,944	22,959
과실류	935	1,122	1,346	2,326	3,538	4,679
서 류	136	163	195	337	513	679
특작류	1,251	1,501	1,726	2,625	3,494	4,22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6, 2006.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 증대

- 지역의 향토지원을 산업화하여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시행



[그림 4-4-4] 충청남도 지역특화산업 관련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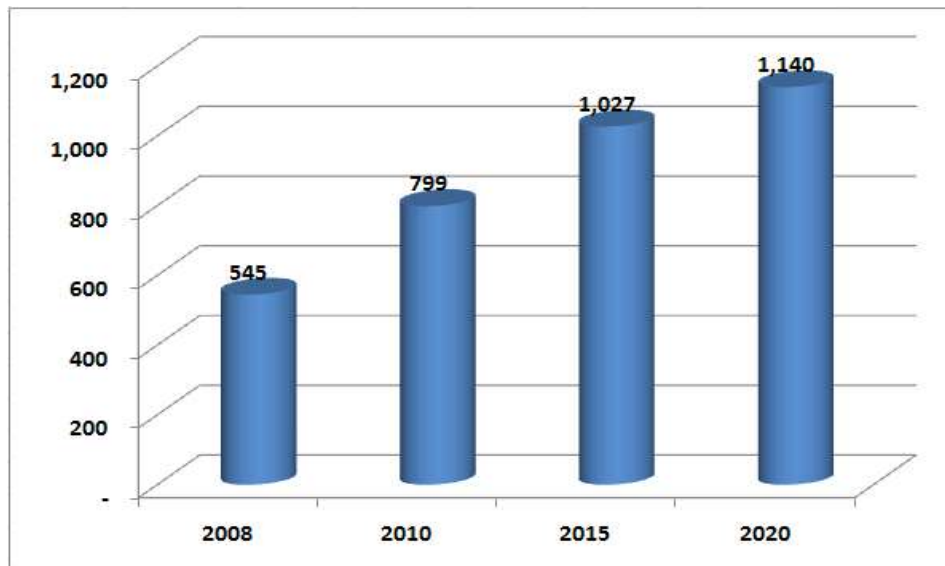
- 지역특화산업은 향토산업에서 강조한 ‘문화적 전통성’과 ‘역사성’이라는 제약을 뛰어넘고, 자연산업의 ‘지역내 자원에 의해 설립·운영’이라는 한계에서 또한 벗어나는 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역특화산업은 1·2·3차 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요구 증대 및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

- 농어촌 지역의 복지 향상 및 서비스기반의 확충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충남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농어업·농어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전망

-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귀농·귀촌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으로의 귀농·귀촌인구도 증가추세에 있음
 - 귀농인구 : '08년 545명 → '20년 1,140명으로 증가 전망



자료 : 충청남도,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2009

[그림4-4-5] 충청남도 귀농인구의 변화 전망

■ 지구온난화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 증대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조림정책 전환의 필요성 대두
 - － 장기적으로 조림수종 적지가 달라지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유휴토지 등 신규조림지 확보 중요시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활용 필요성 증대
 - －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에너지 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전략이 절실한 실정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과제

■ 참여와 소통의 농정체계 구축

- 변화되어가는 농정의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처하고, 농어업인의 참여와 유기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민간중심형 거버넌스체계 마련

■ 농어업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확보 및 체계적인 후계인력의 육성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농어업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리더와 후계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농수축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 농수축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품목별 집중육성을 통한 지역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및 농식품 생산

-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

- 지역별 비교우위품목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마련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교류 활성화

-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복지 및 서비스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귀농·귀촌인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농어촌지역 활성화

■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마련

- 축산바이오산업 육성 등 농림수산업의 저탄소 녹색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

2 비전과 전략

가. 비전과 목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지속가능한 농어촌 실현”

-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부문의 지역별 특화품목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수입시장개방 및 가격불안정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을 실현하고,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인력 육성, 서비스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조성

구 분		내 용
비 전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지속가능한 농어촌 실현
	목표1	농정체계 혁신 및 농어업 인력 육성
	목표2	농산업 및 농식품 경쟁력 강화
	목표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기반 지원

■ 목표1 : 농정체계 혁신 및 농어업 인력 육성

- 충남 농어업인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농정 방향을 정립
- 안정적인 농어업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농어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리더로서 농어업을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갈 혁신리더 육성

■ 목표2 : 농산업 및 농식품 경쟁력 강화

-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충남지역의 건강한 농식품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지역먹을거리체계 구축
- 지역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복합산업화를 지원하고, 가격 불안정 및 재해 등의 적극 대응하는 농수축산물 안전망을 구축

■ 목표3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기반 지원

- 열악한 농어촌의 서비스기반을 개선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활성화 도모
- 가축분뇨 자원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농어촌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

나. 전략

■ 전략1 : 혁신농정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 농어업인 중심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간중심형 거버넌스체계로서 농수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전략2 : 농어촌 혁신주체 형성 및 역량강화

- 영농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혁신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리더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전략3 : 농어업 신규인력 및 후계자 육성

- 농어업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으로의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는 등 새로운 신규인력 확보 및 농어업 후계자 육성을 추진

■ 전략4 :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

-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친환경농업 관련 조직 및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전략5 : 지역먹을거리체계 구축

- 지역먹을거리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지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순환형 농식품경제 활성화 도모

■ 전략6 : 농수축산업의 전략산업화

-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관련 지역특화품목 산업화 및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광역브랜드 육성 등 활성화 지원

■ 전략7 : 농수축산물 안전망 구축

- 쌀산업 수급안정과 농수산물 재해보험 확대로 안정적인 농산업을 육성하고, 가축 질병예방 및 후속조치 지원 확충으로 축산안전망 구축

■ 전략8 : 충남형 희망 농어촌 만들기 추진

- 열악한 농어촌서비스기반을 확충하고, 도농교류 확대 및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활력 넘치는 농어촌 조성

■ 전략9 : 농어촌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확충

- 축산분뇨자원화, 산림 등 탄소흡수원 확충, 저탄소 녹색마을 육성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녹색성장기반 마련

3. 전략별 정책과제

구분	내용
비전	
목표1	농정체계의 개편 및 농어업 인력 육성
전략1	혁신농정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정책과제1	농수산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략2	농어촌 혁신주체 형성 및 역량강화
정책과제2	영농인재 발굴 및 혁신리더 육성
정책과제3	실천학습 프로그램 도입
전략3	농어업 신규인력 및 후계자 육성
정책과제4	충남 농어업인력은행 설립 및 신규 취농(就農) 지원
정책과제5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목표2	농수축산물 및 농식품 경쟁력 강화
전략4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과제6	친환경농업 중장기계획 수립
정책과제7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 육성 및 표준매뉴얼 보급
정책과제8	친환경농업 규모화 및 기반 확충
정책과제9	친환경 희망마을 조성
전략5	지역먹을거리체계 구축
정책과제10	지역먹을거리체계 기본계획 수립
정책과제11	지역먹을거리체계 활동 지원
정책과제12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전략6	농수축산업의 전략산업화
정책과제13	지역특화작물 산업화 지원 및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정책과제14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 및 광역브랜드 육성
전략7	농수축산업 안전망 구축
정책과제15	쌀산업 육성 및 수급안정
정책과제16	농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정책과제17	상시방역시스템 구축 및 대가축 진료비 지원
목표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기반 지원
전략8	충남형 희망 농어촌 만들기
정책과제18	농어촌서비스기반 확충
정책과제19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과제20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전략9	농어촌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확충
정책과제21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정책과제22	작은 공간 활용 체육(쌈지)공원 조성
정책과제23	기후변화 대응 조림·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과제24	저탄소 녹색마을 육성

① 혁신농정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 기본방향

- 농어민을 중심으로 한 충남 농어업인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농수산혁신의 방향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도지사의 자문, 심의요구에 응하도록 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농수산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농업정책을 농민과 함께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충청남도 농수산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농어촌 혁신주체 형성 및 역량강화

■ 기본방향

- 산·학·연 협력에 의해 농어업 인재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농업인 역량강화교육의 주관기관이 많고 내용의 중복 등으로 교육의 성과 측면에서의 비효율적 측면을 개선하고 혁신주체 참가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영농인재 발굴 및 혁신리더 육성
 - － 농어촌지역개발 현황과 연계한 지역개발부문, 지역농협과 연계한 협동조합부문,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친환경농업단체와 연계한 친환경농업 조직화부문 등 부분별로 영농인재를 발굴하고 혁신리더로 육성
- 실천학습 프로그램 도입
 - － 리더십 함양교육, 자기정체성 교육, 지역자원 찾기, 분야별 전문지식 등 실제 지역역량 강화로 귀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농어업 신규인력 및 후계자 육성

■ 기본방향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업 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농어가 및 농어업 법인의 인력의 부족현황뿐만 아니라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시·군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취농(就農)의사가 있는 자(귀농·귀촌인, 이주여성농업인, 외국인 노동자, 고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에게 취업을 알선해 줌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충남 농어업인력은행 설립 및 신규 취농(就農) 지원
 - 충남 농어업인력은행 설립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어업 인력을 관리하고, 귀농 또는 영농의 의사가 있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및 알선함으로써 신규 취농(就農)을 적극 지원
-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귀농·귀촌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확대 조직하고 운영을 지원

④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

■ 기본방향

- 소비자와 도민이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생산기반(조직, 친환경농업단지 등)을 확충함으로써, 충남 농산물의 소비자 경쟁력과 고품질의 친환경 웰빙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친환경농업 중장기계획 수립
 -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중장기 계획 수립
-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 육성(40개소) 및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 친환경농업 규모화 및 기반 확충
 - －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27개소)하고 유기농산물생산단지를 조성(20개소)
- 친환경 희망마을 조성
 - － 친환경 농업을 테마로 ‘친환경 희망마을’ 조성(20개소)

⑤ 지역먹을거리 체계 구축

■ 기본방향

- 지역순환(사람, 돈, 생산물, 물질)과 지역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먹을거리체계(local food)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시장(local market)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순환 농식품경제(food economy)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지역·지구환경, 교육, 농업, 지역경제 회생, 식량자급률 제고 등 다각적인 목표달성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지역먹을거리체계 기본계획 수립
 - － 지역먹을거리 농식품경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내 농식품경제 관련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계획적인 지역먹을거리체계구축 관련 사업 추진
- 지역먹을거리체계 활동 지원
 - － 민간 주체들의 지역먹을거리체계 구축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 당진군 「학교급식센터」 시범운영 후 발전방안 모색 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급식지원센터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확립

⑥ 농수축산업의 전략산업화

■ 기본방향

- 지역 특화작물(보령 김, 논산 딸기, 청양 구기자, 금산 인삼 등) 산업화 지원으로 지역특화 小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화작물별 영농법인체의 체계적인 육성 및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의 브랜드 광역화 추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지역특화작물 산업화 지원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 딸기, 인삼, 구기자, 김, 젓갈 등의 지역특화작물 산업화 지원하고, 천안 병천 순대 웰빙 명품화, 논산 감와인 육성, 어리굴젓 산업화, 금산 안전인삼농식품 생산, 홍성 토굴새우젓 명품화 등 총 23개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원예 전문(수출)단지 육성
-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 및 광역브랜드 육성
 - 시·군별 주력작물을 특화한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건에 맞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전국단위 생산량 상위품목,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품목, 고부가가치화 유력 품목을 선정하여 대형마트 등에 광역브랜드로 출하

7 농수축산업의 안전망 구축

■ 기본방향

- 쌀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조성하고, 농수축산 재해가 증가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 불안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쌀산업 육성 및 수급안정
 - 명미화 단지 등 고품질 벼 재배단지를 확대 육성하고, 충남 쌀 직불금 제도 시행 및 충남 쌀 공동브랜드 판매회사 설립 등으로 쌀 수급 조정 및 소비기반 확대 추진
- 농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 최근 기상여건 불안정으로 농업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

- 상시방역시스템 구축 및 대가축 진료비 지원
 - － 상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및 집중방역을 추진하고, 대가축 진료비 지원을 통한 소사육 농가 재생산 인프라 구축

□ 8 충남형 희망 농어촌 만들기

■ 기본방향

- 열악한 농어촌 복지 및 서비스기반을 확충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및 도농교류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농어촌서비스기반 확충
 - －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충남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기준에 미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집중 지원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
 - － 충남형 농어촌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사회적 기업의 유형(예: 로컬푸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농어촌 보건·복지, 평생교육 및 대안학교,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농어촌 인재육성 등)을 구분한 후 각각의 유형별 체계적인 육성 추진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 － 농촌체험관광, 생태관광, 주말농장, 5도2촌, 1사1촌 자매결연 등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농촌복합산업을 적극 지원

□ 9 농어촌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확충

■ 기본방향

- 가축분뇨 자원화, 탄소흡수원 확충, 저탄소녹색마을 육성 등 기후변화 및 탄소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유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 개별농가에 가축분뇨 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분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 조직 및 시스템 구축하며, 축산바이오매스 활용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 실용화 추진
- 작은 공간 활용 체육(쌈지)공원 조성
 - 「작은 공간 활용 체육(쌈지)공원 조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확대하고, 담장허물기를 통한 도심 속의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하여 수목·초화류 식재, 쉼터, 편익시설 및 자연학습장, 생활권 녹지·공원과 연결한 명품가로숲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조림·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충
 - 바이오 순환림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벌채 제도」 도입·시행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자원활용 촉진 및 산림재해 요인 제거
- 저탄소 녹색마을 육성
 - 마을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의 자원화하고 태양열,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로 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탄소배출을 줄여가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

4. 정책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
농정체계 혁신 및 농어업 인력 육성	○ 농가인구*	(천명)	401	390	380	371	361	310
	○ 어가인구*	(천명)	26.6	26.7	26.8	26.9	27	27.3
	○ 농어가소득*	(천원)	38,650	39,672	40,694	41,716	42,738	48,870
	○ 혁신리더 육성	(명)	100	100	100	100	100	500
	○ 귀농·귀촌활성화 센터	(개소)	18	2	4	5	5	—
농산업 및 농식품 경쟁력 강화	○ 유기농 생산단지 육성	(개소)	—	5	5	5	5	10
	○ 친환경 희망마을 육성	(개소)	—	2	6	6	6	30
	○ 산지유통센터 설치	(개소)	5	—	1	1	1	6
	○ 학교급식 지원센터	(개소)	1	—	1	1	1	16
	○ 대가축진료비 보조	(천두)	1	36	36	36	36	4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천명)	2	2.5	3	3.5	4	5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기반 지원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개소)	—	2	2	3	3	6
	○ 명품가로숲 조성	(km)	23	53	42	50	35	50
	○ 저탄소 녹색마을 육성	(개소)	—	2	2	2	2	15

* 농가인구, 어가인구, 농어가소득의 2010년 지표는 추정치

5.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① 여건변화와 과제

가. 여건변화

■ 학교교육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필요

- 현재 충청남도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초등학생이 상급 교육기관에 입학할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중장기 적인 측면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

<표 4-5-1> 충청남도 초, 중, 고교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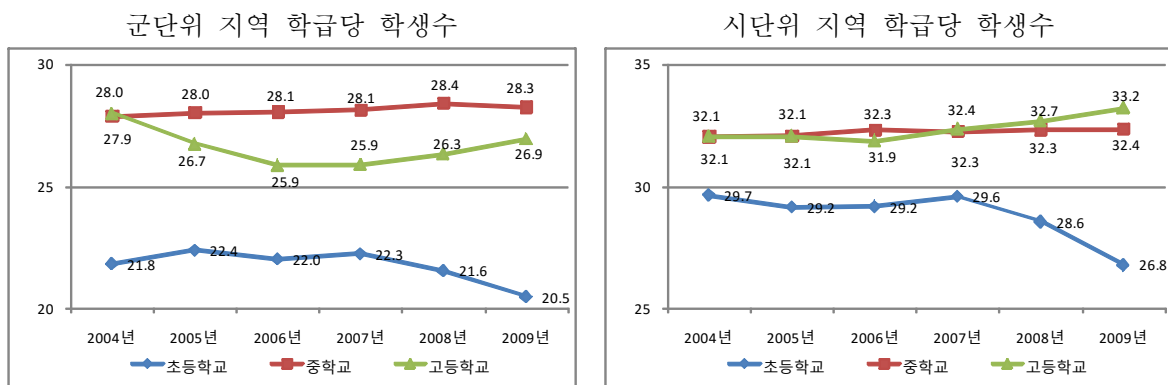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2004년	466	5,814	156,721	193	2,316	71,099	110	2,247	68,677
2005년	470	5,832	156,088	190	2,412	74,102	110	2,259	68,059
2006년	466	5,800	154,598	190	2,496	77,201	112	2,270	67,466
2007년	448	5,692	153,984	190	2,521	78,026	113	2,305	69,373
2008년	449	5,742	150,382	193	2,521	78,437	116	2,362	72,153
2009년	450	5,829	143,961	194	2,521	78,369	117	2,416	75,306

- 현재 충청남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이하로 나타남
 -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27.8명, 충남은 24.7명
 -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34.4명, 충남은 31.1명
 -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34.2명, 충남은 31.2명

<표 4-5-2> 충청남도 학교별 지역수준 분석(2009, 시/군단위)

구분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초등학교	3,474,395	143,961	124,892	5,829	27.8	24.7
중학교	2,006,972	78,369	58,396	2,521	34.4	31.1
고등학교	1,965,792	75,306	57,524	2,416	34.2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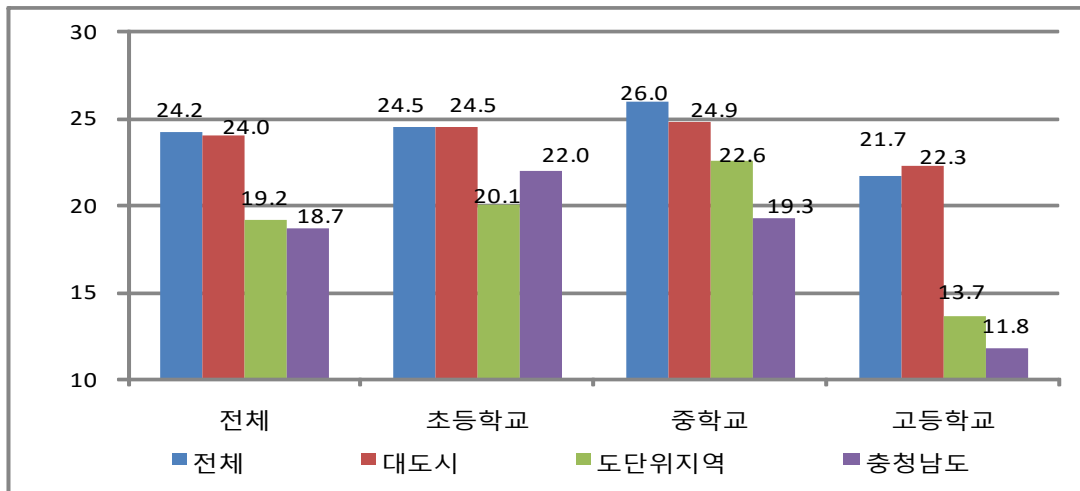
-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09년을 기준으로 군단위 지역 20.5명, 시단위 지역 26.8명 수준)
- 중학교의 경우 군단위지역은 2009년을 기준으로 28.3명, 시단위지역은 32.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군단위지역 26.9명, 시단위지역 32.2명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에서는 지속적인 학생인구 감소와 연계한 교육기반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시단위 지역과 군단위 지역의 차이를 감안한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



[그림 4-5-1] 학교단위/지역단위별 학급당 학생수

■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교육 시장의 확대

- 2010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국가 중 1위로 나타남
 - 고등학교 이수율(79%), 고등교육 이수율(37%)(OECD 평균은 71%, 28%임)
-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사교육시장의 확대로 이어짐
 - 국내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GDP의 3.8%수준으로 40조4천억원 규모로 추정(현대경제연구원, 2010.5: 사교육시장의 현황과 대책)
- 사교육시장의 증대로 인한 교육양극화 초래
 - 국내 초중고교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수준이며, 교육비는 24.2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68.5%의 참여와 18.7만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
 -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현황은 700만원이상이 가구가 47.4만원, 200-300만원 수준인 가구의 경우 17.7만원으로 나타나, 관련 분야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조사(통계청, 2009: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 사교육 시장의 성장으로 공교육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수행



[그림 4-5-2] 지역단위별 사교육 투자금액(월평균)

주)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도단위는 광역자치단체 중 도단위 지역을 선정

■ 평생학습 개념의 도입과 확산

-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증대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 고령화와 같은 사회의 변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 증대
- 평생학습 추진체계의 변화
 - 교육청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
 -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제도, 예산, 조직에 대한 변화 추진
- 충청남도 평생학습 추진현황(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통계, 2009년)
 - 충청남도는 평생학습기관 101개소, 3,801개 프로그램, 참여자 105,680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는 전국단위 기준으로 기관수 4%, 프로그램수 2.8%, 참여자 0.5%에 해당
 - 그러나 도단위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모든 지표가 도단위 지역의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5-3> 2009년 평생교육 일반현황

(단위: 명)

구 분	기관수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교강사수	사무직원 수
전체	2,807	136,123	22,454,539	57,177	12,873
대도시	1,609	90,529	20,895,134	35,531	8,496
도단위지역	1,198	45,594	1,559,405	21,646	4,377
충청남도	101	3,801	105,680	1,832	391

주)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기록

- 충청남도의 경우 다른 도단위 지역에 비해 양호한 평생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요구확대와 연계한 지속적인 기반구축 강화가 필요
- 충청남도의 평생학습 기반 강화와 지원을 통한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부문 관심 증대

-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
 - 민선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이 분리
 - 그러나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
- 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업무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 중앙정부의 다양한 교육관련 사업에 자치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
 - 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업무가 단순 지원기능에서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 운영, 사업 발굴 및 개발로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

<표 4-5-4> 충청남도 교육분야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10년 예산액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2,565,000
○지역명문고 육성	800,000
○방과후 중국어학교운영	128,000
○중국어캠프 운영	40,000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원어민 교사 배치	315,000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지원	500,000
○청양대학 육성 지원	5,000,000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지원	670,000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400,000
○전도민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160,000
○충청남도 장학회 운영 지원	580,000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지원	800,000
합계	12,498,000

- 교육관련 제도 및 전담부서 운영 증가
 - 증가하는 교육관련 업무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조례, 평생학습조례 및 학교급식조례 등을 추진
 - 교육관련 전담부서의 신설 및 확대가 진행
-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은 충청남도를 비롯한 민선5기 자치단체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교육분야 참여가 예상
 - 현재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경감, 무상급식, 평생 교육, 인재양성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
- 향후 충청남도에서는 관련 사업의 확대에 의한 행정 및 재정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직업창출과 연계한 교육사업 활성화

-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형 교육사업 확대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육사업에 자치단체의 참여가 증가
- 기업경쟁환경의 변화는 종사원의 높은 이직률
 - 이직자 및 이직준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현재 충청남도의 경우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더불어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남
 - 산업인력 mismatch가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는 전략 필요

<표 4-5-5> 충청남도 전략산업 학력별 부족현황

구분	고졸이상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계	
	부족인력	부족률	부족인력	부족률	부족인력	부족률	부족인력	부족률	부족인력	부족률	부족인력	부족률
전자정보기기	1311	9.7	228	8.1	214	6.2	15	4	0	0	1767	8.7
농축산바이오	24	1.1	0	0	70	10.2	4	2.2	0	0	98	2.7
자동차부품	276	2.4	86	4.2	130	4.5	10	3.9	1	2	503	3
첨단문화	0	0	40	23.1	53	13.7	21	49.7	4	54.9	118	16.5
계	1611	5.9	354	6.5	467	6.3	50	5.8	5	2.1	2487	6

자료: 2009년 충남전략산업 기술인력 수급현황 조사 및 로드맵 구축,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도의 경우 대졸자의 지역기업 취업률이 가장 낮음
 - 4년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률 전국평균 50.2%(충남 21%)
 - 2년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률 전국평균 61.6%(충남 37.1%)

<표 4-5-6> 대학졸업자들의 출신학교 취업근무지 비율

구 분	4년대학	2년대학
전 국	50.2%	61.6%
대도시	56.2%	66.2%
도단위	45.6%	58.0%
충청남도	21.0%	37.1%

나. 과제

■ 교육의 집중과 양극화 극복

- 교육의 중심이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사교육시장의 확대에 의한 다양한 사교육비 절감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족의 수입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수준의 차이가 발생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공교육강화 지원을 통한 교육양극화 극복과 행복한 교육 지원이 필요

■ 자치단체의 교육부문 참여를 통한 승수효과 도출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교육협력협약 및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관 운영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2007년 교육청과 교육협력협약을 수행하여,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현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에 교육청의 T/F팀이 업무 수행)
 - 이와 같은 업무추진 환경은 지역에서 교육과 행정이 연계한 우수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조직간 갈등 소지가 존재
- 또한 자치단체의 교육참여로 인해 학부모 및 학생층과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행정의 범위에서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기회는 한정되어 있음(교육 관련 집단과 네트워크 강화전략 필요)

■ 평생교육에 대한 자치단체 역할 증대

- 평생교육법의 개정(2007. 12, 2008. 2)으로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책무가 강조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그에 따르는 다양한 변화가 요구
 - 평생교육조례제정,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진흥계획 수립, 진흥원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 등
- 충청남도는 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이 2회 지원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사업으로 인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추진되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증대, 수명연장과 같은 사회적 변화는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평생교육 운영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한 실정

■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과 개인의 발전 도모

- 충청남도의 경우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대학졸업자는 1년 3만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국가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 중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인력 양성사업 등이 대표적
 -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전문계고교 해외인턴십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지역과 개인,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배분, 활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2 비전과 전략

가. 비전과 목표

“충남의 미래를 창출할 「행복교육」 실현”

- 2020년도에는 충남도민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육기회가 활성화됨으로써 계층간·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기반사회 및 충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구 분		내 용
비 전		충남의 미래를 창출할 「행복교육」 실현
	목표1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양극화 극복
	목표2	지역주민의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기회 제공
	목표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충남교육 추진
	목표4	교육을 통한 지역과 개인의 상호 발전 도모

■ 목표1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양극화 극복

-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교육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교육 적극지원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역량 집중
- 지역 유관기관의 능동적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 도모

■ 목표2 : 지역주민의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기회 제공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기반 구축
-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밀착형 교육서비스 지원
- 충청남도 평생교육 기반구축을 통한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

■ 목표3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충남교육 추진

- 행정 및 교육 기관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승수효과 도출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추진

■ 목표4 : 교육을 통한 지역과 개인의 상호발전 도모

- 교육과 직업의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인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 조성
- 교육을 통한 개인과 지역의 공동발전 지원

나. 전략

■ 전략1 : 행복충남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 충청남도의 미래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초, 중, 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진행하여,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만족도 향상을 지원

■ 전략2 : 지역농업과 연계한 의무급식 추진

- 지역 초등 및 중학생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학교 급식을 지원을 통한 행복한 학교 생활 지원과 지역 가정의 교육비 절감
-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활용한 급식지원을 통해 지역의 농어촌과 더불어 잘 사는 충남건설

■ 전략3 : 통합적인 장학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의 우수인재,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기존의 지역 장학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

■ 전략4 : 기반구축을 통한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

-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주민과 사회에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평생교육 제공

■ 전략5 : 도민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확대

-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연령, 지역과 같은 학습자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 충청남도의 지역이 갖는 특성을 활용한 충남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전략6 : 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의 교육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자치단체의 지원과 참여가 확산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의 교육청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전문가와 연계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여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수행

■ 전략7 :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인재‘개발-배분-활용’ 연계

- 지역인재에 대한 육성, 배분, 활용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 지역의 특성과 발전방향과 연계한 인재육성 사업 추진

■ 전략8 : 교육기관-기업연계를 통한 기업문제 해결 산학협력 추진

- 지역의 전문기술인력이 국내외 인턴십을 통해 기술을 연마하고, 지역의 기업에서 기업과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실업문제, 지역기업의 전문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계형 인재육성 사업 추진
- 특히, 지역의 기업이 갖고 있는 현안(R&D, 운영 등) 중심의 접근을 통해 지역의 전문인력이 지역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제공

3. 전략별 정책과제

구분	내용
비전	
목표1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양극화 극복
전략1	행복충남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1	충남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정책과제2	행복교육 통합지원센터
정책과제3	무지개 캠프운영
정책과제4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정책과제5	농어촌지역 교육지원 확대
전략2	지역농업과 연계한 의무급식 추진
정책과제6	친환경 의무급식 수행
전략3	통합적인 장학지원시스템 구축
정책과제7	‘충남희망교육재단’설립
정책과제8	서울지역 충남학사 설치
목표2	지역주민의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기회 제공
전략4	기반구축을 통한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
정책과제9	평생교육 기반구축
전략5	도민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확대
정책과제10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목표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충남교육 추진
전략6	교육 거버넌스 체계구축
정책과제11	‘충남교육발전협의회’구성
정책과제12	충남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목표4	교육을 통한 지역과 개인의 상호발전 도모
전략7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개발-배분-활용’연계
정책과제13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전략8	교육기관-기업연계를 통한 기업문제 해결 산학협력
정책과제14	대학-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정책과제15	인턴십사업(국내/국외)

① 행복충남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 기본방향

- 자치단체가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초, 중, 고 교생이 지원의 대상
- 관련 사업이 학생의 학업참여에 직접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도움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모델 창출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
 - 사업추진은 신청을 통한 공모형식으로 운영
- 행복교육 통합지원센터
 - 기존 교육지원사업과 차별화를 두고, 정서발달·문화체험·지역배우기와 같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역사회의 교육관련 기관(아동센터, 민간공부방, 시민사회단체)의 교육기능 조직 및 지원
- 무지개 캠프운영
 - 방학기간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자기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
 - 혁신형 행복학교, 농어촌지역 교육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연계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연차별 확대 지원, 학습의 효율성 향상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수행
- 농어촌지역 교육지원 확대
 -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및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지원

② 지역농업과 연계한 의무급식 시행

■ 기본방향

- 초중학생(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급식 시행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도모
-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수행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친환경 의무급식 시행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급식 지원사업을 새롭게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포함하기 위한 연차적 확대 수행
 - 친환경의무급식을 위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③ 통합적인 장학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 지역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통합기구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효과성 및 효율성 극대화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충남희망교육재단’설립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기존의 유관업무를 통합 관리
 - 장학사업, 학사관리, 미래인재 양성 및 관리 부분 사업 추진
- 서울지역 충남학사 설치
 - 충청남도 주민의 서울지역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 확보
 - 지역 장학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충남희망교육재단’)

④ 기반구축을 통한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

■ 기본방향

- 원하는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구축
-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이 상호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이 양질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평생교육기반구축
 - 지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평생교육 진흥계획, 평생학습센터, 진흥원 운영 등 평생교육 추진과 관련된 기반 조성사업을 포함

⑤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본방향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평생교육 추진 전략 변화 필요
- 평생교육을 통한 교양, 직업, 전문교육 등 폭넓은 교육을 제공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지원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포함

⑥ 교육 거버넌스 체계구축

■ 기본방향

- 지역에서 추진되는 교육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 교육관련 정책 및 사업을 중장기적 측면에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충남교육발전협의회’구성
 - 교육분야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 충청남도, 교육청을 비롯한 수혜대상자인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 관련되어 자문, 심의 기능을 수행

- 충남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교육관련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7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인재‘개발-배분-활용’연계

■ 기본방향

- 지역인적자원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지역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적자원 수급계획 수립 및 관련 인적자원양성 및 배분, 활용 프로그램 개발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 지역인적자원의 수요 및 공급 지표 조사, 인적자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인적자원 배분 및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
 - 중앙의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사업 및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 운영

8 교육기관-기업연계를 통한 기업문제 해결 산학협력

■ 기본방향

- 지역의 기업과 교육기관을 직접연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관련 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의 기술력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생의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대학-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 지역대학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 및 마케팅 등 기업의 현안해결과 관련 인적자원의 취업을 도모
- 인턴십사업(국내/국외)
 - 기업에서 현장 인턴십을 통해 개인의 역량발전 및 취업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인턴십지원 사업 추진
 - 국내 기업과 연계한 취업 중심형 인턴십사업과 전문계 고교생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해외인턴십 사업 등을 추진

4. 정책지표

전략	지 표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양극화 극복	○ 행복학교 육성	개소	—	5	10	15	20	25
	○ 학습준비물 지원(인원)	천명	—	74	140	전체	전체	지속
	○ 학습준비물 지원(학교)	개소	—	346	430	전체	전체	지속
	○ 학농어촌지역 교육지원	억원	—	10	20	30	40	50
	○ 친환경 무상급식(인원)	천명	—	139	152	173	217	지속
	○ 친환경 무상급식(학교)	개소	—	430	525	571	620	지속
	○ 수해인원	명	1,302	1,350	1,400	1,550	1,700	2,500
	○ 장금 액수	백만원	743	760	800	900	1,000	1,500
지역주민의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기회 제공	○ 평생교육센터 건립 지원	개소	—		2	4	8	전시군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	3,800	3,850	3,900	3,950	4,000	5,000
	○ 대상인원	천명	105	110	115	120	125	200
교육을 통한 지역과 개인의 상호발전 도모	○ 취업교육	명	—	100	100	100	100	200
	○ 고용인턴십(국내)	명	—	40	40	40	40	50
	○ 해외인턴십	명	—	40	40	40	40	40
	○ 시범사업 운영	개	—	3	4	5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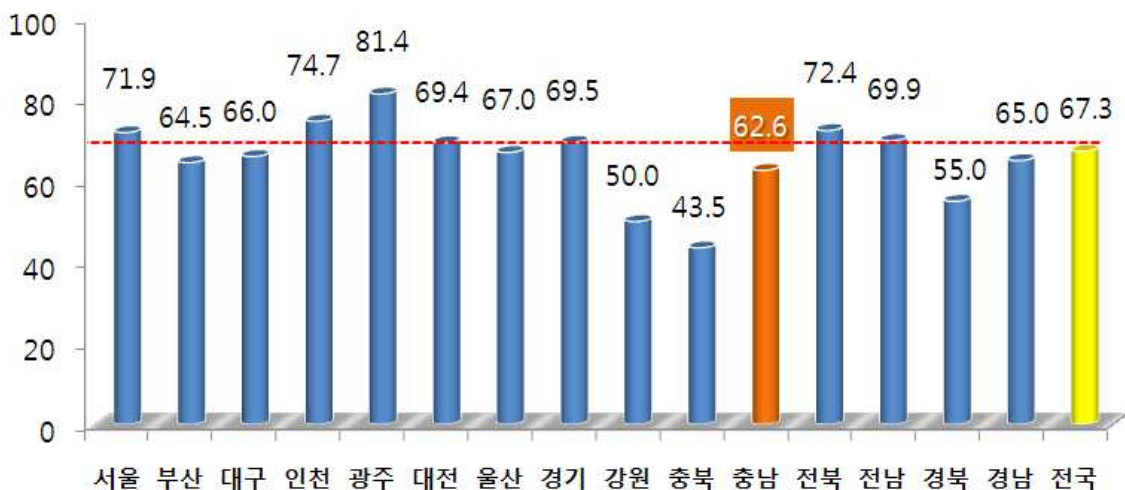
6.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조성

① 여건변화 및 과제

가. 여건변화

■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역민 문화참여 요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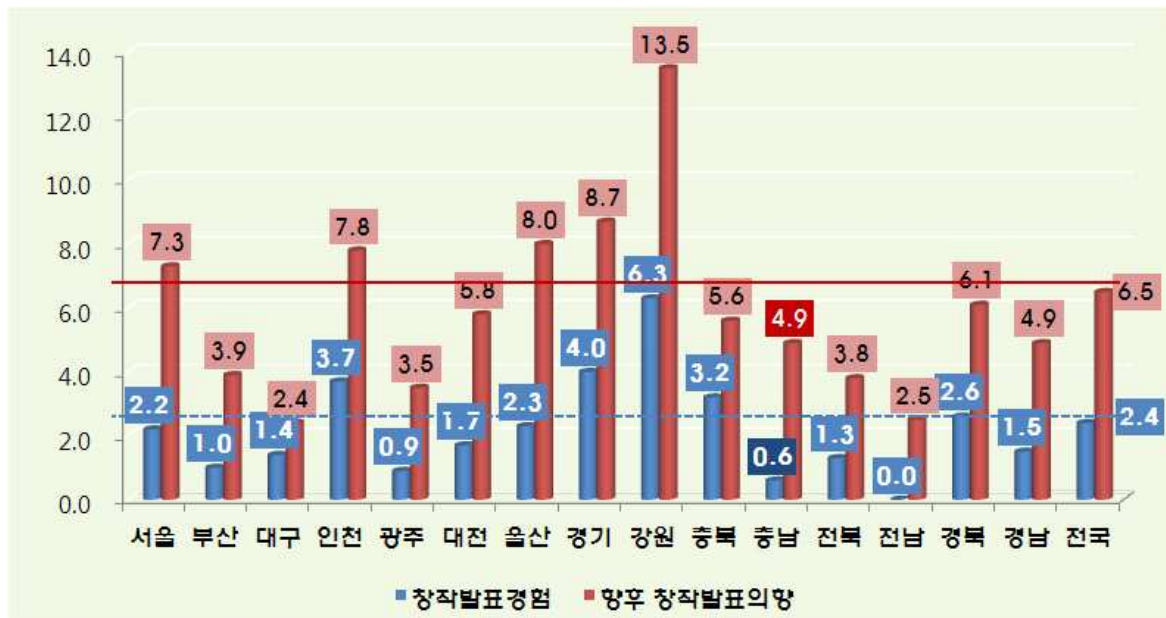
-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충남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등 2개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
- 지역이 세계화에 대응하는 단위 주체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문화’가 곧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각인됨
- 그러나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의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전국 평균인 67.3%보다 낮은 문화예술 관람률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4-6-1] 시도별 문화예술 관람률

- 참여의향에 있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의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창작발표경험 및 향후 의향 조사 따르면 경험에 있어서 충남은 0.6%로 매우 낮은편이지만 향후 의향은 4.9%로 8배 이상의 의향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4-6-2] 시도별 창작발표경험 및 향후 의향

- 이는 문화기반시설 증가율은 2003년 대비 2008년 충남이 51.9%로 시설부분에 대한 증가는 되었지만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의 부족에 의한 결과로 더 많은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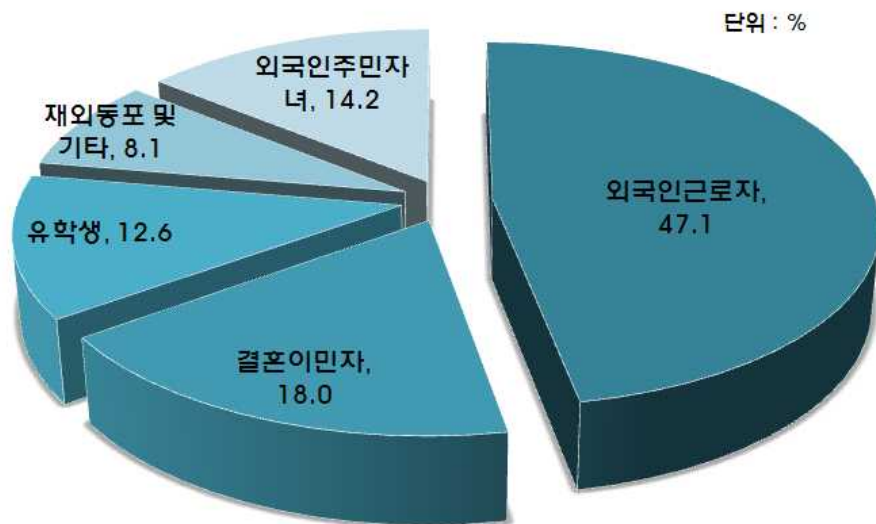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4-6-3]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받은 경험과 수강의향

■ 국내거주 외국인 문화관광 수요 증대

- 해외이주,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면서 문화다양성 시대로의 전환과 문화다원주의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충남의 외국인주민은 주민등록인구가 2,037,582명(2010.1.1 기준)으로 이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부족함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재외동포 및 기타(혼인귀화자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2010),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

[그림표 4-6-4] 충남 외국인주민 분포

- 충남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그들의 조기정착에 중점을 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는 별도로 다문화어울림 사업 등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주요사업에서 문화관광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 미비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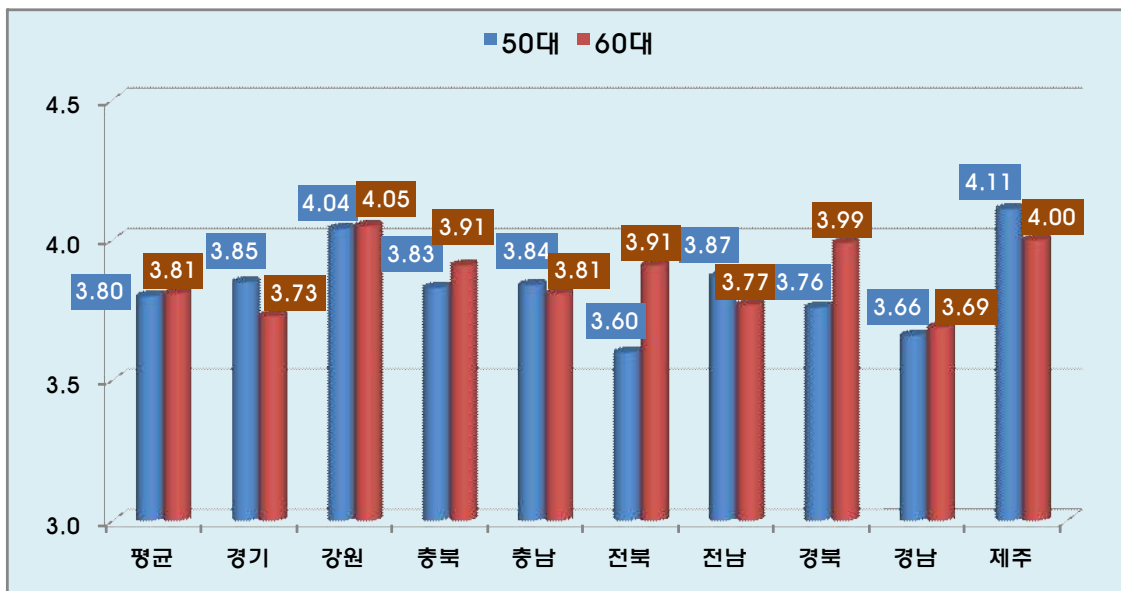
<표 4-6-1>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비고
사업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취·창업 지원, 자조모임, 상담	필수
	특성화사업	- 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선택
홍보 등 운영		- 육아정보나눔터, 멘토링·자원봉사단 운영,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기관협약 및 외부사업연계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고령화 사회와 부상하는 시니어

- 에이지리스 마케팅(Ageless Marketing)의 데이빗 울프는 이 세대가 18~43세보다 구매력이 크며, 또 2010년 이후가 되면 60%나 더 큰 구매력을 가진 소비층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일찍이 예측한바 있음
- 신체적 수명이 늘어난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아실현과 건강한 노후대비에 모아지고 있으며,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공연, 관람, 요리,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등산, 낚시, 사진 촬영 등을 탐닉하는 취미, 여가관광활동이 늘어나고 있음
-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줄어드는 만큼 여가시간이 많이 늘어나기에 관광은 노인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
- 이는 본격적인 실버관광의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하고 있으며, 관광시장의 핵심소비계층으로의 부상을 의미함
- 그러나 충남의 경우 문화관광연구원의 국내실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버관광객의 만족도에서 다른 경쟁 지역과 비교해서 보통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문화관광연구원(2008), 국내실버관광 실태조사

[그림 4-6-5] 지역별 실버계층 관광만족도

■ 휴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및 육체와 정신의 균형추구

- 전세계적으로 의료방향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고 있으며, 최첨단 IT와 의학이 접목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병원을 중심으로 전통적 영역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예방적 목적의 비전통적 의료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여가와 휴양은 소비자의 건강을 사전에 보장 및 신장해주는 예방적 건강상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가와 관광의 후생적 가치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충남의 경우 천연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태안의 휴양자원과 11개의 온천지구, 금산 인삼 등의 건강식품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 방문객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임
- 이제 여행과 관광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보완 및 대체의학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으로 각광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웰빙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확산,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행 경험 증가로 여행에 대한 목적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자연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으면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웰스여행이 주목받음

<표 4-6-2> 2009년 여행지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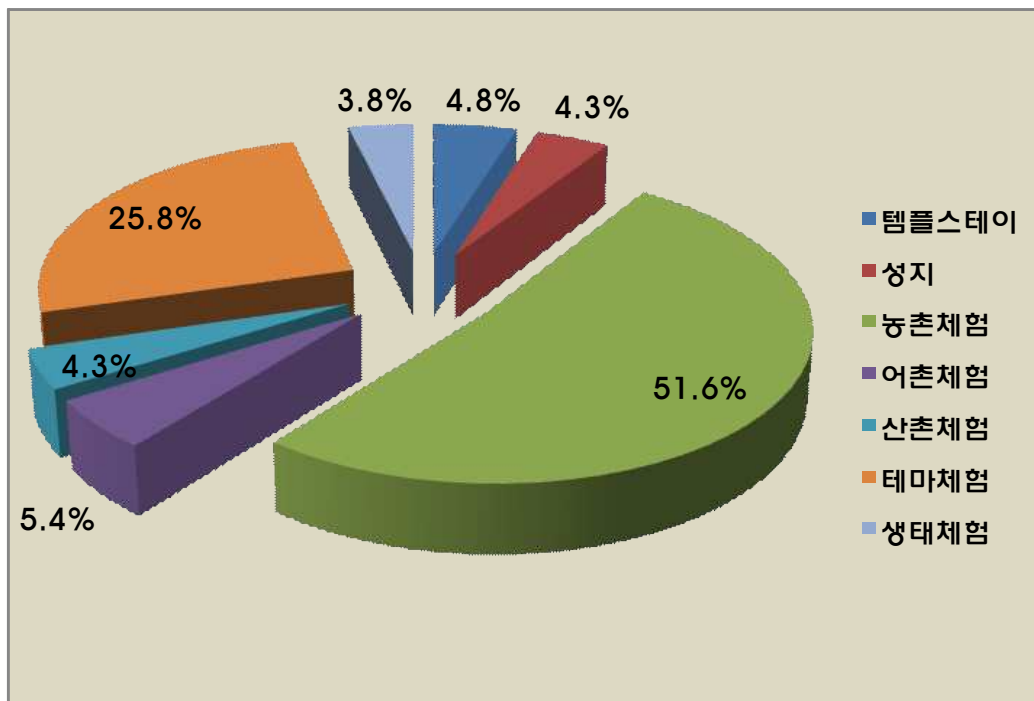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국내			해외여행
	관광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단순 휴식 / 휴양	35.8	37.2	33.6	25.6
자연 및 풍경 감상	28.0	28.2	27.7	20.4
식도락[지역 맛집 등]	8.8	8.1	9.9	5.3
야외 위락 및 스포츠 활동	4.9	5.4	4.0	2.3
역사유적지 방문	5.5	5.5	5.5	13.7
테마파크, 놀이시설 등 방문	5.2	5.2	5.1	3.4
건강 및 보양[온천/스파 등]	2.4	1.9	3.1	5.5
쇼 핑	1.5	1.2	1.9	6.7
지역 문화예술/공연 관람	1.0	0.9	1.3	1.9
지역축제 참가	1.8	1.5	2.3	0.6
체험프로그램[농장체험 등]	1.2	1.6	0.6	0.3
종교 / 순례	1.6	1.2	2.2	3.0
갬블링[카지노/경마/경륜 등]	0.1	0.1	-	-
기 타	2.3	2.1	2.7	11.4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0), 2009 국민여행실태조사

■ 감성을 자극하는 체험소비 확산

- 감성소비는 소비자의 개인의 오감 만족을 위한 소비, 감각과 느낌에 따라 소비하는 패턴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관광산업에 있어서 체험소비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관광과 연관성이 있음
 - － 한옥 등을 활용한 전통생활 체험,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종교 문화체험,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특이 지역 탐방 체험 등이 그 예임
- 충남의 경우 선불교의 중심지로서 현재 감사, 마곡사 등의 9곳에서 참선을 중심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충남에는 8곳의 천주교 성지가 있어 이를 활용한 종교체험관광의 활성화가 필요
- 또한, 충남의 대표적 체험관광 상품인 농촌체험이 96곳, 어촌체험 10곳, 산촌체험 8곳, 테마체험(도자기 만들기 등) 48곳, 생태체험 7곳 등 다양한 체험상품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체험장소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임



자료 : 충청남도(2010), 충남관광기본자료

[그림 4-6-6] 충남 체험프로그램

■ 관광홍보 수단의 다변화

- 관광홍보 수단에 있어 충남의 경우 크게 홈페이지와 관광안내소를 통한 홍보물을 통한 관광홍보를 주로 하고 있음
- 관광안내시설로는 천안시 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총 18개소(대전역 포함)의 상설 안내소가 있으며 관광, 교통, 문화, 유적지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는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소비가 본격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임
- 관광객들의 주요 정보 획득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여행전문가 블로거,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이런 시대에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앱스토어 추진 당사자들이 사용자가 앱스토어에 접속하는 과정을 이용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조하고 있으며, 여행 관련 콘텐츠도 많이 제공되고 있어 관광산업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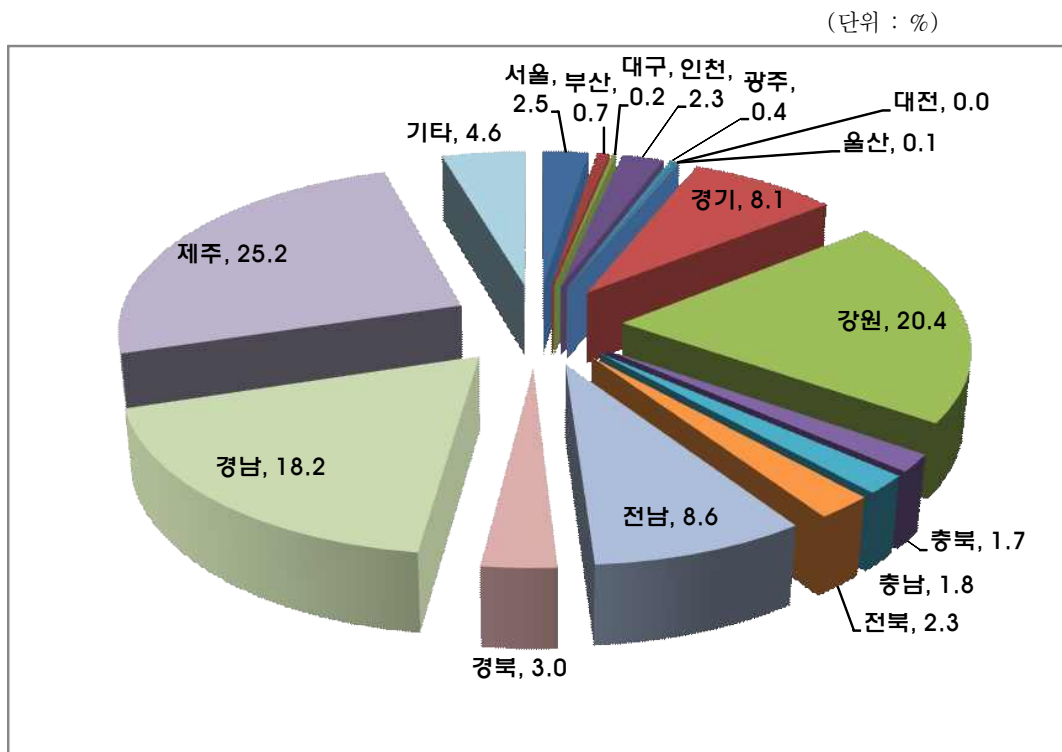
<표 4-6-3 관광객 안내소 현황(2009)>

시군명	안내소명	위 치	운영기관
계		18개소	
대전	대전역 종합관광안내소	대전역 구내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역 관광안내소	천안시 대흥동	천안시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	아산시 배방면	
	유관순열사사적지 관광안내소	천안시 병천면	
공주시	공산성 관광안내소	공주시 금성동	공주시
	무령왕릉 관광안내소	공주시 웅진동	
보령시	대전역 관광안내소	보령시 내항동	보령시
	대전해수욕장 관광안내소	보령시 신북동	
	보령종합터미널 안내소	보령시 공촌동	
	대전해수욕장 3지구 관광안내소	보령시 신북동 3지구	
아산시	온양온천역 관광안내소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
	천안·아산역 아산시 시정홍보관	아산시 배방면	
논산시	논산역 관광안내소	논산시 반월동	논산시
금산군	금산 관광안내소	금산군 신대리	금산군
부여군	충남종합관광안내소	부여군 부여읍	부여군
홍성군	속동관광안내센터	홍성군 서부면	홍성군
예산군	예산군 관광안내소	예산군 덕산면	예산군
당진군	당진군 관광안내소	당진군 당진읍	당진군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 기본자료, 2010.

■ 녹색관광의 관심 증대

-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의 관심 증가에 따라 관광에서도 녹색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 또한 경비에 있어서도 일반 국내여행 개별여행객의 경비가 평균 15만원인데 비해 녹색관광 여행 시 1인당 평균 20여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녹색관광이 일반관광에 비해 고부가가치 임
- 그러나 충남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녹색관광지로서의 인식이 전국에서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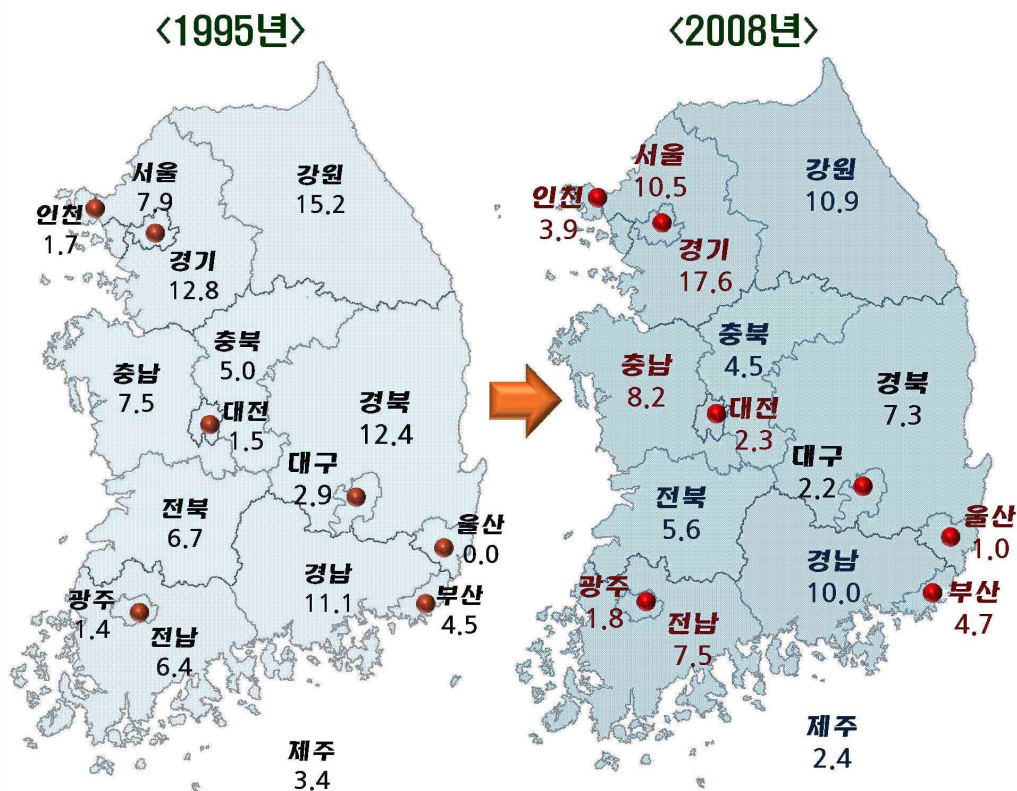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9), 녹색관광 마케팅조사

[그림 4-6-7] 전국 녹색관광지 연상 비율

- 한국관광공사(2009) 녹색관광마케팅조사에 따르면 충남의 녹색관광지로는 안면도의 갯벌과 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태안지역과 계룡산, 금산, 수덕사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대표적인 녹색관광상품인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길 관련 상품개발이 되고 있는데, 충남도 역시 마곡사 솔바람길 등 다양한 길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 중임

■ 관광시장 점유율 증대

- 여가시간 증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관광객의 욕구가 테마추구형, 모험추구형, 스포츠·레저, 휴양, 자연친화형 등으로 다양화될 것임
-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시설중심의 관광에서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추구형으로 관광형태가 전환될 것임. 이에 따라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이 증대할 것임
- 또한 골프, 해양스포츠(요트, 스쿠버다이빙, 크루즈 등) 등의 고급레저스포츠와 오페라, 뮤지컬 등 고급문화예술이 대중화되면서 지역에서도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고급문화와 결합된 문화관광상품, 예술관광상품 등의 출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 충남의 경우 찬란한 백제문화와 우수한 해안경관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나 관광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9), 국민여행실태조사

[그림 4-6-8] 내국인 관광시장 점유율 변화

나. 과제

■ 새로운 문화관광 소비계층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다인종다문화 시대의 지역 융합과 동질의식의 함양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재
- 뉴 시니어 계층은 여유있는 시간과 금전적 여유를 가진 소비계층으로서 향후 여행관광시장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

■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 투어리즘의 확산에 따른 시설 마련

- 충남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헬스투어리즘 관련 소재의 발굴과 연계한 상품개발이 부족한 상태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 체험추구 관광소비자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

- 체험관광은 문화체험, 생활체험, 생태체험, 모험체험, 특이체험 등으로 구분되는 데, 충남의 경우 이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충분치 않음

■ 소셜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관광의 시대 대비

- 관광홍보의 방향이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의 선두주자를 중심으로 치열한 무선 모바일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가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 관광에 있어 저탄소녹색성장의 개념 도입

-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함께 ‘친환경·저에너지’가 소비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지만 충남 관광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네오 럭셔리 관광소비의 확산에 대한 상품 부재

- 의료관광, MICE, 요트, 크루즈, 승마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가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문화컨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거점 형성

- 시대적 요구에 의해 문화컨텐츠산업은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충남은 문화산업의 속성상 필요한 강력한 핵이 없어서 경쟁력이 낮음

2 비전과 전략

가. 비전과 목표

“행복이 흐르는 문화 중심 충남”

- 충남의 문화는 금강을 통해 사람과 문화가 들어오고 나가며 이동하고 해안을 통해 들어온 사람과 문화가 내포의 길을 따라 흐르는 문화로서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융합하고 전파되는 문화로 세계의 모든 문화와 사람들이 충남을 통해 하나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충남이 될 것임

구 분		내 용
비 전		행복이 흐르는 문화 중심 충남
	목표1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통한 지역문화 창출
	목표2	수요 중심의 문화·관광사업 육성
	목표3	미래 변화되는 환경을 대비한 문화·관광 기반구축
	목표4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 목표1 :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통한 지역문화 창출

- 글로벌 시대의 문화의 수용과 융화 속에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풍부한 문화적 창조성을 함양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국제교류 환경과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함

■ 목표2 : 수요 중심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 21세기 문화관광산업은 그 역할과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미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문화관광 소비계층의 등장과 높아진 관광객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충남 문화관광 체계구축

■ 목표3 : 미래 변화되는 환경을 대비한 문화·관광 기반구축

- 제3세대 미디어 환경에 맞는 충남 문화관광 체계구축을 통한 미래관광수요 창출

- 전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요구에 앞서갈 수 있도록 충남의 문화·관광 체계 구축

■ 목표4 :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 선진국형 레저상품 소비의 확산이 예상되는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가시장에 서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수요 대비
-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컨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거점 형성

나. 전략

■ 전략1 : 문화가 풍요로운 생활공간 구축과 삶의 실현

- 일상생활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문화예술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강화함. 또한 문화 관련 사업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서 충남 문화계획의 수립과 기반 조성이 긴요함

■ 전략2 : 멀티컬처(Multi-culture) 문화관광 창출

- 다문화 사회 진입과 글로벌화로 인한 멀티컬처(Multi-culture) 관광소비 확산에 따른 전략은 크게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관광개방성의 확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조화를 이룬 관광상품의 개발, 다문화가정의 관광권익에 대한 배려, 코스모폴리탄즘 관광에 대한 대책추진, 그리고 멀티컬처 가치와 이에 상응하는 관광개발정책 추진 등

■ 전략3 : 뉴 시니어 관광 활동 기반구축

- 뉴 시니어(New senior)가 핵심 관광소비계층으로 등장하는 트렌드는 새로운 관광의 방향전환이 필요한데, 노년계층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광정책과 새로운 표적시장의 증가로 인한 관광비즈니스에 대한 대책마련, 노년계층을 중심으로 한 실버관광에 대한 대책, 노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관광수요의 증가대비, 그리고 은퇴한 노령인력을 관광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전략4 : 헬스 투어리즘의 메카로 조성

-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는 여행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웰빙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헬스투어리즘 관련 소재의 발굴과 연계한 상품개발 및

테마별 종합관광정보의 제공, 치유관광상품의 개발, 지역의 자연을 소재로 한 에코힐링 관광콘텐츠의 발굴, 그리고 뷰티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중심으로 조성

■ 전략5 : 레저 및 체육활동의 진흥

- 건강한 신체는 삶의 활력소로서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 이를 위해 여가생활로서 레저와 체육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d건을 갖추어야 함.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며,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 전략6 : 체험관광 상품의 다변화 추진

- 체험하는 관광소비자, 트라이슈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체험관광상품의 개발, 지역 문화소재에 기반한 문화체험상품의 개발, 체험프로그램 확충 및 수용태세 강화 등을 통한 체험관광의 다변화 전략 추진

■ 전략7 :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 구축

-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 부문도 신개념의 모바일 정보전달시스템, 특히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편한 SNS의 개발을 통한 관광정보체계 구축

■ 전략8 : 그린 관광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요구 아래 문화관광 부문에서도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성장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발굴, 활용 가능한 녹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술이전 강화, 녹색관광자원의 개발역할 강화 등을 통한 그린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 전략9 : 네오 럭셔리 관광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발

- 네오 럭셔리 관광소비의 확산, 합리적 명품관광소비계층의 증가, 그리고 고품질 저비용 관광소비의 확산트렌드에 따른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관광시장 확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안심관광소비에 대한 제도 정비, 예술·공연 등 고급문화와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명품관광콘텐츠 개발 등 추진

■ 전략10 : 충남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 충남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기술과 지식 콘텐츠를 강화하여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에 활용함. 충남 콘텐츠의 관광상품화 등을 그 중요한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임

3. 전략별 정책과제

구분 비전	내용
목표1	행복이 흐르는 문화 중심 충남
전략1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통한 지역문화 창출 문화가 풍요로운 생활공간 구축과 삶의 실현
정책과제1	충남문화재단 설립
정책과제2	작은 도서관 건립지원
정책과제3	생활 속 문화공동체 지원프로젝트
정책과제4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예술가 멘트 프로그램
정책과제5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전략2	멀티컬처(Multi- culture) 문화관광 창출
정책과제6	이주 여성의 지역문화관광 참여 기회제공
정책과제7	다문화 가정 관광활동 지원
전략3	뉴 시니어 관광활동 기반구축
정책과제8	뉴 시니어 계층을 위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정책과제9	은퇴한 노령인력 관광산업에 참여
목표2	수요 중심의 문화관광 육성
전략4	헬스 투어리즘의 메카로 조성
정책과제10	이야기가 있는 충남 옛길 조성
정책과제11	치유관광상품 개발
정책과제12	에코힐링 관광상품 개발
정책과제13	뷰티관광산업 육성
전략5	레저 및 체육활동 수요의 충족
정책과제14	건강프로그램 교실 운영
정책과제15	수요에 대응한 체육활동 기반 확충
정책과제16	소외계층 및 가족단위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
전략6	체험관광 상품의 다변화 추진
정책과제17	체험관광상품 품질관리 제도도입
정책과제18	체험관광 전달 체계 확립
정책과제19	지역 스토리에 기반한 문화체험상품 개발
목표3	미래 변화되는 환경을 대비한 문화관광 기반구축
전략7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구축
정책과제20	제3세대 미디어 환경에 맞는 SNS용 관광정보 개발
정책과제21	모바일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체계 구축
전략8	그린 관광 선도지역 기반구축
정책과제22	생태환경 문화체험 프로젝트
정책과제23	녹색관광분야의 발굴
목표4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전략9	네오 럭셔리 관광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발
정책과제24	국제적 체류관광 거점지역 육성
정책과제25	충남 관광목적지 브랜딩 전략
정책과제26	충남 5대권 관광거점도시 조성
전략10	충남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정책과제27	문화산업 랩(Lab) 프로젝트
정책과제28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육성
정책과제29	역사문화이야기(스토리 텔링) 발굴 사업
정책과제30	백제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1 문화가 풍요로운 생활공간 구축과 삶의 실현

■ 기본방향

- 시대적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문화예술행정체제 변화 요구되며, 문화예술 진흥 전담기구를 통하여 문화정책의 전문성 필요
-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정보 공유와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간 필요
- 도민의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활동지원으로 문화복지를 실현하며, 산·학·관·민이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 구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충남문화재단 설립
 - － 각계의견 수렴, 타시도 벤치마킹, 위원회 구성, 기금조성 방안 마련 등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후 법인설립
- 작은 도서관 건립지원
 - －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간 구축
 - － 문화사랑방 개념의 문화커뮤니티 공간 구축
 - － 기존의 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시설 건립과 지역주민 및 문화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사업 결합
- 생활 속 문화공동체 지원 프로젝트
 - － 문화예술교육(개인 및 단체)을 통한 생활 속 문화예술 공동체 육성
 - －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단체에 대한 교육, 창작활동지원 등 지원시스템 구축
-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예술가 멘토 프로그램
 - －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의 예술창작 멘토가 되어 주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 － 지역사회 안으로 예술가들이 직접 들어가서 소통하고 결합하는 방식
-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② 멀티컬처(Multi-culture) 관광활동 창출

■ 기본방향

- 이주 여성의 지역 융화와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 회복을 위해 지역 문화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질감과 지역 문화관광 인력으로서의 역할 증대
- 복지 다문화주의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가욕구(특히, 관광활동)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복지정책 차원의 지원제도 마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이주 여성의 지역 문화관광 참여 기회제공
 - 이주 여성 문화관광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출신 국가 문화전파자 육성
- 다문화 가정 관광활동 지원
 - 다문화 가정 지원 관광바우처 제도

③ 뉴 시니어 문화관광 활동 기반구축

■ 기본방향

- 기존 관광프로그램과 다른 노년층 요구에 맞는 새로운 관광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 은퇴 이후 소외감에 빠지기 쉬운 고학력 노령인력 특히, 문화예술관련 산업과 관광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뉴 시니어 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 뉴 시니어 이용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 노년층 문화복지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제도 마련
- 은퇴자 관광산업 재취업 프로그램 운용
 - 은퇴자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관광프로그램(문화해설사, 관광정보센터 등)에 재취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4 헬스 투어리즘 메카로 조성

■ 기본방향

- 생태와 지역문화콘텐츠가 결합한 옛길 토대의 문화관광 기반 구축하고, 충남의 이미지 ‘느림의 여유’를 문화관광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도록 함
- 지역의 독창적인 전통의료를 중심으로 헬스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한방헬스관광상품 개발
- 충남만의 특색있는 웰빙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농촌관광마을을 활용한 자기치유관광 대상지로 상품화
- 지역의 머드와 친환경적이고 다이어트에 좋은 지역 음식을 활용한 뷰티관광상품 개발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이야기가 있는 충남 옛길 조성
 - － 충남의 옛길을 생태가 살아있는 친환경 길로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 길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를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상품화
- 한방헬스단지 조성
 - － 지역의 온천지역(아산, 예산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온천과 숙박시설을 활용한 한방헬스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인삼 등 한방약재를 활용한 보양 및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 충남지역의 보양건강음식을 연계하여 장기 치유가 가능한 지구로 조성
- 에코힐링 관광상품 개발
 - － 안면도 송림 등 기존의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충남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코힐링 관광지를 조성
 - － 기존의 농촌관광마을을 유기농 리조트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지역의 유기농 식품을 이용한 자기치유관광의 대상지로 상품화
- 뷰티관광산업 육성
 - － 보령의 머드 등과 지역의 다이어트 음식을 결합하여 뷰티관광상품을 개발
 - － 지역의 친환경 음식과 다이어트 음식을 통한 뷰티관광상품 개발

5 레저·체육활동의 진흥

■ 기본방향

- 도민들의 웰빙생활을 위해 필요한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 웰빙생활과 생활체육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
- 도민의 여가 활동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수요에 적합하면서도 다양한 체육활동 기반 확충
- 장애인 및 노인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컨셉의 체육시설 마련과 가족단위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건강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민들의 아침,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공원이나 약수터 등 현장에 체육 지도자를 도내 32개소(시·군별 2개소 시범운영, 주 5회) 배치하여 운영
 - 생활체조, 국학기공, 속보, 조깅 등을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수요에 대응한 체육활동 기반 확충
 - 스포츠·레저시설 확충 및 정비
 -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시설 확충(산악형, 수상형, 해양형)
- 소외계층 및 가족단위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노인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산
 -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시설 확충
 - 가족단위 체육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체육지도인력의 자질향상 및 배치 운영효율화

⑥ 체험관광 상품의 다변화 추진

■ 기본방향

- 고품질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여행상품의 품질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여행상품 품질관리정책을 강화
- 체험관광의 시대에는 관광자원에 대한 해석과 스토리텔링 및 전달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관광컨텐츠의 DB 구축과 전달체계의 관리를 통한 체험관광의 효과 극대화
- 체험관광의 성공은 이문화적 요소 혹은 기억에 남을 만한 현상에 대한 강도 높은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체험관광목적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스토리에 기반한 문화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체험관광상품 품질관리 평가체계 마련
 - － 체험관광상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험관광이 설정된 표준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등의 평가 마련
 - － 이를 활용한 평가단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 체험관광 전달 체계 확립
 - － 체험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 해석과 해설
 - － 안내와 자원해설 등 수용태세 강화
- 지역 스토리에 기반한 문화체험상품 개발
 - － 지역특화 문화체험상품 개발

⑦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 구축

■ 기본방향

- 기존 문화관광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관광정보를 제3세대 미디어 환경에 맞는 SNS용 관광정보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이를 위하여 문화미디어, 관광컨텐츠 개발, 협력을 통한 컨텐츠 경쟁력 제고, 모바일 관광컨텐츠 생산 고급인력 육성 등이 필요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제3세대 미디어 환경에 맞는 SNS용 관광정보 개발
 - 개인 맞춤형 관광정보제공 체계 구축
 -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U-관광도시, U-관광홍보, U-관광안내 등과 인터넷, 모바일 관광안내체계를 강화
- 모바일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체계 구축
 - 문화, 미디어, 관광정책의 통합
 - 관광콘텐츠개발 관련 관광벤처기업 육성
 - 모바일 관광콘텐츠 생산 고급인력 육성

⑧ 그린 관광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 기본방향

- 금강과 계룡산, 내포, 서해안 갯벌, 습지 등에서 생태환경 문화 체험을 실시하여 자연에 대한 사랑 고취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생활문화 정착
- 지금까지 녹색관광의 총아로 여겨졌던 생태관광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융합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녹색관광분야를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생태환경 문화체험 프로젝트
 - 금강을 주제로 한 문학, 음악 등과 연계한 생태환경 체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문학 : 신동엽, 채만식, 정지용 등)
 - 계룡산, 내포지역, 서해안 등 관련 문화 예술 작품 등과 연계한 생태환경체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 갯살림, 산살림, 들살림 등의 체험 통한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 녹색관광분야의 발굴
 - 녹색체험 관광자원 발굴 및 연출역량 강화
 - 관광산업 공급사슬 전반의 친환경화 유도

9 네오 렉서리 관광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발

■ 기본방향

- 네오 렉서리 관광소비자가 점점 높아지는 현대 관광의 추세 속에서 국제적 체류관광 거점도시 육성은 충남 관광 진흥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충남의 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곳을 선택, 독자적인 테마와 개성을 가진 국제적 체류관광 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 매력적 관광거점과 관광 상품의 탄생은 철저한 이미지 관리 및 그에 기반한 정책 추진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임. 충남 관광목적지 브랜딩 전략의 수립과 실천은 이러한 이미지요소와 추진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국제적 체류관광 거점지역 육성
 - 안면도 관광지 조성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 서해안 해양관광거점 미항도시 개발
 - 보령 대천지구 레포츠형 위락 해변리조트 지구 개발
- 충남 관광목적지 브랜딩 전략
 - 충남 관광목적지 브랜드 아키텍처 구축
 - 관광 홍보전략컨텐츠 개발, 마케팅 및 프로모션 실행
 - 메가이벤트의 지속적 개최를 통한 지역마케팅 추진
- 충남 5대권 관광거점도시 조성
 -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을 백제역사문화자원, 금강 생태축과 연계한 문화·역사·생태 관광지로 특화 발전
 - 도청이전신도시 중심으로 서산, 홍성, 당진, 예산 등 내포문화관광권을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해양관광지역으로 육성
 - 보령, 태안, 서천의 해양관광권을 해양, 연안, 생태, 휴양 등의 해양휴양관광지역으로 개발
 - 천안·아산지역을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온천휴양권을 특화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주, 논산, 연기, 금산, 계룡을 대도시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개발

10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 기본방향

- 충남 소재 대학의 문화산업 관련 학과 교수와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문화 실험실을 구성하고 충남형 문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산학 협력체 건설
- 충남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민담, 지명유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발굴하여 도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문화산업 랩(Lab) 프로젝트⁸⁾
 - 랩 구성 및 지원
 - 성공적인 랩은 1인창조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육성
-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육성
 - 백제·내포·기호유교문화권 3대 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 아름다운 忠南古都 역사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역사문화 이야기(스토리 텔링) 발굴 사업
 - 읍면동 역사문화 발굴 종합계획 수립
 - 스토리 텔링 발굴
- 백제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 백제역사 전문가 양성과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 백제문화전문 관광해설사 양성 기관 역할
 - 백제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군 순회교육 실시
 - 일반 도민 및 학교 교육으로 확대 필요

8) 랩(Lab)은 실험실 또는 연구소를 뜻하는 용어로, 여기서는 대형 연구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을 위해 소규모 도제식 연구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일컫음.

4. 정책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
지역문화 창출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개소	5	4	4	4	3	10
	○ 이주여성문화관광인력양성	인		20	20	20	20	200
	○ 예술가 멘토프로그램 지원	지역		2	2	2	2	10
수요중심 문화관광 육성	○ 헬스투어리즘 상품개발	개소		1	2	2	2	5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		16	16	18	20	
	○ 체험관광 상품 개발	개소		2	4	4	6	
문화관광 기반구축	○ 소셜네트워크 기반구축	지역	2	2	2	2	2	6
	○ 충남옛길 프로젝트	개소	4	4	4	4	4	
문화관광 상품개발	○ 관광객 유치	천명	22,100	22,972	23,431	23,900	24,378	30,000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천원		7,200	8,000	10,000	10,000	447,000
	○ 지역역사문화스토리텔링	개		10	10	10	10	
	○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편	2	4	6	8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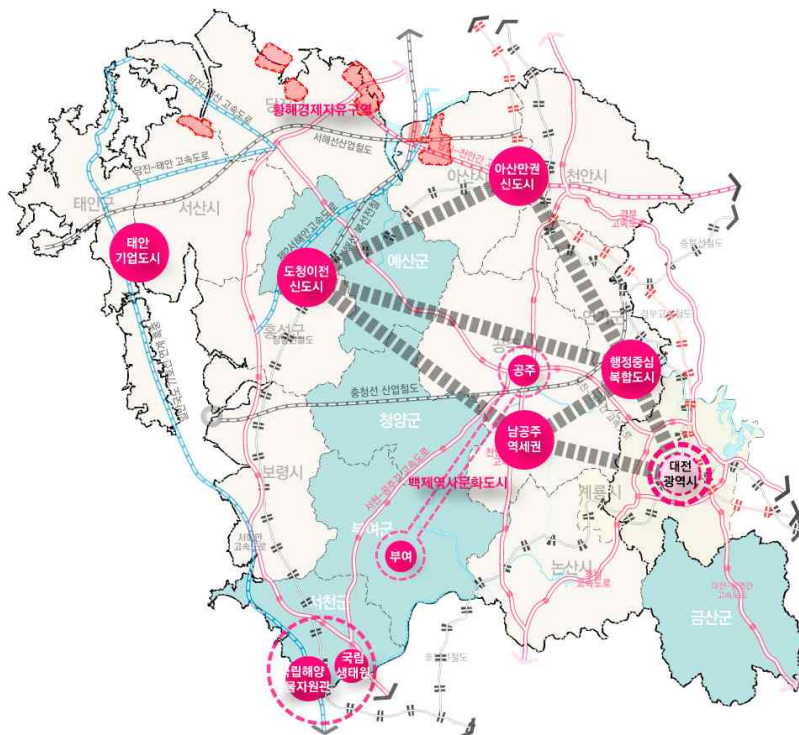
7. 사람중심 생활공간 조성

① 여건변화 및 과제

가. 여건변화

■ 주요 전략개발사업의 가시화와 다핵공간구조로의 전환

- 광역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충청도청신도시(내포시), 아산신도시, 태안기업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역발전거점을 형성하면서 다핵공간구조로 개편될 전망이다



[그림 4-7-1]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분포

- 그러나, 공공주도사업인 세종시와 내포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신도시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못하고 있어, 향후 신도시 규모의 적정성과 자족성 검토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신성장거점도시 건설사업과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고속교통체계의 구축은 다양한 형태의 정(正) 또는 부(負)의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도시정책과 주변지역 도심공동화방지대책 등을 병행·추진해야 할 것임

<표 4-7-1> 도내 신도시 추진현황(2010년)

구분	계획기간	계획인구(명)	사업규모	총사업비	비고
세종시	2005~2030년	500,000명	72.9km ²	22조 5,000억	공동주택(일부) 분양중
내포시	2010~2020년	100,000명	9.9km ²	1조 9,859억	업무용지(일부) 분양중
아산신도시	2007~2015년	199,800명	21.3km ²	8조 4,906억	2단계 사업 중지
태안기업도시	2007~2020년	15,000명	14.7km ²	1조 1,526억	사업중지
황해경제자유구역	2008~2025년	113,000명	29.6km ²	3조 1,079억	사업규모 재검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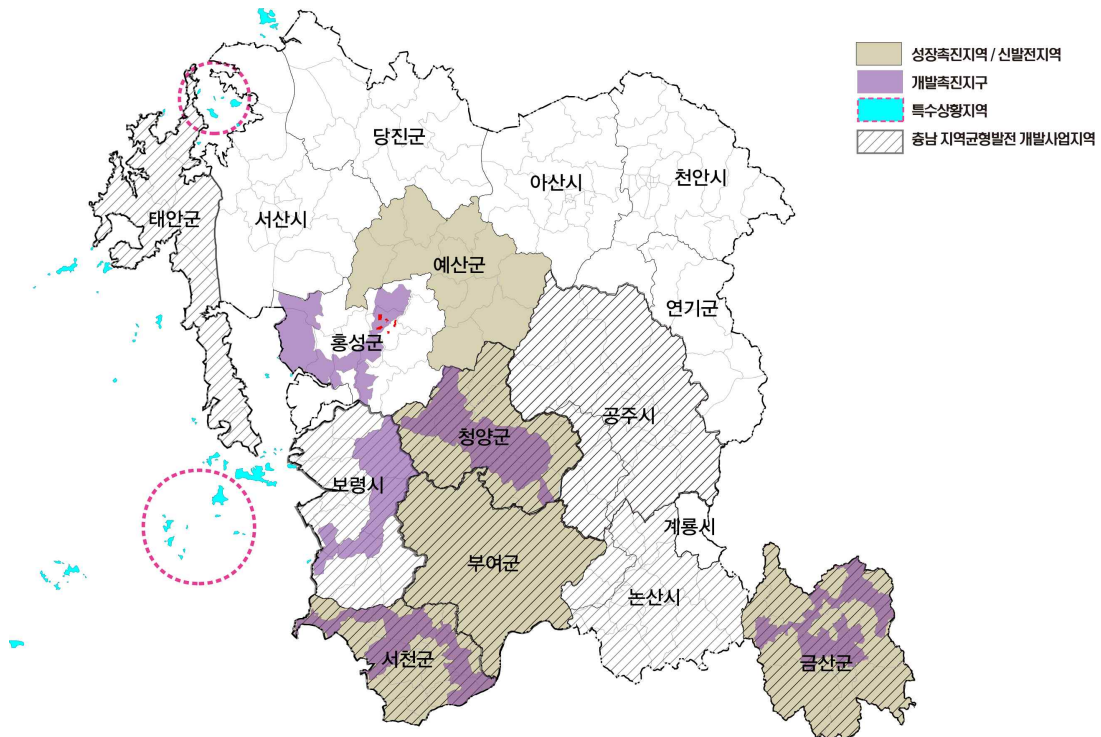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조성하여 대덕 R&D 특구, 오송·오창, 천안·아산 등의 기능지구와 연계하는 기초과학의 핵심축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설교통 부문의 역할 증대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도시부문(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에서 전체에너지 소비의 44.0%(2006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건축물과 교통 부문에서 획기적으로 에너지 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가 부여될 전망임
-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66%가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15.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최대 규모임(지식경제부, 2009)
- 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의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시·군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시개발물량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소비적인 도시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기 위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공원·녹지, 공공, 교통,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권역별 격차 심화에 따른 부작용 가시화

- 권역별로는 서북부권 도시가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의 영향으로 과개발, 난개발 등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발전이 미약한 나머지 남부권 시·군은 주력산업인 농어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인구의 외부유출 경향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남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중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외생적인 수요에 대한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의 자원을 토대로 내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신·구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재생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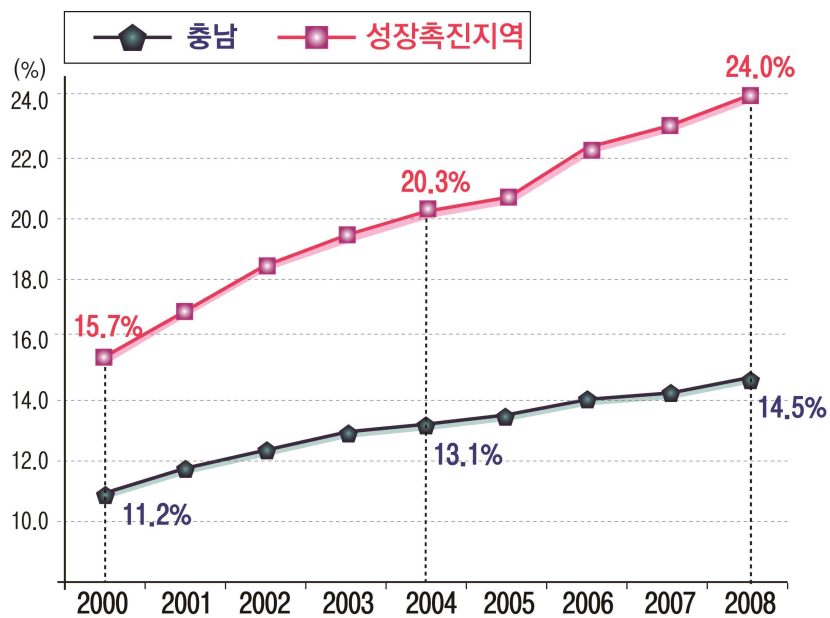


[그림 4-7-2] 낙후지역의 지역개발관련 지역·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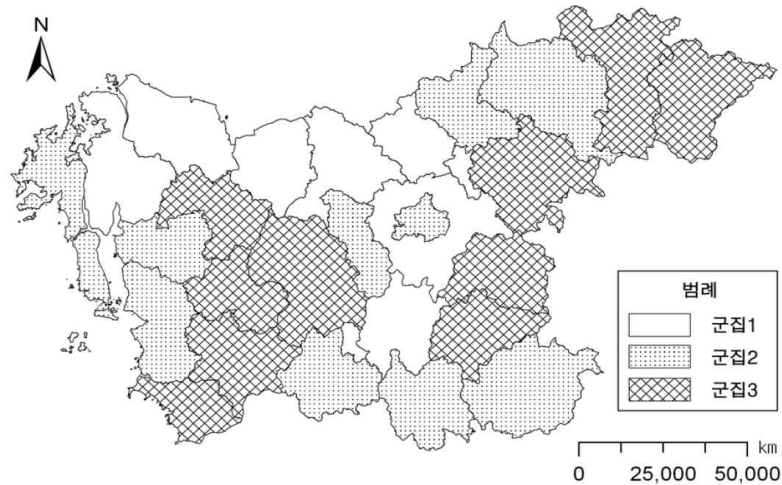
■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수요의 확대

- 충남의 총인구는 연평균 0.62% 증가(2000~2008년)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비율이 14.5%(2008년)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그 중에서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남부지역(성장축진지역의 고령화율 24.0%)은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

- 여성의 비율은 2008년 49.5%(전국 49.9%)이고, 이 중에서 결혼이민자가 8,781명(2009년 충남인구의 0.43%, 전국평균 0.36%)에 달해 앞으로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는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도시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신개발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계층별 수요에 부합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중심시가지 재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충남 내륙지역은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생활편의시설 부족,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차원이 다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함



[그림 4-7-3] 충남전체와 낙후지역간 고령화율 추이비교



주: 군집 1(성장도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군집 2(보령, 논산, 금산, 연기, 홍성, 태안), 군집 3(도시 전체가 침체·쇠퇴하는 도시: 공주,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09, 충청권 도시쇠퇴 특성과 재생방향에 관한 연구

[그림 4-7-4] 충청권의 시·군별 도시쇠퇴의 유형

- 21세기 도시는 다문화 중심의 창조도시(Creativeness City)로 변모하여 고유의 전통문화를 기초로 외래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고, 미래사회가 성장위주의 다축적 구조에서 복지중심의 다소비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정책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경제포럼기구인 다보스클럽은 2020년의 전지구적 트렌드(Global Trend 2020)로 환경생태와 에너지 자원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하고(The Age of Climate Change), 고령화 사회(The Age of Aging) 및 여성 중심의 사회(The Age of Women)로 변해갈 것이고, 모든 사회계층이 혼합(The Age of Mixing)되어 글로벌화되는 사회가 조성되며, 소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시대의 변화를 선도(The Age of Creative Innovation)하는 사회를 전망하고 있음

■ 주민참여 및 도시계획고권의 지방이양 가속화

- 앞으로의 도시계획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기반하여 주민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포단위 도시계획의 제도적인 기반이 점진적으로 갖춰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는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립권자가 주거환경개선과는 무관하게 도시확장에만 주력해도 주민들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 국토해양부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일정규모 기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광역시·도로 대폭 이양될 예정이어서, 충남도의 계획행정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고권 또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정부의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광역 연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향후 정부의 SOC 투자수요에 부응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2020년까지 탄소저감형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 및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KTX 역세권 개발 및 연계교통망을 확충하며 공항~항만, 주요 물류거점~기업물류거점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 동시에 2010년 충청남도 건설교통 분야의 총예산은 5,571.8억원으로 기존 예산에 비해서 101.6억원(개발촉진지구 사업 축소 및 지방도 안전관리사업 중복 폐지재원)의 가용재원이 도출될 수 있는 바,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됨
- 부문별한 교외지역 확산을 대신하여 중심성 있는 중심지 재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지역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 환황해경제권 성장에 따른 복합물류거점 경쟁 가속화

- 충남 서해안은 대중국 투자·소비잠재력을 충족할 수 있는 지경학적으로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교역량 증가로 서해안 물류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서해안권의 대중국 수출은 2000년 전국 수출량의 9.4%(6,180백만\$)에서 2008년 25.4%(33,355백만\$)로 연평균 23.5% 증가하고 있고, 2009년 현재 충남 항만 물동량은 141백만톤(최근 3년간 7.1% 증가)으로 12개 광역시·도 중 5위임
 - 다만, 충남 서해안의 물류·항만 인프라의 질은 경기, 인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집적화된 국가기간산업(석유화학, 철강)과 주요 신성장동력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을 지원하는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지역 조성이 국가경쟁력을 확대하는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나. 과제

■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도시(세종시, 내포시 등)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광역도시권내 도시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해야 함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조성전략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지역으로 변모하는 경제-환경 통합형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구축이 필요함

■ 낙후지역의 자립적 특화발전기반 마련

- 낙후지역 등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서해안권, 내륙첨단벨트,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역개발사업을 내생적인 발전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창조적인 지역 및 도시재생 추진

- 고령화 및 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해 도시기능이 쇠퇴한 원도심 및 기성시가지와 낙후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적인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심 활력을 증진하는 도시정책 추진이 필요함

■ 주민참여기회 및 계획고권의 지방이양 확대

-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인 도시계획 방안을 수립하고, 충청남도 계획관련 사무를 점진적으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함

■ 녹색교통 및 항만지원체계 구축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망 정비와 함께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부문의 글로벌 물류기반을 확충해야 함

2 비전과 전략

가. 비전과 목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도시 조성”

- 2020년까지 충청남도는 도민이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및 지역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신·구도시의 조화를 유도하고 주민참여 중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녹색교통 중심의 열린 충남을 구축함

구 분		내 용
비 전		사람중심 생활공간 조성
	목표1	신·구도시가 조화로운 충남 실현
	목표2	주민참여 중심의 지속가능한 충남 구현
	목표3	녹색교통 중심의 열린 충남 구축

■ 목표1 : 신·구도시가 조화로운 충남 실현

- 국가성장거점도시(세종시)를 국제도시 및 자족도시로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충남 도청신도시(내포시)는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조성
- 지역의 자립적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령화·낙후지역의 활성화, 지역자원의 특성화사업을 추진

■ 목표2 :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충남 구현

-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충남형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기존 도시는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로 육성
- 노인·장애인·여성·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설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과 충청남도 경관형성을 도모

■ 목표3 : 녹색교통 중심의 열린 충남 구축

- 도로 및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추진
- 글로벌 해운산업의 기반과 물류인프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기능을 고도화하고 주요 물류거점간의 연계를 강화

나. 전략

■ 전략1 :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기반 조성

- 세종시를 과학기술의 신거점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육성하여 기초과학 연구의 성과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산

■ 전략2 : 충남도청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

- 내포시를 충남형 녹색도시로 조성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인구유입방안을 마련하며, 주변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발전을 추진

■ 전략3 : 신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한 낙후지역 성장

- 내포문화권, 신발전지역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외생적인 수요를 내발적 발전과 연계한 신내생적인 발전을 유도

■ 전략4 :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 중심시가지를 중심으로 활력 있고 창조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도시를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

■ 전략5 :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조성

- 사람중심의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

■ 전략6 : 도민 생활편의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 네트워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전략7 :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기반 강화 및 교통체계 구축

- 환황해권 시대에 물류·교류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항만기반을 확충하고, 내륙-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양관문기능을 강화

3. 전략별 정책과제

구분	내용
비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도시 조성
목표1	신·구도시가 조화로운 충남 실현
전략1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기반 조성
정책과제1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의 거점지구로 육성
정책과제2	천안·아산을 국제과학비즈니스의 기능지구로 육성
전략2	도청이전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
정책과제3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내포시 조성
정책과제4	신성장거점도시와 주변지역간 상생발전기반 구축
전략3	신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한 낙후지역 성장
정책과제5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
정책과제6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특화발전사업 추진
정책과제7	기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발전적 추진
목표2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충남 구현
전략4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과제8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책과제9	환경친화적 수변공간 개발
정책과제10	금강변 도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전략5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조성
정책과제11	도시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행복충남 만들기
정책과제12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
정책과제13	주민참여형 세포단위 도시계획제도 활성화
정책과제14	주민친화적 부동산 행정 실현
목표3	녹색교통 중심의 열린 충남 구축
전략6	도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정책과제15	3S 가치가 살아있는 도로관리
정책과제16	탄소저감형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17	지역네트워크 거점으로 KTX 역세권 개발
전략7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기반 강화 및 교통체계 구축
정책과제18	충남 항만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19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체계 구축
정책과제20	충청광역권 교통인프라 구축

①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기반 조성

■ 기본방향

- 세종시에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융합기술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추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의 거점지구로 육성
 - － 벨트거점으로 세종시를 기초원천연구·비즈니스·국제적 정주환경을 갖춘 과학도시로 조성하고, 벨트핵으로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원천연구의 메카로 육성
- 천안·아산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조성
 - － 천안·아산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⁹⁾로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중심으로 서해안권 신산업벨트와 중부권 첨단내륙벨트의 연계를 통해 국가중추과학산업지대로 조성

② 도청이전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

■ 기본방향

- 내포시를 3G(Green Infrastructure, Green Home, Green Energy)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신도시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여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내포시 조성
 - － 충남형 녹색도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 인구유인효과를 극대화

9) 기초과학의 산업화 및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역할 담당

- 신성장거점도시(내포시, 세종시)와 주변지역간 상생발전기반 구축
 -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은 기존 지역 재구조화 부문, 공동협력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

③ 신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한 낙후지역 성장

■ 기본방향

- 新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원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분산화된 지역개발사업(서해안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벨트,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외부역량(외래자본이나 보조금 등)이 지역의 주체적인 계획 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
 - 국내 최초의 서민·종교문화권으로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범위를 확대하고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금강변 도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 금강변 기호유교문화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전 및 충북(옥천, 보은)과의 충청권 광역 유교문화권의 협력적 개발을 추진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특화발전사업 추진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으로 세분) 지정으로 민간투자의 문턱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 기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발전적 추진
 - 기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효과가 커짐에 따라 보다 본격적인 공동발전의 모색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공동으로 설치

④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 기본방향

- 신도시 개발과 공공청사 이전 등의 여파로 구도심이 쇠퇴됨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전면철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지역적 특성 및 재생역량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및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지역의 정주여건 및 생산기반을 개선하여 중심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무형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주거지 및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을 추진
- 환경친화적 수변공간 개발
 - － 중심시가지내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여 도심의 녹색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심 재활성화의 촉매제로 활용

⑤ 주민참여형 생활공간 및 주거환경 조성

■ 기본방향

-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충남의 다양하고 품격 있는 도시문화경관을 창출하며 주민친화적인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도시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행복충남 만들기
 - － 사람중심의 도시디자인을 실행하여 행복하고 쾌적한 충남을 구현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경관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구현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

- 기존의 행복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사업을 저탄소 녹색단지 인증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
- 주민참여형 세포단위 도시계획제도 활성화
 -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방안을 다양화하고 이를 계획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세포단위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
- 주민친화적 부동산 행정 실현
 - 낙후지역 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토지 및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시설 설치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⑥ 도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기본방향

- 녹색 생활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교통시설로 정비하고, 대중교통중심의 지역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개편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3S 가치가 살아있는 도로관리
 - 자연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의 녹색환경을 지향하는 도로운영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을 및 인접 지방도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도로변 등 공한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강화로 교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
- 탄소저감형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 교통시설은 신규건설 중심에서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효율화로 전환하고, 맞춤형 자전거도로 조성과 공공부문의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강화
 -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도심에 탄소저배출구역(LEZ: Low Emission Zone)을 설정하고, 탄소多배출 교통수단을 CNG버스, 전기자동차 등 저탄소형으로 대체
- 지역네트워크 거점으로서 KTX 역세권 개발

- 천안아산역 및 남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공주 역세권 개발은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방과학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과의 연계

7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기반 강화 및 교통체계 구축

■ 기본방향

-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해 당진항을 서해안 시대의 대중국 중심항으로 육성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및 방사형 도로망을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효율성을 확보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충남 항만 육성 및 인프라 구축
 - 당진항을 항만시설 확충을 통해 대중국 거점항으로 개발하고 대산항을 석유화학클러스터 지원항만으로 육성
 - 당진항의 항만 배후지역인 내항지역을 동북아 최고의 자유무역 선호지역으로 조기에 개발함으로써 아산만권 경제를 활성화(충남+경기 상생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체계 구축
 - 연안해역 용도제 시행에 따른 연안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해안의 관리목표 및 용도에 따라 육지부 개발의 규모와 밀도를 부여하며, 해양 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 충청광역권 교통인프라 구축
 - 충청권 광역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 충청선철도(세종~보령)를 구축하고 서해안 물류수송망 지원을 위한 서해산업선철도(인주~안흥)을 구축
 - 제2경부선 및 제2서해안 고속국도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세종시 연계 및 거점도시간 신교통수단(BRT 등) 구축하며, 기존 지역발전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연계교통망을 구축

4. 정책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
신·구도시가 조화로운 충남 실현	○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세대)	—	250	750	1,500	5,000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	(개소)	37	39	41	44	60	
	○ 신성장거점도시 주변 연계발전기금 조성	(목표 대비율)	—	10.0	40.0	70.0	100.0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충남 구현	○ 유니버설 적용 공모 사업	(개소)	5	10	15	20	25	
	○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개소)	30	30	30	30	30	
	○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	(세대)	—	500	1,000	1,500	2,000	
	○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개소)	3	3	3	3	3	
녹색교통 중심의 열린 충남 구축	○ 부두 건설	(개소)	—	2	0	1	0	
	○ 3S 도로 관리	(개소)	197	389	582	875	882	
	○ 국도 건설	(공사 추진 개소)	6	6	6	2	1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 추진 개소)	4	4	5	3	4	
	○ 지방도 건설	(공사 추진 개소)	2	2	1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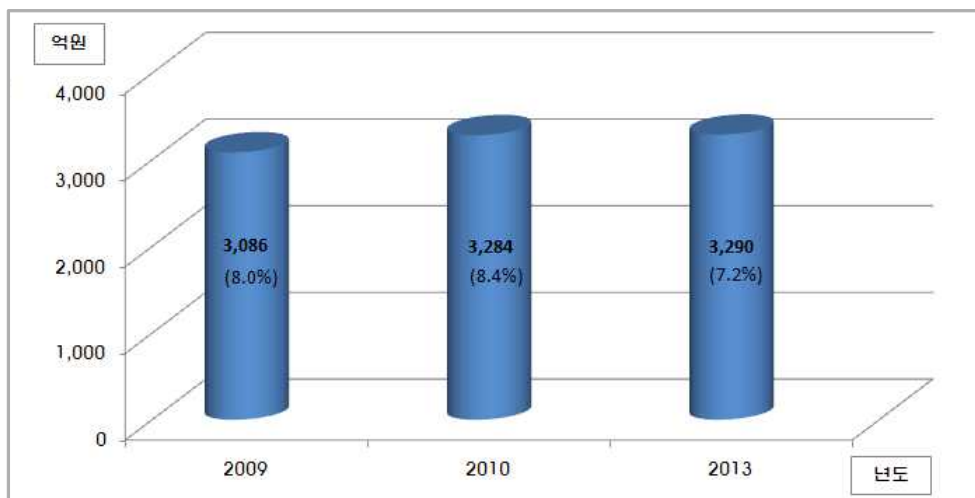
8. 지속가능한 환경 창출

① 여건변화 및 과제

가. 여건변화

■ 환경분야의 예산규모 소폭 증가 추세

- 2010년 현재 충청남도 환경분야의 예산은 3,284억 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 전체 예산의 8.4%를 점유하여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분야 다음으로 큰 규모임
- 타지자체의 환경분야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타지자체의 예산비중(2010년 : 10.7%)보다 다소 낮은 편임
- 향후 충남 환경분야의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을 전망
 - '09년 3,086억 원(8.0%) → '10년 3,284억 원(8.4%) → '13년 3,290억 원(7.2%)



자료 :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

[그림 4-8-1] 충청남도 환경분야 세출규모의 변화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속적으로 증가

- 충남은 배출기준 전국 총 배출비중의 15.7%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배출량 (87,349천tCO₂)을 보였으며, 소비기준으로는 전국 7위인 총 31,330천tCO₂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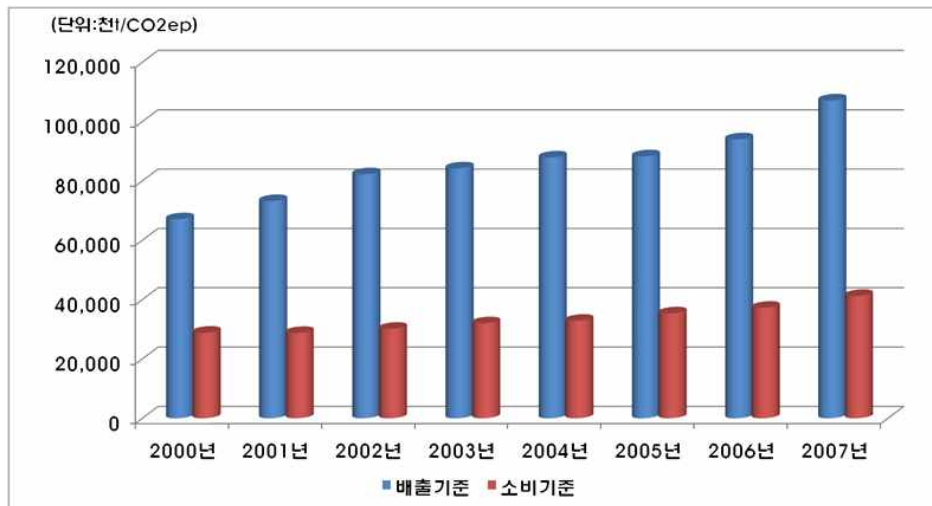
- 특히 보령, 태안, 당진, 서천 등의 4개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이 23.9%로 타시·도에 비해 배출기준에 포함된 발전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4-8-1> 온실가스배출량 광역지자체 비교(2005년 기준)

구분	배출기준(천tCO ₂)					소비기준(천tCO ₂)				
	에너지	산업공정	합계	비중	순위	에너지	산업공정	합계	비중	순위
서울	28,564	1,449	30,013	5.4	9	48,358	1,449	49,807	8.9	5
부산	18,646	444	19,090	3.4	11	23,258	444	23,702	4.3	11
대구	9,091	306	9,396	1.7	13	15,276	306	15,582	2.8	13
인천	34,860	608	35,468	6.4	7	24,062	608	24,670	4.4	10
광주	4,261	389	4,650	0.8	15	7,365	389	7,754	1.4	15
대전	5,016	185	5,201	0.9	14	8,373	185	8,558	1.5	14
울산	33,997	14,840	48,837	8.8	5	38,652	14,840	53,492	9.6	4
경기	57,224	9,730	66,954	12.0	3	82,250	9,730	91,980	16.5	1
강원	18,131	15,951	34,081	6.1	8	21,520	15,951	37,471	6.7	6
충북	13,000	8,574	21,573	3.9	10	20,237	8,574	28,810	5.2	8
충남	85,759	1,590	87,349	15.7	1	29,740	1,590	31,330	5.6	7
전북	9,968	617	10,585	1.9	12	16,760	617	17,377	3.1	12
전남	66,922	4,034	70,956	12.7	2	69,402	4,034	73,436	13.2	2
경북	42,489	4,804	47,293	8.5	6	58,345	4,804	63,149	11.3	3
경남	61,604	1,243	62,847	11.3	4	25,850	1,243	27,093	4.9	9
제주	3,172	66	3,238	0.6	16	3,256	66	3,322	0.6	16
전국	492,704	64,829	557,533	100.0		492,704	64,829	557,533	100.0	

자료: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06.

-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인구증가, 산업단지 조성, 화력발전소 증설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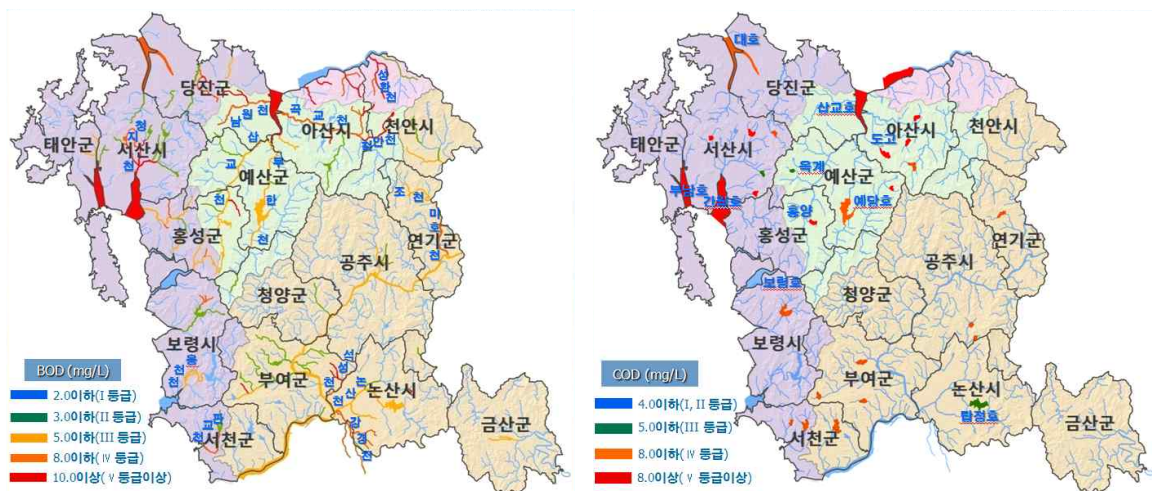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계획, 2010

[그림 4-8-2]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대기질의 경우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의 경우 증가 추세

■ 천안, 아산, 서산 등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수질악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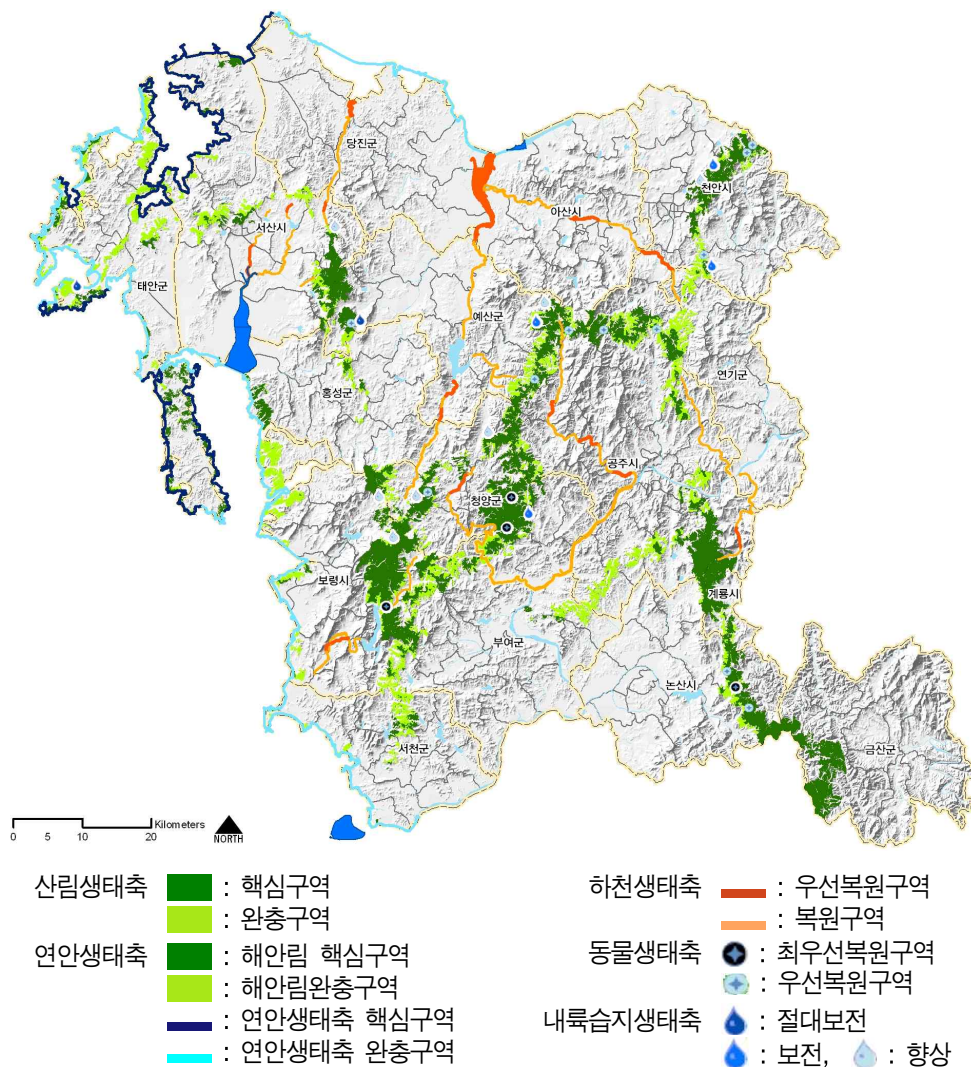
- 서북부권 주요 하천의 경우 BOD 기준 IV~V등급으로 수질악화 현상 심화
- 부남호, 간월호, 대호, 삽교호 등 대형담수호의 경우 COD 기준 IV~V등급으로 수질관리대책 마련 필요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물통합관리중장기계획, 2010

[그림 4-8-3] 충청남도 하천(좌) 및 호소(우) 수질등급도

- 건강한 생태축 구축을 위한 생물서식공간 및 단절구간 연계 필요성 증대
 -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개발, 도로철도의 개설, 과수원 등으로의 산림전용에 따라 산림이 단절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
 - 2008년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광역생태축에서 충남 지역에 해당하는 산림생태축 중요 단절구역(12개) 제시, 충남에서는 자체조사에 의해 중요 단절구역(14개) 제시
 - 따라서 단절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방안 및 생태계 복원방안이 필요한 실정



자료 :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연구(2차년도), 2008

[그림 4-8-4] 충청남도의 광역생태축 및 중요 단절구역

■ 특징적 자연자원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유

- 충남의 경우 해안사구, 갯벌, 하구 등 특징적인 자연환경 보유
 - － 강하구 : 오리기러기, 연안습지 : 도요물떼새 등 조류 이동네트워크상의 중요한 서식지가 위치
- 국제적 멸종위기조류의 중요서식지 다수 위치
 - － 가창오리, 검은머리갈매기,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큰 고니, 개리 등 멸종위기조류의 국내 최대서식지가 충남에 위치

■ 꾸준한 도시개발압력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부하 증가 예상

- 충남도청 신도시(내포시) 조성, 세종시 건설, 기업도시 개발 및 광역권 개발계획 등 꾸준한 도시 개발압력 증대 예상
- 개발활동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물수요량 및 환경오염부하 증가(수질악화, 대기질 악화, 폐기물증가 등) 예상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친환경 정책 확대

- 2008년도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기간이 시작되면서 탄소거래시장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 활발
 - － 충남은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87,349천tCO₂)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환경우선주의적 사고 증대

- 하천·호소 등이 친수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물생태계의 건전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 물에 대한 심리적 친숙도와 쾌적한 수변공간의 창출욕구 증대

나. 과제

■ 개발압력 증대로 인한 적극적 환경관리 필요

- 지역의 개발에 따른 환경 전 분야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중점관리대상 하천 및 호소의 관리 강화

- 수질악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충남 서북부권 하천 및 대형담수호의 관리 및 복원방안 마련

■ 미래지향적 유역중심 물통합관리체계 정착 및 확대

- 유역관리의 대표적 제도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과 충남 4대수계 물통합관리체계의 정착 및 확대 필요

■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방안 마련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라 충남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및 적응방안 마련이 필요

■ 생태네트워크의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태계복원

- 광역생태네트워크 단절지역을 복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증대 및 생태계 복원방안 마련

■ 철새, 갯벌, 사구 3대 생태자원 특별관리

- 충남의 특징적 생태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서식지 보전 등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자원으로 한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환경교육 및 인재양성 활성화

- 환경교육 기반강화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도민실천을 유도

2 비전과 전략

가. 비전과 목표

“기후변화 대응, 자연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충남”

- 충남의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을 지역발전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연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충남 실현

구 분		내 용
비 전		기후변화 대응, 자연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충남
	목표1	기후변화 대응,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
	목표2	맑고 깨끗한 통합적 물관리
	목표3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 목표1 : 기후변화 대응,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

- 충남의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
-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및 인재양성 활성화

■ 목표2 : 맑고 깨끗한 통합적 물관리

-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도민참여형 소하천 관리
- 물 통합관리 기반 구축 및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 및 정착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물관리 체계 정착
-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자연순환형 대체·보조수 자원 개발을 통한 수자원 확보

■ 목표3 :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생물서식공간(Biotope)을 보전 및 복원하고, 특징적인 생태자원 특별관리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산림, 하천, 공원·녹지, 가로수, 연안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나. 전략

■ 전략1 :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

-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기후변화 시범도시 육성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

■ 전략2 : 환경교육 종합대책 수립

- 충남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교육전문기관, 센터 지정, 인력양성,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하여 충남의 환경교육 기반 강화

■ 전략3 : 생태가치 실천 인적자원 양성 및 환경행정 선진화

- 도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재양성을 활성화하고 환경민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환경행정의 선진화 추진

■ 전략4 : 지역하천 생태계 복원

-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도랑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소하천의 수질 및 생태기능 회복

■ 전략5 : 자원순환형 물관리 추진

- 생활하수를 이용한 도시재생 및 효율적인 충남형 빗물관리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자원순환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

■ 전략6 : 유역중심의 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 충남 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유역중심의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전략7 : 충남 광역생태축 보전 및 복원

- 충남의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생물다양성 확보방안 마련

■ 전략8 : 도립공원의 환경친화적 개발·관리

- 도립공원의 자연친화적, 합리적인 개발관리를 통하여 도립공원 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거주민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 보호

■ 전략9 : 생물 종다양성 증진

- 생물자원 DB화 및 관리·복원방안 마련, 생물감소 방지를 위한 농약 줄이기 사업, 생태제어시스템 복원, 3대 생태자원 특별관리 등을 통하여 충남의 생물 종다양성 증진 추진

3. 전략별 정책과제

구분	내용
비전	기후변화 대응, 자연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충남
목표1	기후변화 대응,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
전략1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
정책과제1	충남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정책과제2	충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정책과제3	기후변화 시범도시 육성 및 녹색실천운동
전략2	환경교육 종합대책 수립
정책과제4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 제정
정책과제5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전략3	생태가치 실천 인적자원 양성 및 환경행정 선진화
정책과제6	녹색인재양성 청년 취업 프로젝트
정책과제7	충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정책과제8	환경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목표2	맑고 깨끗한 통합적 물관리
전략4	지역하천 생태계 복원
정책과제7	먹감던 도랑, 송사리 잡던 도랑살리기 프로젝트
정책과제10	마을 도랑가꾸기 박람회 및 콘테스트
전략5	자원순환형 물관리 추진
정책과제11	생활하수를 이용한 도시재생
정책과제12	효율적인 충남형 빗물관리 방안 마련
전략6	유역중심의 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책과제13	4대수계 물관리 통합체계 구축
정책과제14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안정적 추진
목표3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전략7	충남 광역생태축 보전 및 복원
정책과제15	생태(비오톱)지도 작성 및 활용
정책과제16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복원지점 선정 및 복원
정책과제17	생태네트워크 기반 생태관광 등 사업 발굴
전략8	도립공원의 환경친화적 개발·관리
정책과제18	도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정책과제19	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전략9	생물 종다양성 증진
정책과제20	생물자원 DB화 및 관리·복원방안 마련
정책과제21	생태제어시스템 복원
정책과제22	생물 감소 방지를 위한 농약 줄이기 사업
정책과제23	철새, 갯벌, 사구 3대 생태자원 특별관리

①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

■ 기본방향

-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기후변화 시범도시 육성 등 충남의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통하여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충남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 － 충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 전망, 기후변화 대응 부문별 감축 목표 설정, 기후변화 위험 평가체계 구축, 화력발전소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이행관리 등을 토대로 한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 충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 －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농업 등 부문별 적응 대책 및 관련 조직 정비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 기후변화 시범도시 육성 및 녹색 실천운동
 - － 기후변화의 시범도시를 지원·육성하고 배출권거래제 확대 운영(45개소) 및 탄소포인트제 시행(16개 시·군) 등 도민참여 녹색 실천운동 전개

② 환경교육 종합대책 수립

■ 기본방향

- 환경교육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민실천을 유도하여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 제정
 - －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등을 포함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및 사회 등 환경교육

체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 우선 1개소를 시범 운영 후 수요에 맞춰 점차적으로 늘려 2~3개소 운영 실시

③ 생태가치 실천 인적자원 양성 및 환경행정 선진화

■ 기본방향

- 도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녹색인재양성을 활성화하고 환경민원 센터,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도민밀착형 환경행정 실현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녹색인재 양성 청년 취업 프로젝트
 - 생태환경 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녹색 환경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 후 지역 코디네이터, 생태가이드 등의 청년 일자리 창출
 - 교육프로그램 : 기후변화 대응 인재양성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프로그램, 첨단 융 복합 녹색기술 인재양성프로그램, 녹색건축 인재양성프로그램, 친환경녹색제품산업 인재양성프로그램, 녹색생태관광산업 인재양성프로그램, 녹색생활실천 시민교육프로그램
- 충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도민과의 소통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도정 지표에 발맞추어 충남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과 난개발과 반생태적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행정적, 제도적 검토 선행)하고 조직 구성방안과 조례안, 운영안 마련
- 환경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민선 5기 충남 도정의 기조인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도민과 밀착한 환경민원 시스템인 '찾아가는 환경앰블런스' 제도(환경민원 콜센터)를 도입(충남도청과 4대 권역별 중심 거점지역에 시범 운영)
 - 환경앰블런스제는 환경민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Eco-Doctor'를 위촉하고,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 환경앰블런스팀에는 공무원과 함께 지역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인을 포함시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 제고

④ 지역하천 생태계 복원

■ 기본방향

-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떡감던 도랑, 송사리 잡던 도랑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도민참여형 소하천 관리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떡감던 도랑, 송사리 잡던 도랑살리기 프로젝트
 - 충청남도, 16개 시·군, 도랑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등 T/F를 구성하고 각각의 단위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주체를 설정하되, 관리·감독은 관련 시·군에서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
 - 충남 서북부권 8개 시·군(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보령)을 대상으로 1차년도 도랑 실태조사 및 시범복원을 실시하고, 추가로 금강수계 위치 8개 시·군(금산, 연기, 공주, 부여, 계룡, 논산, 청양, 서천)을 대상으로 2차년도 도랑 실태조사 및 시범복원을 실시한 후 사후관리 추진
- 마을 도랑가꾸기 박람회 및 컨테스트
 - 마을 도랑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복원된 도랑의 박람회 및 컨테스트를 실시하여 참여 활성화

⑤ 자원순환형 물관리 추진

■ 기본방향

-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생활하수를 이용한 도시재생 및 효율적인 충남형 빗물관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자원순환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생활하수를 이용한 도시재생
 - 충남 시·군 지역 공동주택단지에서 물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생활하수를 재이용하여 공동주택단지 환경 개선 및 상가 지역을 활성화
 -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공주 등 도심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내 생활하수 재이용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 및 물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범운영 실시
- 효율적인 충남형 빗물관리 방안 마련
 - 특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빗물관리방안 의무화 및 설치대상 확대, 인센티브제 도입 등 각종 계획단계에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충남지역 맞춤형 조례를 개정하고 빗물관리 담당부서를 지정
 - 빗물을 비상용수로 이용하는 방안,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로 확보·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체수자원으로 개발하고 빗물의 유용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

⑥ 유역중심의 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 기본방향

- 충남 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유역중심의 건강한 물 관리체계 마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4대수계 물관리 통합체계 구축
 - 물 통합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관련 제도(조례, 규정)를 마련하고, 물관리 정책 발굴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충남 물 포럼’ 창립 및 운영(3개 분과, 50명)
 - 물 통합관리정보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D/B구축 및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4대수계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 실시

-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안정적 추진
 - － 매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할당부하량 등 삭감시설을 모니터링하고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추진

7] 충남 광역생태축 보전 및 복원

■ 기본방향

- 도시내 존재하는 인위적 토지이용과 자연적 요소(동물 및 식생)를 고려하여 친환경적 토대위에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 16개 시·군의 생태기반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생태(비오톱)지도 작성 및 활용
 - － 충남 16개 시·군 생태지도 작성을 토대로 비오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여 공간환경 기반 친환경적 개발의 토대 마련
 - － 시·군별 중요 비오톱을 지정하여 복원하고 향후 DB 관리·운영 및 갱신을 토대로 대민 서비스 제공(홈페이지 연동 프로그램 개발)
 - － 쌍방향 참여형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 내가 만드는 비오톱
-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복원지점 선정 및 복원
 - － 충남 생태지도 기반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단절구역을 토대로 광역생태축 내 복원지점 선정 및 복원방안 마련(서식지 관리 및 복원, 생물이동통로 조성 등)
- 생태네트워크 기반 생태관광 등 사업발굴
 - － 광역생태네트워크 기반 자연자원 활용을 통한 생태 관련 사업(생태관광 등)을 발굴하여 부가가치 창출

⑧ 도립공원의 환경친화적 개발·관리

■ 기본방향

- 도립공원의 자연친화적, 합리적인 개발관리를 통하여 도립공원 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거주민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 보호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도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 － 도립공원 3개소(덕산, 칠갑산, 대둔산)를 대상으로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
- 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⑨ 생물 종다양성 증진

■ 기본방향

- 생물자원 DB화 및 관리·복원방안 마련, 생물감소 방지를 위한 농약 줄이기 사업, 생태제어시스템 복원, 3대 생태자원 특별관리 등을 통하여 충남의 생물 종다양성 증진을 추진하고 충남 자연자원의 질적, 물적 확보

■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

- 생물자원 DB화 및 관리·복원방안 마련
 - － 생물자원 조사 및 주요 지점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물자원을 DB화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서식지 관리 및 복원 방안 마련
 - － 특정 자원에 대한 가치발굴과 부가가치(생태관광 자원화, 신물질개발 및 추출 등) 창출을 위한 컨설팅 제도 마련
- 생태제어시스템 복원
 - － 박쥐, 거미 등과 같은 천적 복원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교란으로 급증한 해충을 억제하고 생태계 및 환경에 위협이 적은 미생물농약 기술 개발 및 사용 지원책 마련

- 생물감소 방지를 위한 농약줄이기 사업
 - － 농약 사용 자제를 위한 홍보 및 유기농업 육성책 마련
- 철새, 갯벌, 사구 3대 생태자원 특별관리
 - － 금강하구둑, 천수만 등 철새도래지, 서해안 갯벌 집중지, 신두리 사구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특별 관리방안 마련

4. 정책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
기후변화 대응,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충남	○ 이산화탄소 감축	(tCO ₂)	102,270	99,202,	96,134,	93,066,	89,997,	77,725,
			,445	331	217	103	989	533
	○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개소)	27	18/45	5/50	5/55	5/60	30/90
	○ 환경교육리더(지도자)양성	(명)	417	583	2,000	4,000	3,000	10,000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개소)	—	1/1	1/2	1/3	—/3	1/4
	○ 환경민원센터			1/1	1/2	1/3	1/4	—/4
맑고 깨끗한 통합적 물관리	○ 도랑 시범 복원	(개소)	—	8	8/16	16/32	—/32	32/64
	○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사.군)	8	8	8	8	8	8
	○ 4개수계 수질모니터링	(개소)	117	117	117	117	117	130
	○ 상수도 보급률	(%)	80.2	83.0	87.0	90.0	92.0	94.0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 생태지도 작성	(사.군)	8/8	8/16				16/16
	○ 생태네트워크 구축	(식)			1			
	○ 생태네트워크 복원	(지점)	—	—	—	5/5	5/10	30/40

제5장 계획의 실현방안

재원확보 방안

창의적 도정운영과 리더십

1. 재원확보방안

① 충남재정의 현황

가. 재정규모

■ 현황

- 2010년 시군을 포함한 충남의 당초예산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10조 6,199억원으로 전년대비 2.6%증가
 - 일반회계 82.6%, 특별회계 17.4%
 - 본청비중 36.9%, 시군비중 63.1%
- 2009년 총 재정규모는 전국의 광역도 평균보다 1조 3,823억원 적음
- 2010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164만원으로 전국 광역도 평균보다 20만원 정도 높은 수준임

■ 추이

- 2005-2009년 동안 충남의 재정규모는 연평균 11.2% 증가하여 전국의 광역도 평균 11.0%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음

나. 세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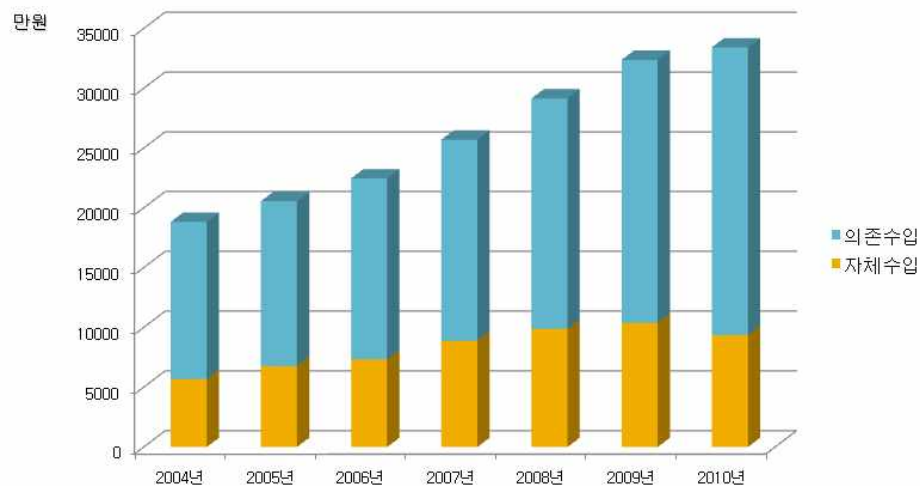
■ 세입재원별 구조

- 2010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은 3조 3,427억원으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은 28.0%, 의존재원비중은 72.0%임
- 2009년 결산공시 기준 살림살이(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자체재원 비중은 24.7%로 전국 광역도평균 38.1%에 비해 매우 낮음
- 2010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46만원으로 전국 도 평균 51만원보다 작음

- 2005-2009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2.1% 증가
- 2001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38만 5천원으로 전국 도 평균보다 6만 7천원이 낮음
- 전체 지방세에서 취득세+등록세의 비중은 2005년 76.3%에서 2009년 70.2%로 하락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31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468억원을 제외하면 363억원임
- 2010년 충남 세외수입액 1,516억원으로 전년대비 15.4% 감소
 - 2010년 충남의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7만 4천원으로 전국 도평균 5만 9천원을 상회하고 있음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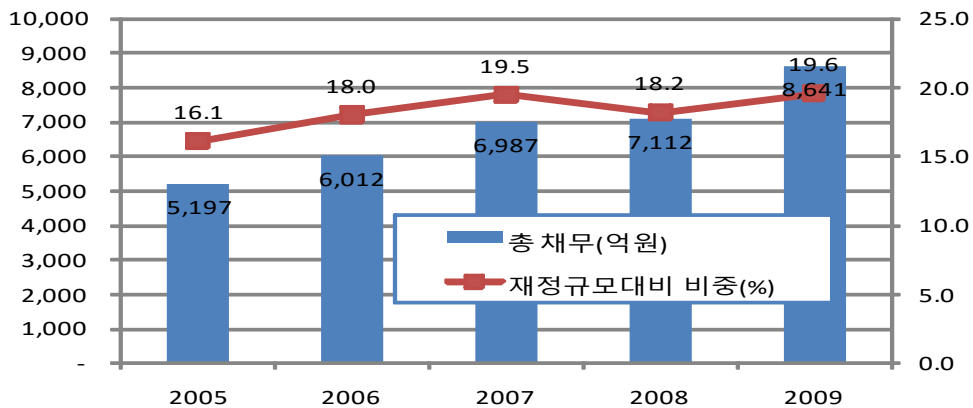
- 전체 재정규모는 증가하지만, 세입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의존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자립도의 지속적 하락
 - 2010년 충남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24.0%로 전국 도평균 31.6%에 비해 매우 낮고, 2007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그림 5-1-1] 충남의 자체수입/의존수입 추이

-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비중이 낮고, 세출의 재량성 미약
 -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재정자주도는 41.9%(전국 도평균 46.0%)

-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세 증가율이 2.1%에 불과
 - 지방세의 70%를 차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2005~2009년 중 연평균 1%미만의 저조한 증가
- 전국도 평균보다 높은 지방세 체납률과 2005년 이후 증가추세
 - 2009년 지방세 체납률은 8.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8.5%에 비해 높음
 - 2010년 7월 현재 누적 지방세 체납액은 831억원(2010년 363억원)
- 채무비중의 지속적 증가
 - 2009년 결산 기준 충남의 총채무는 총액기준 8,641억원(전체재정의 19.6%), 실질채무는 3,651억원
 - 충남의 재정규모 대비 총 채무비중은 2008년 18.2%에서 2009년 19.6%로 상승



[그림 5-1-2] 충남의 채무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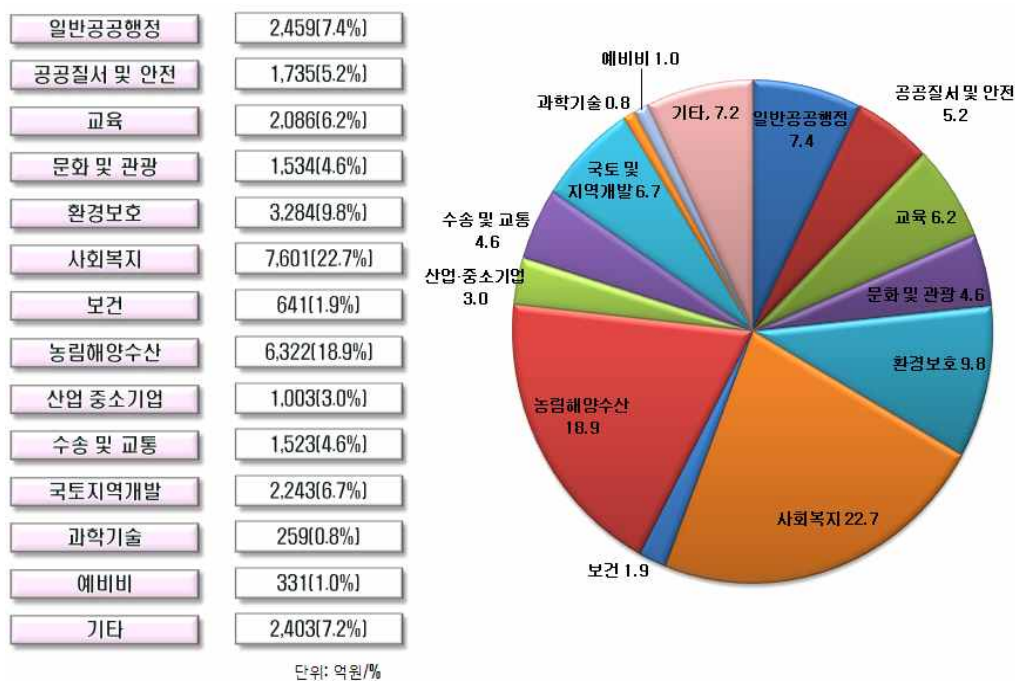
■ 세입구조의 과제

-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필요
-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
-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지방세 신세원 발굴 필요 :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등
- 지방소비세(도세) 및 지방소득세(시군세) 도입에 따른 과제
-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 필요
-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방지 필요
- 공공시설투자에 민간재원의 활용방안 필요 등

다. 세출구조

■ 현황

- 2010년 충남도 본청 기능별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22.7%, 농림해양수산 18.9%, 환경보호 9.8%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수송 및 교통, 교육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5-1-3] 충남도 본청 세출의 14대 분야별 구성(2010년 일반회계 기준)

- 품목별로 보면 자본지출 42.0%, 경상이전지출 39.4%로 전체 세출의 81.4% 차지
 -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이전 및 자본이전 지출액이 2조 2,509억원으로 전체세출의 67.3%를 차지하여 일반회계 대부분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본청 고유의 사업을 위한 예산의 거의 없음
 -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18.7%, 주민 1인당 인건비 8만 6,123원으로 전국 도평균 7만 4,004원보다 16.4%가 높음
- 성질별로 보면 정책사업비 비중이 88.8%로 전국 도평균 88.7%와 비슷함
 - 전체 세출대비 자체사업비 비중은 18.6%로 전국 도평균 30.6%에 비해 낮음
 - 보조사업비 비중이 70.2%도 전국 도평균 58.1%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문제점

- 사회개발비(사회복지 및 교육 등) 지출수요의 증가
 - 인구고령화 및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사회복지비 지출수요 급증
- 과다하게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지출로 본청 자체사업 채원부족
 - 기초자치단체 경상이전 및 자본이전 지출액은 전체 세출의 67.3%(2조 2,509억원)
- 충남 도민 1인당 인건비 과다 지출
 - 2010년 1인당 86,123원으로 전국 도평균 74,004원에 비해 16.4%가 높음
- 전체 세출대비 과다하게 낮은 자체사업비 비중
 - 전체 세출대비 자체사업비는 18.6%로 2008이후 감소, 전국의 도중에서 최하위
-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지출의 지속적 증가
 - 2010년 충남 일반회계 세출 중 민간이전지출액은 982억원, 전년대비 9.6% 증가

■ 세출구조의 과제

-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분에 대한 투자증대 필요
 - 농어촌지역이 광범위한 충남의 특성상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양극화의 진전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필요
- 시군 재정의 전략적 활용 및 재정력을 반영한 기초자치단체 차등지원 필요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을 고려한 이전지출 차등화
- 주민 1인당 인건비 수준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구조조정 필요
 - 주민 1인당 인건비가 높은 원인을 조직진단을 통해 분석

②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및 확충방안

가.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 투자가용재원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활용가능한 투자재원으로서 경상적 세입총액에서 필수적인 세출경비를 제외한 투자재원을 의미함

■ 투자가용재원 산출 필요성

- 투자우선순위의 설정과 전략적 재원배분
- 신규투자사업의 실효성 확보

<표 5-1-1> 새로운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

세입 합계 (Ⅰ)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필수적 세출경비 (Ⅱ)	법정·의무적 경비	인건비, 지방채상환, 예비비중 기타, 법정 의무적 보조사업
	기타 필수적 경비	경상적 경비, 계속사업비, 선택적 보조사업
투자가용 재원(Ⅲ)	투자가용재원(Ⅰ - Ⅱ) 규모 및 세입 대비 비율	
	재량적 사업예산 절감액(α)	
	신규투자가용재원(Ⅲ+α)	

■ 충남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 2010년 당초예산 기준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총계 3조 3,427억원에서 필수적 세출 경비 3조 737억원을 제외한 2,691억원으로 경상적 세입총계에서 약 8%를 차지
- 2010년 10월 현재 2011년 투자가용재원으로 3조 5,524억원의 8.2%에 해당하는 2,919억원으로 추계
 - 2,919억원중 계속성 사업 등 경직성 경비 2,103억원을 제외한 816억원을 순수 가용재원으로 추계

<표 5-1-2> 충남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세입합계 (Ⅰ)	소 계		32,080(100)	33,427(100)
	자체재원	지방세	8,604(26.8)	7,850(23.5)
		세외수입	1,792(4.7)	1,516(4.5)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4,802(15.0)	5,651(16.9)
		국고보조금	16,882(52.6)	18,410(55.1)
필수적 세출경비 (Ⅱ)	소 계		28,846	30,700
	법정·의무적 경비	인건비	1,684	1,810
		지방채상환	166	286
		예비비 중 기타		
		보조사업비	21,508	23,468
	기타 필수적 경비	경상적 경비	4,892	4,543
		계속사업비	596	629
		재량적 보조사업	—	—
투자가용재원(Ⅰ - Ⅱ) 규모 및 세입 대비 비중			3,234 (10.08%)	2,691 (8.05%)

주: 2009년은 정수액 기준, 2010년은 당초본예산 기준

나. 투자가용재원의 확충

■ 민선5기 충남예산운영의 기본방향

- 민선5기 재정운영 방향
 - 재정건전성 기반확보와 민선 5기 전략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 재정투자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 토건중심의 지역개발사업보다 복지·교육·문화 등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중시
 - 성과예산제 및 투자사업의 사전심사제도 등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도모
 - 도의 기능 재정립과 민간 및 시군 재원의 전략적 활용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소통과 신뢰의 민관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재정건전성 확보와 신규전략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
 - 순세계 잉여금의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 모든 재량지출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일률적 10%감액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구조조정 추진 (사업별 감액을 차등적용 가능)
 - 성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
 -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정비를 지속 추진
 - 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증가를 억제
 - 기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선5기 충남 도정의 신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 성과예산제도 등 재정성과관리제도 활용을 통한 재정효율성 향상
- 도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 등 민간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 도의 기능 및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의 재조정
- 시군 재정의 전략적 활용

■ 투자가용재원 확충의 제약요인과 가능성

- 전반적 재정여건
 - 세입은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 개선과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도세의 일부증가가 예상되나 정부의 취·등록세 감면 정책연장 등 세부 기반약화로 증가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
 - 세출은 민선5기 출범 공약사업 이행,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국고보조사업 증가, 노인·장애인·보육 등 복지수요 증가 등에 의한 재정수요 증가 전망
 - 결국, 전체적으로 세입 증가율 둔화, 재정수요 급증으로 수지불균형 초래 예상
- 극히 제한적인 세입 확충여지
 - 세입의 70% 이상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존
- 세출 측면에서도 가용재원 확충 여지 제약
 - 국고보조사업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80%차지하여 지자체가 사업내용 및 규

모 조정하여 투자가용재원 확보하는데 한계

- 투자가용재원 확충 가능성과 필요성
 - 기존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재검토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신규전략사업에 투자할 신규투자가용재원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요구
- 투자가용재원의 확충 기본 전략
 - 세출부문의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한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 투자우선순위의 재검토에 기초한 세출구조 조정에 중점

■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확충방안

- 기본방향
 - 자체재원의 확충 : 중앙정부 의존재원 확충, 민간자금 적극 활용
 - 지방세 수익확충 : 국세 세원이양, 과세주주권 강화 위한 세제개편
- 지방세 확충방향
 - 지방세 체납 개선
 - 신세원 발굴
- 세외수입 확충방안
 - 사용료와 수수료요금의 효율 현실화, 요금체계 개선
 - 세외수입 체납 관리체계 개선
 - 입장료수입 및 사업수입 확충
 - 공유재산 활용 임대수입, 이자수입 증대 등
- 공공투자사업에 민간자금 적극 활용
 - 복지, 교육, 문화사업에 민간자금 유치확대
 -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민간자금 유치, 민간위탁
 - 민간투자 및 참여에 대한 적절 인센티브 부여, 민관협력체제 구축

■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 기본방향
 - 필수적 경비(경상경비 등) 억제 및 절감, 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 통한 세출구조조정에 의한 사업비 절감
- 경상경비 절감
 - 인력운영비 : 조직 구조조정 및 신규증원 최소화, 정원대비 현원 결원을 일정비

을 유지

- 기본경비 : 해외 및 국내여비 절감, 시정간행물 및 유사홍보물 통폐합, 사이버 홍보활성화, 에너지 절약 및 사무용품, 우편요금 절약, 관용차량 차량유지비 절감

○ 사업비 절감

- 예산편성 : 계약심사기법 적용, 제도개선 및 연구용역 최소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공기단축 위한 집중투자 통한 실질 총사업비 절감,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사업비 관리제도 통한 세출구조조정, 민간위탁사업 확대 및 민간참여활성화 유도
- 예산배정 : 사업물량 재조사 등을 통한 배정유보 및 감배정
- 계약 : 계약심사 전담부서 설치 통한 원가심사 강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적용, 유사사업 통합 발주, 계속비 계약제도 등 적용
- 사업집행 : 설계변경,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 등을 통한 절감,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목적외 사용금지, 옥외행사 최소화, 교육원 등 자체시설 활용 통한 행사경비 절감, 각종 지역축제 및 체육대회 등에 대한 민간보조금 절감, 조직내 전문인력 활용으로 설계비 및 연구개발비 절감
- 사후관리 : 사업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한 세출구조조정(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집행잔액 등의 임의적 활용 제한

○ 공공재정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 복지부분 통합관리망 확충, 부정 의료수급 관리 강화, 농업부문 시설 및 장비공동활용 위한 간접보조 방식 전화

○ 성과정보의 활용

- 성과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 적극 검토 반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여론조사 및 자체 심의기구 적극활용
-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연례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이월예상액을 포함하여 집행가능한 예산현액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

③ 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기초

■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구현

- 도민설문조사, 도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 도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참여방안 마련

■ 민선5기 정책수행을 위한 원활한 재정지원

- 맞춤형 복지, 환경, 행복교육, 농수산업혁신 등 정책수행을 위한 적극적 재정 뒷받침

■ 실·국·원장 책임재정 운용기반 구축

- 민간이전경비(민간단체 경상·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Top-down예산제 운영

■ 도자체 시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및 세출구조조정 지속

- 기존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축소
- 무분별한 행사·축제로 인한 낭비·선심성 예산지원 사전 방지
- 매칭펀드 사업 신청전 사전심사제 도입

■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중장기 채무관리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지방채 발행
- 연도별 채무상환계획 수립 및 순세계 잉여금 조기상환 활용 등 다양한 채무관리

2. 창의적 도정운영과 리더십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

■ 자치단체장의 역할

- 조직의 존재근거를 명확히 하는 역할
 - －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수립함으로써 해당 공동체의 결집
- 내부관리를 통해 지방정부 집행부의 효율적 관리
 - － 조직을 동기화하고 높은 사기로 주어진 임무수행 유도
- 외부관리를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지지 확보
 - － 지방의회, 주민, 언론, 시민단체 등과 수평적, 유기적 관계 통해 조직의 건전성 강화, 조직의 성과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지지확보

■ 자치단체장의 권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사무를 통할
 - －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사무의 실체적 집행권 보유
- 당해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대한 관리 및 집행권, 소속행정청, 관할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 보유
 -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관리 및 집행, 구성원 지휘·감독,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기관위임사무 처리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

■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 고속전철, 비행기 등의 운송수단 발달로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되는 지구촌 사회 형성
-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보흐름과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사회투명성을 제고

- 정부나 기업의 결점이나 하자를 은닉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움
- 사람, 물적 자원, 정보와 지식, 경제의 글로벌화는 더욱 가속화

■ 글로벌 경제와 도시화

- 세계적인 자본들이 경제적 이익을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현상 두드러짐
- 국민국가의 쇠퇴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가 진전됨
-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자본유입으로 경제적 기능 활성화
-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이라는 사회복지 기준이 지역생활의 최저보장으로 변화
- 200년 한국의 도시화율이 81.5%였으나 향후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지역주의와 지방분권

- 지역주의는 지역의 민주주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관점, 글로벌 시대 지역정부가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 등에서 지역주의가 지지
- 지역정부에 상당한 정치·행정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정부가 지역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지방분권 논의

■ 글로벌 가치의 다양화와 신문화

- 국제적 문화의 교환, 교류가 활성화로 국가간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각 국가마다 다문화사회의 특성 강화
- 노령화사회의 진전은 세대간의 가치조화를 요구
- 소통이 강조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사회권력구조 변화예상
-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갖는 나홀로 가정이 증가

■ 뉴거버넌스 시대의 비민주성 강화

- 새롭게 등장한 뉴거버넌스의 특징이 비민주성을 강화할 가능성 대두
- 초국가조직의 힘이 강해지고, 국제적 네트워크 가진 NGO, 다국적, 무국적 기업의 영향력 강화

- 지역수준의 거버넌스가 국민구가 기능을 약화시켜 자본, 노동, 생필품, 식수 등의 지역적 이슈가 글로벌 이슈가 될 것임
-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고 부힘이 우선시되는 거버넌스의 등장이 가시화

③ 리더십의 개념 및 유형

■ 리더십의 개념

-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개인의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 리더십의 유형

- 카리스마적 리더십
 - － 신뢰를 통하여 부하에게 자기희생과 위험감수,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
- 변혁적 리더십
 - － 부하들이 과업성과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하들이 조직이나 팀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도록 이끌어내며, 부하들의 욕구를 활성화

④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형 : 주민주도 거버넌스

-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간, 지역간 차이를 극복하고 남녀노소, 장애우 등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을 관리하며, 경제발전, 특히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부가 되어야 함
- 따라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주도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함
 - －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뉴거버넌스의 비민주성에 대응할 수 있음.
 - － 소통과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시민사회에서는 여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은 “가치창조적 리더십”이어야 함

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리더십 : 가치창조적 리더십

- 향후 전개될 시대의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이면서 정책과정의 핵심적 참여자임
- 따라서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은 “가치 창조적 리더십”이어야 함
- 다시 말해,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폰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가치와 모드를 제공하는 가치창조적 리더십이 요구됨
 -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소통과 대화, 타협에 의한 정치와 행정 수행

⑥ 창의적 도정 운영체계 구축 : 로컬거버넌스 구축

- 자치단체장은 자신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
-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자신이 보유한 정치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해결에 주력
- 유리한 자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불리한 자원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 즉,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로컬거버넌스(Loca Governance)체계를 구축해야 함